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下)

1996. 12.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1996년은 탈북자들의 속출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난 심화 등 통일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적지 않은 사건들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대량난민발생에 대비한 탈북자 수용시설 건립문제가 현안문제로 등장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각종 사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융합시킨 통일문화의 창달을 통해 통일한국의 밑거름을 지금부터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있게 다가왔던 한 해이기도 했다.

본 연구원에서는 종래 정치학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통일 및 북한 연구의 방향을 보다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통일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다. 1차년도에는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방향에 관한 이론적 기본틀을 제시하였고, 남북한의 문화이질화 및 문화교류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2차 년도인 '95년에도 북한의 실상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제 '96년에는 경제, 종교, 교육, 문화 등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연구시각을 확대시킴은 물론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회문화적 문제점들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실생활과 관

련된 통일문화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동포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될 여러 문제점들을 원활히 풀어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년도에 추진된 연구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권으로 나눠 발간된다. 상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종교,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연구과제가 수록되었다.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를 비롯하여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제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방향설정 연구”, “북한문학에 나타난 사회갈등 연구: 북한의 분단문학을 중심으로” 등 모두 네 편의 연구결과가 북한과 통일을 보다 세분화된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하권에서는 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여념이 없는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연구”와 조총련이라는 좌익조직이 일본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를 수록하여 북한사회가 통일에 적용해 나갈 과정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동독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연구”와 “남북통일의 도정: 공산정권의 협상전략 연구: 베트남 평화협상의 사례” 등 두 연구는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이 물고을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끝으로 여기에 수록된 연구결과들은 그 자체가 완결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기 보다 이를 기초로 더욱 심화된 연구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시하고 있음을 덧붙이고자 한다. 북한 및 통일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이미 훌륭한 연구성과를 배출하기 시작한 경제학계를 비롯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 분야 연구에 생소함을 겪어 왔던 사회, 문화, 교육 등 통일문화창달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에 의한 심도깊은 연구에 기초자료와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통일문화연구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더 없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바람이다. 활짝 열린 통일문화 연구의 장에 모쪼록 많은 분야의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996년 12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총 목 차>

< 상 권 >

-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박형중
-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 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임순희
-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방향설정 연구 김용호·홍용표
- 북한 문학에 나타난 사회갈등 연구:
북한의 분단문학을 중심으로 김재용

< 하 권 >

-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연구 조한범
-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배정호
-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동독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연구 신 울
- 남북통일의 도정: 공산정권의 협상전략 연구 조재현
- 베트남 평화협상의 사례

차 례(하권)

■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연구 조한범

제 I 장	서 론	3
제 II 장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인성	8
제 III 장	개혁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18
제 IV 장	소유권의 변화와 사유화	30
제 V 장	지하경제화	38
제 VI 장	개혁의 사회적 영향	44
제 VII 장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엘리트	53
제 VIII 장	결 론	65

■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배정호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제 I 장	서 론	71
제 II 장	종전직후 재일한인사회의 정치적·사상적 성향과 조총련의 결성	73
제 III 장	조총련의 주요활동과 발전	90
제 IV 장	조총련의 쇠퇴와 문화적 갈등	110
제 V 장	결 론	125

■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동독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연구

신 울

제 I 장	서 론	131
제 II 장	통일후 동독지역의 문화적 갈등	137
제 III 장	문화적 갈등의 정치문제화	154
제 IV 장	독일정부의 대응책과 문제점	167
제 V 장	결 론	172

■ 남북통일의 도정: 공산정권의 협상전략 연구
- 베트남 평화협상의 사례

조재현

제 I 장	서 언	177
제 II 장	협상의 전제	180
제 III 장	협상의 내용	189
제 IV 장	결 론	207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 연구

조한범*

- 제 I 장 서론
- 제 II 장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인성
- 제 III 장 개혁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제 IV 장 소유권의 변화와 사유화
- 제 V 장 지하경제화
- 제 VI 장 개혁의 사회적 영향
- 제 VII 장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엘리트
- 제 VIII 장 결론

*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 사회학 박사

빈 면

제 I 장 서 론

소련과 동구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는 체제전환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사회주의시기에 존재했던 특성에 기초한 이행기의 사회적 변화는 그 자체가 대규모의 '사회과학적인 임상실험'으로서 다양한 변화의 양태들을 보여준다. 사회에 있어서 변동이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동의 방향과 속도이다. 포스트사회주의 사회의 변동은 사회변동에 있어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에서의 변동의 특징은 의도된 전략에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과거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의 구성은 과거와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지배적인 영향력과 간섭하에 사회변동의 전략이 주도되고 있다.

구체제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격요법'식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던 러시아의 경우는 보다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보다 총체적인 사회변화과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는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현상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 러시아사회를 분석함으로써 개혁 개방기의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양태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사회에는 다양한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해명을 바탕으로한 이행기 사회주의사회의 이해는 이들 국가들의 진행에 대해서 올바른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행기 사회주의 사회의 이해에 있어서 다음의 차원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지닌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구체제의 특성과 그 결과이다.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은 구 사회주의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구 체제의 특성과 유산의 이해는 일차적인 요소이다. 포스트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은 서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구의 경우 경쟁과 혁신,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주의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점진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을 거친 노동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 기업은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발전했고, 경제행위에서 자주성과 시민권차원의 자유가 부재했다. 사회구조 역시 중앙집권화되었고, 위계적인 것이었다. 사적 소유가 금지되었음과 아울러 경제는 전적으로 국유화되어 있었다. 행정-명령 체계와 정치적인 요소의 과도한 억압은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무력감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특유한 인성형태를 잉태했다.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존형'(state -dependent)이라는 점으로 귀결되며, 이는 시장체제의 노동자들과 중요한 차

이들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구체제의 해체와 신질서의 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질서인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을 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과정에서 국가의존적 특성에서 수혜를 입던 층들의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개인들의 위험(risk)을 극소화시키며, 직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관계없이 균등한 임금정책을 보장해준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사무직노동자보다는 육체노동자에 유리하며, 서비스부분보다 중화학공업부분의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평범함과 복종이 예외적인 기술과 자질, 교육, 기업가적 능력, 혁신에 대한 동기화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존형 특성은 노멘클라투라(기생적인 소비)와 피지배계급(소비의 평등적 안정화)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저항과 혁신적인 동기화의 결여는 소련사회의 대표적인 특성이었다. 따라서 사회적인 수동성, 경제적 차별화에 대해서 무력하면서도 소련체제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했던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던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시장체제와 사유화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들 역시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행기 사회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이행기 전략의 특성인 급진적 이행과 점진적 이행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통제의 급속한 약화는 구체제의 특성인 독점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에 의한 조합주의적 통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의한 자원분배 체제의 통제는 독점화된 부분에 대한 자원의 특혜적 분배와 그렇지 못한 부분의 소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급진적 사유화는 구체제의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은 경제의 지하경제화와 범죄화라는 지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 자율적인 경제주체들의 형성을 목적으로 했던 사유화과정에 대한 구 지배세력들의 개입은 일반주민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제약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행기 사회주의국가들에 특징적인 사회적 측면이 나타난다. 이행기의 경제체제의 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침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약화와 실업을 야기하며, 범죄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러시아사회에 필연적인 새로운 사회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고유한 불평등구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소련사회는 자본주의사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계급격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계급구조의 속성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따라서 러시아사회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필연적인 새로운 사회적 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던 구 소련의 사회구조가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불평등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구 사회의 해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련사회의 해체와 시장체제로의 이행과정은 공정한 대중적 부의 재분배를 수반했다기보다는 구 체제의 기득권층이

특권을 사적 부분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따라서 개혁초기인 뼈레스뜨로이까 시기뿐만 아니라 91년의 쿠데타실패 이후에도 구 체제의 특권층인 노멘끌라뚜라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았다. 변한 것은 구체제의 기득권층들이 권력에 기반한 특권을 공식적인 사유재산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은 구체제의 엘리트와 이행기의 엘리트간의 상당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포스트 사회주의 사회의 이행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구 사회주의권국가들의 구조적인 특성은 국가마다 일정 정도 달랐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행전략에 따라서 사회변화의 양태가 일정 정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러시아를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러시아사회는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중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다. 또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특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전략으로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 불리는 급진적인 개혁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구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지배체제, 계급구조와 사회체제와 같은 구조적인 영향들이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의도했던 급진적 개혁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 러시아 사회의 경우 개혁으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구 체제의 요소들의 지속적인 영향이 동시

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사회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과 구 체제의 특성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적용하는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은 스탈린주의 공업화와 체제를 구축했던 북한사회의 향후 변화와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현상의 이해와 예측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며, 향후 남북한사회의 통합 과정에도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II장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인성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사회의 분석은 행정-명령체제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장기간의 사회주의경험은 자본주의와 다른 노동자와 기업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인성들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점은 포스트사회주의 이행기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주민들은 모든 삶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름하에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인 힘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놓여 있었다. 소유와 자원은 국가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인들의 권리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모든 경제적인 결정은 동시에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행정-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

가기구가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영역에서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자극을 배제하는 것이었고,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주의체제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소련경제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경제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주의의 마지막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진해 버렸다.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생산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원의 무절제한 이용과 함께 토양의 비옥도는 저하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생필품조차 공급받지 못할 정도의 생활수준과 노동에 대한 자극의 결핍은 사회주의 사회 전반에 걸친 물리적, 사회적인 하향화를 초래했다. 이 결과 소련 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고, 대안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경제가 남겨놓은 결과물들의 영향력은 의외로 강했고, 개혁의 효율성은 좀처럼 발휘되지 않았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험을 가진 사회가 전체적인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¹⁾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와 특성은 다르지만 공업화와 발

1) 조한범, “이행하는 사회주의”, 박길성의, 「현대사회」 (서울: 나남, 1996)

전이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전근대적인 질병들이 사라졌으며, 삶의 수준은 일정 정도 향상되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문맹이 사라졌고, 대학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GNP는 상승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들이 인간의 발전이라는 점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람들은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졌으며, '계획'은 개인들에게 법률이었고 위로부터 강제되었다. 정치적인 권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계획'으로 형상화된 국가의 요구는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했으며, 따라서 개인들은 배제되었다. 개인들의 발전은 이데올로기차원에서의 구호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발전이 보다 중요했다. 계획상의 모든 수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인간존재로서의 발전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이었다. '플뿌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었으며, 시민사회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으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전'했다.²⁾ 이와 같은 사실들은 포스트 사회주의의 주민들이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의 경험은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특성들을 결과시켰으며, 이는 자본주의경로를 거친 사회의 특성과는 상당부분 대치되는 것이었다.³⁾ 명령지향형 경제는 기업가정신이

2)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http://sun.nilb.ee/undp/nhdr/CH1.html>. pp. 2-3.

발휘될 가능성을 마비시켰으며 정치적인 독재는 대중들을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정신의 형성을 막았다. 결핍경제와 빈곤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특성이었다. 사회주의에 고유한 특성들의 형

- 3) Piotr Sztompka는 사회주의 사회에 형성된 고유한 특성을 문명적인 비적응력(civilizational incompetence)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문명적인 적응력(civilizational competence)과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발달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는 자본, 기술, 하부구조, 숙련노동력, 확고한 중산층, 효과적인 대 시민봉사 능력, 전문적인 정치엘리트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가시적인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덜 가시적인 문화적인 요소인 문명적인 적응력이 경제, 정치, 사회의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네 가지 영역에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참여에 필수요소인 기업가문화이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시민문화이다. 세 번째는 자유로운 지적 교류를 위한 담화문화이며, 이는 인내, 개방, 다양성과 분화의 용인, 회의론과 비판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진보된 도시적이고 기술지향적인 소비자사회의 일상적인 문화이며 간결성, 청결, 질서, 기능성, 건강지향, 기계장치들의 운용능력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경험은 이와 같은 요소들의 형성을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인 문명적인 비적응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5. Walder는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신 전통주의(communist neo-traditionalism)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전통사회의 특성(종속, 복종, 특수주의)들을 근대성(자율성, 계약, 보편주의)으로 대체해 나가지만 사회주의체제는 과거의 전통사회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전통주의적 특성들은 전통사회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 전통주의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Walder에 따르면 시장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주의에 특수한 고용관계와 기업,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조직들의 특성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구조적 속성들이 신 전통주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대성'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A.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1-27.

성에는 세 가지 주요한 기제가 작용했다. 첫째는 사회주의적 선전을 통한 직접적인 주입식 교육(direct indoctrination)이다. 이에 따라 원시적인 평등주의와 국가로부터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 노동계급에 의한 '지배적인 정치적 역할'이 요구되었고 정당화되었다. 둘째는 강압적인 국가기구들을 통한 전체주의적 통제이다. 전체주의적인 통제는 결과적으로 기회주의와 맹목적인 동조, 결정의 회피, 개인적인 책임의 회피 등을 야기시키며, 이와 같은 결과들은 국가의 가부장적 특성과 결부되어 사회주의 주민들에게 '연장된 발육부전(prolonged infantilism)' 증후군을 야기시켰다. 셋째는 주입식 교육과 전체주의적인 통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발전시킨 방어유형들이다. 이러한 방어유형들은 법률에 대한 무시, 규칙에 대한 제도적인 회피, 권위에 대한 불신, 전통에 대한 강조, 서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이 포함된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증가함과 아울러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유사한 효과들이 나타났다. 독재적인 규율에 저항하는 모반과 논쟁들이 사회의 상당부분을 기이한 문화적 환경으로 이끌어갔지만 이는 문명적 적용력의 형성에 기여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사회주의가 결과한 특성들을 강화시키고 말았다. '우리'와 '그들' 그리고 '동지'와 '적' 사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전투적인 분위기는 사회적 관용을 마비시켰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언명들은 독단주의를 배양했으며, 타협은 반역으로 취급되었다. 결국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대립구도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필요로 하지만 대개의 경우 카리스마적 지도력은 민주주의의 형성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⁴⁾

사회주의경제의 특성도 주민들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완전고용제도이다. 공산당의 강령과 사회주의의 헌법은 실업의 철폐와 완전고용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의도적이고 강요된 산업화과정의 부수효과라는 특성을 지녔다. 사회주의 체제는 급속한 성장을 달성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해야 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사회주의체제의 초기적인 특성은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외연적 방식을 채택하도록 만들었고,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형성 초기의 잉여노동력은 공업화과정에서 모두 국가부분으로 흡수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 완전고용이 완성되기까지는 동원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부분적인 노동력부족현상도 수반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노동력부족은 구조적인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급속히 성장하는 부분 특히 공업 부분은 숙련노동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잉여노동력은 대부분 비숙련노동이었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은 특별한 자질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숙련노동자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 경험있는 경영자들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둘째, 노동력 부족은 주로 도시에서 발생했던데 비해서 잉여노동력은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4)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p. 5-6.

수용할 기반시설이 필요했으나, 이와 같은 요구는 정책적으로 이차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었다. 셋째, 지역간의 불균형발전도 노동력부족의 원인이다. 특정지역은 급속히 발전하며 새로운 노동력을 요구하지만 잉여노동력은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노동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고용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비고용상태에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일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식적으로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대가족의 주부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잠정적인 실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의 혹은 타의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상 즉각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기초한다. 생산과 노동에 대한 재할당은 관료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강요되지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 따라서 노동력부족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만성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완전고용상태하에서 피고용 대상자들은 어렵지 않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쉽사리 충족되기 어렵게 된다.⁵⁾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완전고용과 만성적인 노동력부족 현상은 노동자들에게 상당부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특유한 인성형태를 잉태했다. 소련내부의 학자들에 의한 노보시비르스크시의 조사

5)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1991), pp. 211-216.

(1983)는 소련경제체제가 형성한 노동자들의 가장 현저한 결점은 양심, 근면성, 성실, 책임, 신뢰성, 노동에 적합한 기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위험(risk)의 계산 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련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존형'(state-dependent)이라는 점이며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의존형이라는 특성은 기술연마와 생산성보다는 노동기피를 하는 노동윤리와 노동행태,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노동에 대한 경멸, 자주성과 위험(risk)에 대한 무능력과 회피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항상 성취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보다 관심을 두며, 안전은 개인이 지니는 필요의 충족에 대한 전망보다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서 규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주도형 경제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보상은 국가주도형 노동자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직업이 유용하다는 점과 안전을 보장해주며 미리 고안된 계획에 따라서 선택된 몇몇 사회집단들에게 이익과 특권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보호자라는 것이다.⁶⁾ 따라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국가의 역할축소와 사회주의형 복지체제의 축소를 가져오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점들은 객관적인 경제행위들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경제사회학의 원리들을 확

6)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45-46.

인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위기는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소련체제의 몰락과 시장체제로의 이행이라는 환경은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의 몇 가지 적응형태를 만들어 낸다. 첫째, 사기업과 협동조합적 형태의 생산의 합법화를 바탕으로 사적 인 경제행위의 수행으로의 전환은 개혁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둘째, 제2경제형태의 적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분배체제의 특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재분배체제가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 위기관리에 대한 적응형태로서 생존경제로의 복귀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국면의 발생시 생존을 위해 가족과 친구관계에 의존하거나 전통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단들에 의존하는 것은 '강요된 전통주의'(forced traditionalism)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적응형태는 기존의 생활수준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구체제의 특성에 매달리는 것이다.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시장체제의 도입과정에서 이미 쓸모 없게 되거나 가치가 없지만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해주는 거대한 산업플랜트와 구체제의 제도에 집착한다.⁷⁾ 이와 같은 적응형태는 결국 구체제의 특성들이 이행기의 적응과정

7)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7-58.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형성된 독특한 특성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의 몰락직후 나타난 새로운 요소들은 사회주의시기의 유산을 은존시켰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문명적응력들의 형성을 제약했다. 이행기라는 특수성은 새로운 부정적 요소들을 추가시켰다. 첫째로 아노미 혹은 가치론적인 혼돈의 확산과 규범, 가치, 확고한 규칙, 삶의 정당한 방식들에 대한 방향감각 상실현상이 발생했다. 과거가 부정되지만 새로운 대체물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속에 내던져졌고 사회적인 고립속에서 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둘째로 새로운 부와 권력, 위신의 획득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등장은 '야만적인 경쟁'(brutal competition)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에서의 이익은 크지만 아직 '게임의 규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확고했던 내적 혹은 외적인 사회통제가 일시에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찰력과 사법제도는 해체되고 정당성을 상실했다. 법률들이 전체주의적 기원속에서 형성되었다는 비난들이 법률의 권위를 잠식했다. 마지막으로 서구화의 추구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가져왔다. 국경이 열리자 서구의 가치 있는 생산물들보다 포르노와 마약, 야만성과 소비주의, 조직범죄와 일탈적인 삶의 방식들을 포함하는 저질의 소비자 대중문화가 먼저 들어왔다.⁸⁾ 장기간의 사회주의가 결과한

8)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

특성들이 포스트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지배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이후 혼돈된 상황의 부수적인 결과들은 포스트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용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적용력'들을 온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III장 개혁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구체제의 해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체제의 특성에서 수혜를 입던 층들의 반발을 야기한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개인들의 위험(risk)을 극소화시키며, 직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관계없이 균등한 임금정책을 보장해준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사무직노동자보다는 육체노동자에 유리하며, 서비스부분보다 중화학공업부분의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평범함과 복종이 예외적인 기술과 자질, 교육, 기업가적 능력, 혁신에 대한 동기화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존형 특성은 사회주의체제의 특권계급이었던 노멘클라투라(기생적인 소비)와 피지배계급(소비의 평등적 안정화)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저항과 혁신적인 동기화의 결여는 소련사회의 모든 집단의 형태이며 개별적 행위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사회적인 수동성, 경제적 차별화에 대해서 무력하면서도 소련체제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했던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인해

서 혜택을 누리고 있던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시장체제와 사유화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들 역시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노동계급과 정권간의 타협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자였다. 완전고용과 노동재구조화 과정에서 단지 자신의 직업을 바꿀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노동자들은 기업지배인들로 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비숙련노동자들의 경쟁력 없는 기술과 능력에 비해서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인 위신이 낮거나 힘든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경우 이들은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는 경쟁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비숙련노동자들의 특성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교육받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교육에 기초해서 새로운 경쟁체제에 적응하기가 비교적 쉽게 된다. 그러나 폐쇄적인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소련사회에서 '노동귀족'에 해당했다. 높은 임금과 혜택, 보다 좋은 노동조직, 그리고 군수산업분야의 발전된 기술들은 고급노동력을 이 분야로 유인했다. 이들은 비밀경찰의 감시와 직업 이전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복종과 순응에 대한 물질적 심리적인 보상이 충분히 주어졌다. 시장체제의 등장은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들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특수한 고용조건이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들이 시장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요인이 되며, 이들은 강력하고 조직화된 반시장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⁹⁾

사회주의에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이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나는 것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구조적인 자극들이 존재한다. 명백한 강제와 이데올로기적인 자극이외에 사회복지제도는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도구였다. 소련과 동구처럼 사회복지체제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농업부분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산업,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제체제-연금, 의료복지, 주택, 식량보조 등-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체제의 차이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대한 반응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준다. 첫째, 사회복지체제는 개인들에 대한 강력한 동기화와 국유기업으로 부터 이탈시 발생하는 비용의 계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체제의 유지에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체제는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이 직접적인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은 매우 제한되게 된다. 셋째, 사회복지체제의 유지에 대한 비용의 상당부분이 국가의 보조(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의 보조가 삭감될 때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넷째, 국유기업 중심의 사회복지체제는 경제의 재구조화와 사유화를 방해하는데, 그 이유는

9)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49-55.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인 재정적인 전달체제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체제의 축소는 복합적인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다. 개혁의 시행자들은 사회복지체제의 수혜자들로의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반대세력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¹⁰⁾

시장체제로의 이행은 구 사회주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특징은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구성의 변화는 별다른 친화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국유 부문 노동자와 농민층, 그리고 다양한 구 지배세력과 관련하여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새로운 유산계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뼈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엘리트들과 지하경제부분은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에 적응했다. 반면 구국유산업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가치의 현실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로 인해 하층분화하고 있다. 개혁이후 러시아 사회의 계급, 계층분화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신흥유산계급인 상층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하층분화현상이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사회분화와 수입의 차별화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야기한다. 러시아의 1993년의 사회학적 조사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를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집단은 국가의존형 노동자의 대다수를 포함

10)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pp. 138-140.

하며 응답자의 50%를 상회한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며, 직업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낮은 임금도 감수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응답자의 1/3에 해당하며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보다 높은 임금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응답자의 10-15%로서 사적 소유와 기업가적 활동에서 오는 새로운 형태의 수입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가 구체제의 특성의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개혁의 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¹¹⁾

과거 경제외적 관계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묶여있던 국유산업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사회보장의 쇠퇴와 더불어 자체내에도 일정한 계층분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분화는 과거 인위적으로 평준화되어있던 노동가치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민영화기업의 배타적인 특성까지도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국유부분의 일반노동자들은 개혁이후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하층분해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은 이들에게 사기업을 개설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포스트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사기업가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유화과정의 비극적 결과중의 하나는 국유산업부분의 자질있는 계층에게 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들을 하층분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11)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 56.

과는 다르게 노멘클라투라와 지하경제부분은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강한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의 개혁과정은 사회계층으로서의 기업가층이 매우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있어서 임금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금융자산의 확대재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설립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러시아 신흥사기업들의 설립자본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여러 가지 조사들은 러시아의 신흥사기업가들이 주로 과거의 사회주의사회의 지배 계급에 해당하는 국가나 당기구의 특권계급(노멘클라투라)과 지하경제출신임을 보여주고있다. 노멘클라투라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를 이용하여, 그리고 지하경제출신들은 금지되어있던 매점 매석이나 재판매 그리고 기타 범죄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이들에 의해서 축적된 부는 개혁이후 사회, 경제적 혼란기에 신속하게 사기업설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멘클라투라와 지하경제출신 두 집단은 서로 독립된 범주라기 보다는 상호중첩되는 것이었다. 즉, 지하경제에 관련을 맺고 있는 특권층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사기업설립에 있어서 경제적인 변수이외에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행사 역시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은 일반화되었다. 또한 러시아사기업가의 형성에 있어서 현 지배세력과의 연관관계 및 영향력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세력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¹²⁾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기의 사회적 문제들의 발생은 시장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성되는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구조적인 침체가 나타났던 80년대 후반과 90년 초의 경우 시장체제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사회주의체제의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효율적인 시장체제의 도입이 자신들의 구조적 침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체제로의 이행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시장체제의 도입은 국가의존적 특성과 병립하기 힘들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주민들이 과거 누렸던 직업의 안정과 사회주의의 비효율적인 완전고용,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대한 사회복지체제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동시에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이 이제는 국가의 비 생산적인 보호막속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과 경쟁체제에 스스로 적응해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개혁과정의 진행에 따라서 구 체제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주의 주민들은 개혁초기와 다르게 점차 시장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반대로 개혁의 수혜자들은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했을때 사회주의의 주민들은 시장체제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의 문제점들 즉, 권위주의와 중앙집중화, 그리고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회주의의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한 조사는 러시아와 동구권국가들의 응답자중 1/4만이 사회주의적 시각

12)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변화와 사기업가형성의 경향성", 「현대산업사회연구」 (서울: 한양대출판부, 1995), pp. 108-114.

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만이 자신들의 국가를 발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지향했던 중요한 사회정책과 가치들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평등주의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 필요보다는 능력에 따른 분배체계에 대한 저항감이 사회주의 시기중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던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구축해 놓은 구조적인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정책이 실시되면서 경쟁에 기초한 사기업과 시장체제가 형성되고 이는 정부의 임금과 사회적 부에 대한 통제의 약화를 의미하며, 완전고용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하지만 오랜 시간 사회주의적 관습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이를 단기간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은 주민들의 의식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관계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포스트 사회주의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보장이며, 그 다음은 임금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포스트사회주의의 국가의 56-84%의 응답자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작지만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정부가 개인들의 수입에 제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회주의 시기중 행해졌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결핍경제에서 발생하는 저수준의 생활에 불평을 가지면서도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었던 사회

주의 체제의 평등주의적 특성에 익숙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시기중 자유롭거나,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보장과 안전은 유지할 수 있었다.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자유와 풍요의 가능성을 가져왔지만 반대로 경제적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주민들에게 국가는 최저생활과 임금에 대한 상한선 제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경제생활에 강력히 개입하는 국가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포스트 사회주의 주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들의 교육수준과 수입, 그리고 성(sex)이다.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이 낮고 여성인 경우 다른 사람들 보다 사회주의적 원리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정부의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사회에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폴란드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하층의 경우 58%가 사회주의 원리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상층의 경우 24%만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극화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 있어서 정부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끌어 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시장경제로의 개혁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반면,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대다수의 집단은 사회주의적 원리에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¹³⁾

13) D. Maison, Attitudes towards the marke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post-communist states, <http://ccat.sas.upenn.edu/slavrev>

체제변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민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사회주의시기 동안에 배양된 국가의존적 특성은 자율적 시장체제의 도입에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시킨다. 따라서 이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시장체제의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개입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시장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효율성의 제고에는 찬성하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분배문제의 해소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규제적인 시장체제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급속한 시장체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은 시장개혁 초기인 1990년 보다 1993년에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점진적이고 국가개입적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지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⁴⁾ 아래의 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켜주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조사로서 국가개입형 정부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이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summer95/mason.html.

14) А. Голов, Россияне—за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н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регулированием. *Известия*, No. 228 (Москва: Декабрь, 1993)

<표 1> 국민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정부의 형태¹⁵⁾

① 강한 국유부문을 가진 정부로서 국민들의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	39.4%
② 정부의 형태보다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도자	20.9%
③ 경제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시행하는 정부	15.4%
④ 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형태	12.6%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시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운동과 집단들의 반응을 야기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재편성은 자유-민주주의, 인민주의(populist), 우익 민족주의를 지형으로 발생한다.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와해과정에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주로 인민주의 특히 국가-인민주의(state-populism) 형태를 띠게 된다. 사회주의체제를 경과하면서 러시아의 인민주의는 특권적 지위를 향유했던 소련의 관료제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이해되었다. 관료제에 대한 반감은 사회정의와 관료적 특권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는 종종 시장경제와 사기업에 대한 반대와 결부되었다. 인민주의는 가격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장경제에서나 가능한 풍족한 소비생활을 요구한다. 러시아의 인민주의는 소련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소유를 지지하며, 사회정의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부장적

15) М.К. Горшкова, Россия в зеркале реформ, Москва, 1995, p. 26.

국가를 선호한다. 인민주의는 경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보다는 지식인과 부패한 관료에 대한 저항감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사회 정의에 대한 이해는 위계적인 권력과 특권, 그리고 국가주도형 사회분화체제의 정당화와 다르지 않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용과 사회적인 혜택의 축소를 가져오는 가격의 자유화와 사유화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노동조합들은 인민주의적 정서에 부흥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상당한 저항을 하게 된다. 인민주의는 공산당의 약화와 소련의 중앙권력의 해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한 개혁의 실행과정에서 좌파와 우익 민족주의의 반민주·반개혁 연대가 나타났고, 이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과정에서 인민주의적 정서가 증가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¹⁶⁾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급속한 시장체제로의 이행과 적응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장기간 사회주의적 특성을 배양시켜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들은 정책적인 개혁에 따라서 일시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사회주의가 배양한 특성들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장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장체제로의 이행은 제도의 변화와 제도속에서 기능하는 행위자의 변화라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행위자의 의식구조와 행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변화를 내

16)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8-59.

면화시키고 적응하는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한 것이며, 이 기간은 제도변화의 당위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 사회주의권의 시장체제로의 이행의 성공여부는 구 체제의 해체의 충격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체제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합리적인 해소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제Ⅳ장 소유권의 변화와 사유화

사회주의체제에서 지배적인 소유형태는 집단적인 소유이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관료적으로 통제되는 국유기업이다. 이와 같은 소유형태는 '전인민의 소유' 혹은 '전사회의 소유'라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국가소유권은 지역적인 조직 혹은 협동적인 소유형태(이 경우 지역적인 구성원과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소유자로 등장한다) 등의 여타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와 구별된다. 국영기업의 소유권은 몇 가지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소유권의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처분권을 가지며, 이는 국가예산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 예산은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서 운영되며, 따라서 처분권은 관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비인격적인 제도의 이면에는 권력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질적인 소유권행사의 주체가 된다. 국유기업은 교환이나 판매의 대상이 아니며, 임대되거나 파산하지도 않으며, 상속될 수도 없다. 재산권은 위계적인 관료제에 의해서 통

제되고 행사되며 사회의 모든 영역이 광범위한 관료제의 통제에 의해서 기능한다. 사회주의체제는 국가의 직접적인 소유 이외에 몇 가지 다른 소유형태를 만들어 낸다. 국가의 지역적인 조직들(연방내의 국가, 민족 혹은 지역 정부, 주, 시, 또는 읍의 위원회 등)은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 이들은 명목상 국가소유와 다를 뿐 기본적인 특성은 국유기업과 같다. 국가 혹은 지역정부에 의해서 재정이 뒷받침되는 기관들도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충당된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국가의 통제하에서 기능하지만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학, 병원, 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관료적인 국가소유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소유와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협동적 소유형태이다. 협동적 소유형태는 특히 농업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농업부분에서의 협동조합의 전형적인 형태는 생산협동조합과 판매협동조합이다. 명목상 협동조합의 조직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형태를 띤다. 생산수단은 집단적 혹은 협동적인 형태를 띠며,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 협동적 소유형태도 국가소유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 고용노동을 포함하는 사기업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형태의 소유가 몇 가지 존재한다. 소규모의 상품생산과 거래(동독, 헝가리, 폴란드에서 허용되었던), 협동농장의 개인적인 텃밭, 비공식 경제, 주거용 건물의 재임대,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지하경제와 밀수

등에 의한 상품의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⁷⁾

국유부분이 지배적이었던 소유권의 형태는 개혁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국유부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적부분의 성장을 추구하는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러시아의 경우 국유부분의 해체와 사유부분으로의 이전이 사유화의 핵심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유화의 담당자들을 형성하는 유예기간을 가지지 못했던 러시아의 사유화는 기존 소유권에 상당한 혼돈을 초래했다. 90년대 초부터 실시된 사유화과정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소유형태는 매우 모호한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사적인 지배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사유화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와 특성을 지닌다.

첫째,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공산당의 영향력과 지배가 실질적으로 사라지자, 공산당의 관리하에 놓여 있던 막대한 자산은 이해집단들에 의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 공산당의 재산을 장악하는 과정은 이전에 공산당의 재정을 담당하던 자들의 일련의 의심쩍은 사망에 의해서 다소간 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들은 새로운 경제 엘리트와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상업은행과 합작사업들을 포함하는 상업적 구조로 재빠르게 변신했다.

둘째, 사유화의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국가의 예산과 공공기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업의 체불임금해소를 위해서 연

17)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1991), pp. 71-86.

25%라는 매우 낮은 금리¹⁸⁾로 기업에게 대출해 준다. 이 돈은 해당 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업은행에 곧바로 예치되며, 이와 같은 상업은행의 금리는 1994년 초의 경우 연 250%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득은 기업과 은행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점유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과 상업은행에 유리한 경제정책의 시행은 상업은행에게 비합법적인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1993년과 1994년 러시아 상업은행들의 연이윤은 각각 6조 5천억 루블과 4조 4천억 루블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국가의 예산은 계획된 목표의 1/3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러시아중앙은행의 신용체계가 결국 기업과 경제효율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허용은 1992년 7월에 있었다. 그러나 주목해야하는 점은 이미 1987년부터 소규모 협동조합이 허용되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국유기업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국유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를 동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은 국가의 자원을 개인들의 사적소유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합법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었다. 국유기업과 영향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설립자들이었다. 국유기업은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시설과 토지 등을 초기 자본으로 투자했으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소수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장비와 설비들을 매매하거나 대여해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했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국유

18) 당시 러시아의 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연 25%의 금리는 파격적인 우대조치에 해당한다.

기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넷째, 대중적인 사유화(mass voucher program)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 졌다. 1994년 7월까지 모든 공업부문과 서비스산업의 70%가 사유화되었다. 이와 같은 양적인 사유화의 성공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유화된 기업의 절반가량이 이윤을 전혀 내지 못했으며, 러시아의 공업생산력의 50%가 감소했다. 또한 국가소유체제의 해체는 경제의 범죄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유재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가격으로 사유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석유회사들은 추정매정량의 배럴당 4센트에 팔렸는데, 북미의 경우 이 금액은 7.06달러였다. 투기적 성격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나누어진 바우처를 자신들의 수중으로 집중시켰다. 바우처 사유화가 시행되자 이를 노린 수백개의 투자회사들이 설립되어 대중들의 바우처를 자신들에게 집중시켰다. 이와 같은 투자회사들의 상당수가 범죄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들은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진 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다.¹⁹⁾ 이들에 의해

19) 바우처 사유화는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정도의 금액(1인당 만루블)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무상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서 해당금액만큼의 기업과 국유재산의 주식이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중적 방식의 사유화이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은 이 대중적 사유화 방식의 운명을 적시하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바우처 사유화가 사유화 조치의 핵심이었다.....그러나 러시아 사유화의 실체가 보여 주듯이 사유화위원회의 국가관리들 및 “MMM-invest(바우처를 이용한 투자회사중 대표적인 회사:필자주) 유형의 개별적 투자회사들만이 이 사유화 전표를 이득이 되게 처분할 수 있었다. 깔리닌그라드에서 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주민들은

서 적합한 자산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대규모의 기업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투기과정을 거친 기업들의 주식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재판매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대중적 사유화는 대규모의 투기적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경제의 범죄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반목하는 계급과 사회집단으로 해체시켰다. 사유화의 범죄적 성격은 러시아의 사회경제, 정치적 조건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채택한 급진적인 개혁과 사유화방식에도 기인한다. 급진적 사유화의 주요 논거는 점진적인 사유화의 경우 개혁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속한 사유화만이 시장경제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의 감소와 소비상품의 가격을 폭등시킨 개혁의 시행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들은 사회주의 시기동안 형성한 자신들의 저축을 일시에 상실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시장경제의 환경에 참여할 수 없었다. 거대자본의 상당수가 지하경제와 투기 뇌물, 국가재산의 절취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러시아 내 무부는 1993년 중반 4만개의 기업이 범죄적 구조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 70-80%가 범죄집단과 부패관료에게 상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경제 관여자들은 부패관료들과 연계하여 거대자

사유화 전표의 현실화로부터 어떤 약속된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중의식구조의 변화", 한양대 중소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주최 제7차 한러 학술회의 논문집, 1996, pp. 37-38.

본형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은 사유화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구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기초한 지배세력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유화과정을 이끌어간다는 점이며, 이는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이 사유화과정에서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시장경제로 이행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개혁정책의 상당부분이 사유화에 놓여져 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기업이 가지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업의 외부에 소유권자들을 형성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대중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기업 지배인세력들(‘산업가와 기업인 러시아 연합회’와 이들의 정치적인 파트너인 ‘시민연합’ 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미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하경제 부분과 마피아, 그리고 외국 자본가들에게 기업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며 기존의 기업 지배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과 지역사정을 잘 아는 개별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에게 기업을 사유화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지배인들은 이와 같은 점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정치적인 영향력행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으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구 노동조합도 이에 동조했다. 충격요법의 실시이후 나타난 ‘충격’의 사회적인 파장은 결국 엘

20) Svetlana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p. 56-61.

친이 이들의 주장을 일정정도 수용하게 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주식소유자들을 만들도록 되어있던 사유화의 1안(option 1)이 외에 해당기업의 지배인들과 노동자들에게 51%의 소유권을 허용하는 2안(option 2), 그리고 효과적인 경영이 인정될 경우 기업 지배인들이 해당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3안(option 3)이 등장했다. 실례로 1992년의 경우 사유화가 허용된 기업의 2/3에 해당하는 기업이 2안을 선택했다. 이러한 제도적인 수정이외에 특히 대기업의 지배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인 연결과 뇌물, 그리고 지역적인 영향력 등을 통해서 사유화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냈다. 따라서 기업체 외부에 소유자들을 형성시켜서 경영진에게 외부로부터의 위협(risk)을 자극요소로 사용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던 사유화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말았다. 오히려 51% 혹은 그 이상의 소유권을 획득한 기업 지배인들과 노동자들이 기업체 내부의 소유자로 형성되었다. 또한 소유권을 획득한 노동자들은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경영의 압박요소로 작용할 수 없었다.²¹⁾ 이는 구 사회주의가 만들어 놓은 기업의 지배인들이 사유화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잃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합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21) M. McFaul, "State power,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privatization in Russia", *World Politics*, Vol. 47, No 2, 1996, pp. 228-234.

제 V 장 지하경제화

지하경제는 그 형태가 다양하며, 사회의 체제가 지니는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범위와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매우 어렵다. 사회주의 지하경제는 자본주의세계의 관찰자들에게 제2경제(second economy), 저항-경제(counter-economy), 비공식경제(unofficial economy), 평행시장(parallel market), 사기업(private enterprise),²²⁾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회색경제(gray economy), 제4부문(fourth sector)²³⁾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다. 최근에 와서 세금포탈, 규제의 회피, 불법고용, 국가부분피고용자들의 제2직업에 의한 수입, 기타 금지행위 등이 추가된다.²⁴⁾ 지하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 양자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그 형태와 특성은 매우 달랐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지하경제는 주로 탈세와 밀수 등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와 제도의 회피를 통한 이득의 추구라는 성격을 가진다. 사회주의 사회의 지하경제는 사회주의 행정-명령형 계획경제의 특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결핍경제'(shortage economy)에

22) G.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1977, p. 25.

23) S.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 46.

24) S.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 46.

대한 적용형태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의 지하경제는 수요와 공급간의 항상적인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었다. 물자부족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핍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은 지하경제의 항상적인 기능화조건이었다. 사회주의경제에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계획생산 목표는 실제로는 달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요-공급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생산물의 가격도 수요-공급의 원리에 기초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메카니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또한 생산물의 유통도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위적인 가격과 실제 가치간의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공급자위주의 결핍경제체제에서 수요자들은 부족한 상품을 적시에 구매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사회에 일반적인 지하경제의 형태인 '스페콜라찌야'(매점매석)를 일상화시켰다. 공급보다 수요자가 많은 '부족상품'을 미리 사들인 다음에 실수요자들에게 국가고시가격보다 비싼값으로 파는 '스페콜라찌야'는 사회주의사회의 일상화된 지하경제의 영역이었다. 이와 같은 '스페콜라찌야'를 통한 거래규모는 공식통계로도 1958-1971년의 기간중 정부공시 최종 소비자가격의 19-27%에 해당했다.²⁵⁾ 그러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소규모의 거래행위들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이보다 상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지하경제는 공식경제가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의

25) Б. Н. Казанцев, "Частник" в сфере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 СОЦИС, Москва, No. 11, 1993, p. 56.

기능을 일정정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족상태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동자에서부터 관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회전부분이 관여되었던 사회주의의 지하경제는 80년대 이미 1000-2000억루블을 상회하는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⁶⁾

지하경제는 형식적으로는 비합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련사회의 지하경제에 대한 분석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스베콜라찌야'(매점매석, 재판매)이외에 비공식부분, 장부조작, 그리고 범죄성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⁷⁾ 비공식부분은 거의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공식통계에는 잡히지 않았고, 또 고의적으로 누락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농민들에 의한 생산물의 비공식적 판매이다. 개인주택의 건축과 수리, 제조품수리, 그리고 의복맞춤 등은 정부부분에는 아예 없거나 부족했던 부분으로, 비공식적 구조에 의해서만 충당되던 부분이다. 서류상의 허위보고나 작성을 통한 방법 역시 지하경제의 일부를 이룬다. 거의 모든 소련기업의 지도자들은 항상 생산원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상부로부터의 계획적 과업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수정, 기금유용, 보유생산원료의 은닉, 생산

26) А. В. Крылова, *Лабирантах теневой экономики*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осква, No. 12, 1992, pp. 48-49.

27) Т. Корягина,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Анализ оценка прогнозы*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No. 3, 1990.

품가격의 인상, 뇌물 등 다양한 형태의 편법이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은 공식적인 경제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장부조작을 수반했다. 모든 지하경제는 비합법적인 성격때문에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산의 횡령과 절취와 같은 경우는 탈법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은 자원분배와 배급부문의 전문화를 가져왔으며, 여기에 속한 관계자들은 자원분배와 배급과정에서 국가재산을 횡령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 탈법성이 노골화되지만 그 만큼 발생하는 이득도 큰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지하경제의 특징은 시장경제의 이행기에도 소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통제의 약화와 제도의 미비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행기의 교란된 사회제도와 국가통제의 약화는 경제의 지하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경우, 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지하경제행위는 자본주의 체제와 비교했을 때 더 큰 경향을 보인다.²⁸⁾

경제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주의시기에서 부터 관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경우 각종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은 그 자체가 막대한 이윤의 원천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는 자원분배와 인허가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00만 가량의 관료들이 있다. 이들은 기

28) R. Lotspeich, "Crim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4, 1995, p. 572.

업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막대한 뇌물을 챙길 수 있다. 70%이상의 관료가 뇌물을 받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이상 그리고 상업부문 기업의 75%이상이 뇌물에 대한 강요를 경험하거나 ‘연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중에서 30-50% 가량을 국가관료들에게 전달한다. 주택부문관료들은 노인이 홀로 살고 있는 집을 알려줌으로서 건당 500불을 받는다. 정부와 은행의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40%가량의 관계된 관료들과 영향력행사의 대가로 지불된다. 석유와 희귀금속의 수출허가를 내줄 경우 수십만 달러의 해외은행 예치금과 호화스러운 별장이 선물로 제공된다. 부패구조는 또한 중요 관직의 매직, 합작회사의 설립, 국유기업과 사기업의 연합, 그리고 사기업에 유리하도록 고안된 국가자원의 투자 등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행기의 지하경제화는 범죄집단의 개입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러시아에는 20만개이상의 범죄집단이 있으며, 5,500개는 매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중 1/7은 매수된 관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는 범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첼랴빈스크지역의 조사에 의하면 75%의 기업가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90%가 관료들에게 뇌물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65%의 사업가들이 금융과 회계부분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있으며, 55%는 여타 부분에, 32%는 경찰관계자들에게, 그리고 27%는 판사나 검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러시아의 범죄집단은 35,000-40,000개의 기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400개이상의 은행과 47개의 증권거래소를 포함하고 있다.²⁹⁾ 독점생산자, 부패관료, 그리고 범죄적인 요소들을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맏고 있다. 90년대 초의 몇 년간 석유, 가스, 핵물질, 목재, 금속에 대한 불법적인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된 뒤 세계시장가격으로 해외에 재판매되었다. 예를 들어 1992-1993년 사이에 석유의 20%와 금속의 1/3이 불법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유출되었으며, 이 과정은 범죄구조와 밀접한 연관에 진행되었다. 150억 내지 200억불에 이르는 러시아의 수출중 50%가량이 밀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상업은행들은 러시아의 범죄집단의 영향력하에 돈세탁의 주요 경로로 이용된다.³⁰⁾ 또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발생하는 일반대중들의 경제적인 곤란은 이들을 지하경제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1993년의 경우 17%의 노동자들이 월급이외의 수입³¹⁾을 올렸으며, 11-18%가 매점매석에 참여했다. 또한 13-22%는 자신들의 소유물을 팔아야만 했다. 이로부터 얻어진 수입은 임대기업 노동자 가족 수입의 76.9%에 달했으며, 사기업의 노동자수입의 88.9%에 해당

29) 대략 70-80%의 모든 러시아의 사업들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부패관료들이나 범죄집단들에게 보호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 61,500건의 경제범죄가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C. Ulrich, "The price of freedom," *Conflict studies*, No. 275, 1994, p. 4.

30) 사회주의 시기중 공산당의 엘리트들은 다양한 지하경제형태를 통해서 축적한 돈을 해외의 스위스은행 등에 예치했으며 이를 서방의 금융시장에서 전환하는 형태의 돈세탁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중 조직범죄의 증가와 아울러 돈세탁도 새로운 차원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C. Ulrich, "The price of freedom," *Conflict studies*, No. 275, 1994, p. 5.

31) 이에 관해서 한 조사는 1992년 기간중 자신의 정규적인 직업이외에 제 2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V. Kollontai,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the way out*, Macmillan, 1995, pp. 383-384.

했다. 이와 같은 과정 역시 뇌물과, 지하경제, 그리고 범죄적 요소의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러시아에서 매 4분마다 경제범죄가 일어나며, 14분마다 횡령사건, 19분마다 사유화에 관련된 범죄, 35분마다 사기사건, 그리고 매 1시간마다 해외무역에서의 탈법행위들이 발생한다.³²⁾ 이와 같은 점들은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경제적 혼란과 제도의 미비는 사회주의 시기에서 부터 기원을 가지고 있는 지하경제를 확산시키며, 경제의 범죄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VI장 개혁의 사회적 영향

1970년 이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환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성장형(growth-led transformation)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의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비국영 기업의 급속한 증가와 국유부문의 상대적 축소로 특징지어지는 개혁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성장형 개혁과정에서 사기업 혹은 준 사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점진적으로 국유기업을 능가할 것으로 믿어졌다. 두 번째는 후퇴형(recession-led transformation)으로 동유럽과 소련에서 시행되었던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며, 생산의 감소와 경기후퇴가 특징적으

32) Svetlana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p. 63-69.

로 나타난다. 성장형과 비교했을 때 국유기업의 급속하고 광범한 축소가 발생한다. 급진적인 개혁의 시행자들은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가격과 무역자유화이후의 성장추진력은 새롭게 민영화된 국유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³³⁾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구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구체제의 급속한 해체와 새로운 시장체제의 형성을 급진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러시아에서 시행된 충격요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는 전반적이고 급속한 가격자유화였다. 러시아는 1992년 전반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했다. 둘째, 화폐를 지하경제수준까지 절하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며 무역장벽을 제거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채택하며 국가의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며, 이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를 축소함으로써 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유기업 사유화실시의 공표를 통한 사회적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실시한다. 물론 실질적인 사유화의 실시와 제도의 완비는 즉각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big bang' 정책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³⁴⁾

33)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pp. 131-132.

34)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8, 1994, p. 277.

충격요법의 시행자들은 점진적인 이행으로는 복합적인 체제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이 형성될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사항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가 부족했다. 가격자유화는 초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고 이는 사회주의시기동안 주민들이 형성한 얼마간의 저축을 단 몇 주일 사이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³⁵⁾ 이는 이들의 저축이 초기적인 소상품생산과 교환관계에 참여할 경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의미했다. 기업들은 가격자유화에 따라서 생산효율을 높이고 생산을 늘리는 것보다 보다 손쉬운 가격인상에 매달렸다. 사유화는 과거의 생산관계에서 축적된 다양한 능력과 연줄관계를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수년간 구조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와해와 함께 궁핍화를 강요당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급진적인 개혁정책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급진적인 개혁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치인 가격자유화는 주민들의 실질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가의 계획속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되었던 생산물들의 가격은 가격자유화과정에서 급속하게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일부품목들은 단기간에 단순수치로 보았을 때 1,500-2,000배로 상승했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급여는 가격의 현실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인플

35) Н. Шмелев, Эко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No. 1, 1996, p. 24.

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 취했던 화폐량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국유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개월동안 체불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화폐수단을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시켰고 생활수준악화의 기본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와 재정안정화과정에서 80%이상의 주민들의 생활이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며 실질소득은 급속히 하락했다. 이 모든 상황은 대다수 러시아주민들의 상황이 주변부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⁶⁾ 1992년의 경우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20-50%가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었다. 가격상승과 함께 노동자들의 급료도 명목상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인 구매력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1992년의 경우 가격인상에 비해서 임금은 상승은 1/3에 그쳤고 1990-1993년 사이의 소비지출은 절반이하로 감소하였다. 임금이 주로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구매력은 1990년대의 초에 비해서 급속히 하락했다.³⁷⁾ 결과적으로 개혁초기인 1992년 1월과 1995년 3월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4,400-5,500배로 인상되었으나 평균임금은 1,200배 인상에 그쳤다.³⁸⁾ 따라서 이 기간중 형식

36)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시장경제의 도입과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양대 중소연구소-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제7차 한러 학술회의 논문집, 1996, pp. 38-39.

37) V. Kollontai,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the way out*, Macmillan, 1995, pp. 383-384.

38) 정상적인 시장경제체제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수치는 천문학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인플레이션의 상당부분은 사회주의 시기중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던 가격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적으로는 임금이 70-75%가 감소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³⁹⁾ 실질 임금의 감소는 생활수준의 악화와 직결된다. 1993년 러시아의 경우 수입의 절반이상을 식비로 지출하는 주민들이 80%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식품소비의 내용도 과거에 비해서 악화되었다. 1993년과 1989년을 비교했을 때 육류소비의 21%, 유제품소비의 34%, 그리고 과일소비의 32%가 감소했으며, 반대로 빵과 감자의 소비는 증가했다는 점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⁴⁰⁾

급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구 체제의 특성들을 거의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은 러시아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인위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노동력에 대한 가치평가를 비현실적인 차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노동력의 실제적인 시장가치와는 관계없이 임금과 사회적 대우는 비교적 평등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왜곡되어있던 노동력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장에 기초한 평가라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시기 중 과대평가되어있던 국유산업부분의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경쟁적인 상당수의 노동력들이 평가 절하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의 삭감정책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의 하락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며, 비효율적인 국유산업부분의 상당수가 새로운 경쟁체제에서 도태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포스트 사회주

39) Н. Шмелев, Эко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No. 1, 1996. p. 23.

40)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1993.

의 체제에 실업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실업의 첫번째 상황의 도래는 기업에서 비숙련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동자와 같은 비경쟁적인 부분들을 해고하면서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비해서 25-45세사이의 남성노동자들로 구성된 중심부분은 비교적 안정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업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심부분도 실업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1992년 폴란드의 경우 실업인구중의 90%가 4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과 젊은층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여성들은 새로운 사적부분에서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제한되어 있으며,⁴¹⁾ 따라서 전체실업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젊은층들의 경우 사적 경제부분과 지하경제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직업선택의 초기부터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의 문턱에 직면하게 된다. 폴란드의 경우 1993년 1월 새롭게 등록된 실업인구의 27%가 한번도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젊은층들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곧바로 실업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⁴²⁾

41) 구 소련체제에서 많은 여성들은 저숙련상태에서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련의 건축산업의 25%가 여성들의 육체노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N. Rimashevskaja, *Perestroika and status of women in the Soviet Union*, Shirin Rai et. al., *Women in the face of change*, Routledge, 1992, p. 13.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 여성들이 실업의 위협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2) J. Supinska,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공식적인 통계로 파악했을 때 1995년 1/4분기중 러시아에서 2백만(2.6%)의 완전실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직업을 구하고 있는 5백 60만(7.5%)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4백 2십만명(5.6%)이 더해져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업규모는 최소한 13%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외에도 궁극적으로는 폐쇄될 운명에 있는 생산시설들과 파산과정중이면서도 인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유산부분, 그리고 이와 같은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경제적인 생존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공업도시들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에 실업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2,500-3,000만명에 이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⁴³⁾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악화와 실업의 증가는 주민의 일탈과 주변부화를 촉진시킨다. 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에는 500-700만명의 알콜중독자, 250-500만의 마약중독자, 300만의 떠돌이, 250-400만의 난민 및 강요된 이주자들, 그리고 150-200만의 범죄층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995년 러시아에 1,500-2,000만명이 일탈적 행위자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부화와 일탈적 경향의 증가는 인구감소라는 러시아의 심각한 인구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의 이유는 출산율의 저하 및 사망율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후자가 1/3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특히 사망율증가의

Europe in crisis and the way out, Macmillan, 1995, pp. 373-374.

43) Н. Шмелев, Эко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No. 1, 1996, p. 25.

상당부분이 알코올중독, 살인,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사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사회의 해체현상의 극단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⁴⁵⁾ 이와 같은 상황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사회발전의 잠재력인 인적자원의 잠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1992년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하층으로의 이동을 강요받고 있는 가난한 계층의 현저한 증가로 귀결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은 구체제의 계층체계를 변화시킨다. 결과적으로 개혁의 과정 중에서 러시아의 주민들은 3-5%의 부유층,⁴⁶⁾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중간층(대략 월 1,000불의 소득자들), 그리고 두텁게 형성된 가난한 층으로 나뉘어진다. 가난한 층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소위 사회주의의 중간계급(군수, 중공업부분의 국유기업 노동자, 학술 예술분야의 종사자들)으로 불리던 집단들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대부분 국가부분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성장하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상승적인 임금체불로 인해서 이들의 임금은 비정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생활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들의 상황악화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것은 새로운 조건속에서는 과거의 사회주의가 규정해놓은 이들의

44)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중의식구조의 변화", 한양대 중소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주최 제7차 한러 학술회의 논문집, 1996, pp. 40-41.

45)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 국제기금 '개혁' 공동보고서,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상황과 새로운 접근법", 「중소연구」 여름호, 1994, p. 254.

46) 러시아에서 이들은 '노브이 루스끼(새로운 러시아인)'들로 통칭된다.

사회적 지위가 향후 전망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제도적인 노동으로 이들이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⁴⁷⁾ 중간층의 결여와 소수의 신흥부유층, 그리고 전반적인 하층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가난계층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개혁의 기간중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격차는 4:1에서 20:1로 현저하게 증가했다.⁴⁸⁾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화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이 갖는 과정상의 특성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유산자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하층으로의 이동 과정을 견고 있는데 비해서 국유재산의 분배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연줄을 가진 자들의 임의적인 사유화와 이들에 의한 부의 축적,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 기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이 합법적인 전환 등은 경제의 범죄적 요소의 증가와 아울러 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하층과 상층부와의 괴리는 사회적인 갈등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1993년 10월의 선거는 노동수입을 중심으로한 하층과 신흥유산계급인 상층이 서로 대립적인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가들의 경우 개혁노선의 정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도를 나타냈으나, 노동수입을 중심으로한 하층이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체적인 선거결과에서는 개혁비판세력인 보수정당들이

47)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중의식구조의 변화,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주최 제 7차 한러 학술회의, 1996, p. 40.

48) Н. Шмелев, Эко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No. 1, 1996, p. 29.

우위를 점했다.⁴⁹⁾ 개혁의 수혜계층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간의 괴리가 정치적인 태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기 러시아사회의 정치불안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제Ⅶ장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엘리트

개인들로부터 소유권을 분리시킨 사회주의의 행정-명령형의 계획경제체제는 이를 실현할 복잡한 관료제도를 필요로 했다. 사유재산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소비에트 사회주의사회의 구성원들은 형식적으로 사유재산과 국가권력의 공동의 소유자로 변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은 국가의 피고용인일 뿐이었고, 국가는 자신의 기초 위에 통제를 위해 비대한 국가관료층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소련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권계급이었다. 계획경제와 통제체제속의 관료체제는 소련사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치엘리트들은 이러한 체계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밀로반 질라스의 ‘새로운 계급’이나 보슬렌스키의 ‘노멘클라투라’⁵⁰⁾는 모두 이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사유재산에 기초한 부르조

49) Деловая жизнь, No. 13, 1993.

50)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노멘클라투라는 명칭(총체)이나 용어의 체계 혹은 상징의 추상적이고, 제한된 체계로서 대상의 의미를 지칭하기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이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직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으로서 소련사회의 특권계급을 의미했다. М. Восленский,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

아와는 그 기초가 달랐지만 이들은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상 사회주의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 엘리트들의 손에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다양한 특권을 향유했다. 결과적으로 이에 기초한 불평등이 사회주의 사회내에도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소련사회의 해체와 시장체제로의 급격한 이행과정은 '폴뿌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이 특권을 사적부분으로 전이시키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시켰다. 뼈레스트로이까의 시기 심지어 91년의 쿠데타실패 이후에도 노멘클라투라체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변한 것이 있다면 관료들이 권력을 사유재산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산당의 일당독재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을 때에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관료제도였으며, 정치엘리트들 역시 구성만 변화했을 뿐 이전의 노멘클라투라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⁵¹⁾

노멘클라투라의 성원들은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배세력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구소련사회의 장관, 공산당수뇌부, 대학의 고위관리자, 국영기업체의 장, 정부기관의 관료 등은 기업의 설립,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의 변화 그리고

a: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брь, 1991, pp, 12-14, 행정-명령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관료적 지위들은 이 직위를 임명에 관계되는 중요 인물들의 추천과 이에 대한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이와 같은 임명과정과 그 결과 형성되는 폐쇄적인 특권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51) B. Kagarlitsky, *Disintegration of monolith*, 김남섭 역, 「소련단일체제의 와해」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p. 50.

은행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스스로가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노멘클라투라들은 정부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사적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매우 급속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대략 1987-1988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상당수의 당과 콤포스물, 그리고 정부재산이 협동조합형태의 민영화 과정을 거쳤고, 이것들은 곧바로 소규모 사기업으로 다시 모양을 바꾸었다. 이 과정은 구 지역공산당위원회의 서기나 다른 다양한 권력엘리트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이후 자신들이 곧 소유주가 되었다.⁵²⁾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 기초한 노멘클라투라의 특권체제의 성격도 일정정도 변화했다. 정치적인 지위의 안정성이 약화하는 경향성이 생겨남과 아울러 특권의 중요성은 사유재산부분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대안체제 혹은 ‘폼소물 경제’(예고르 리가초프의 감독하에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폼소물경제는 1986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이 결정은 폼소물이 구성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센터들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센터들은 상업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고안되어있었으며 기업과 서비스공급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1987년에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이 조치들에 제1 대의원인 보리스 톨스티

52) О.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p. 77.

크의 감독하에 폼소몰의 관료들이 주요 구성원인 ‘청년의 과학적 기술적 창조성을 위한 센터들의 조정위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조직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었다. 1987년 말에 폼소몰의 관료들에게 ‘폼소몰경제’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잡았다. 1987년말까지 조정위원회는 대다수의 공화국과 지역들에 설치되었으며, 60개이상의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폼소몰경제의 초점은 ‘청년의 과학적 기술적 창조성을 위한 센터들의 조정위원회’ 맞추어져 있었고, 이는 또한 모스크바의 모든 지역의 당 위원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구 소련의 첫 번째 상업구조였으며, 많은 러시아 기업가들이 탄생하게 된 것도 이를 통해서였다. 컴퓨터 과학자인 콘스탄틴 바라보이는 폼소몰 경제에 참여한 이후 러시아의 지배적인 천연자원거래소를 설립했으며,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까지 만들었다. 이고르 사파리안은 폼소몰센터를 거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자신의 브로커회사를 설립했다. 모스크바 역사학부 대학원생이었던 콘스탄틴 자이틀린은 폼소몰 중앙위원회의 경제비서직을 위해 논문을 포기했으며 나중에 ‘새로운 러시아를 위한 기업가들’이라는 모임의 의장이 되었다. 멘델레예프 화학연구소의 폼소몰 비서직의 대의원을 마친 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는 메나텡은행의 회장이 되었다. 1988년에 이 새로운 센터들의 영역은 급속히 확장되어, 소비상품의 생산은 물론 외국의 회사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가질 수 있었으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자신들 스스로의 가격을 결정했고 관세혜택을 받았다. 1988년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사실상 폼소몰의 영역확장요구의 결과였으며, 이에 따라서 ‘새로운 청년센터’ 들은 행동영역을 급속히 확장했다. 따라서 이들

은 인플레이션의 유도와 법률위반 등으로 비난받았고 고르바초프가 품소몰의 이와 같은 행위들(middlemen activity)이 공산당에 이롭지 않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자신들 스스로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미 이들은 청년 상업은행, 수출입 센터, 패션상점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1990년까지 100만명이상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17,000개이상의 청년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다. 이전의 노멘클라투라들의 특권이 국가재산에 대한 사적인 이용권에 기초했다면, 새로운 특권은 다분히 ‘화폐적’ 특성을 가졌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활동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특혜를 가짐으로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⁵³⁾

“지대추구(rent-seeking)”⁵⁴⁾ 개념은 개혁, 개방기의 사회주의나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탈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해서 설명력을 지닌다. 지대추구는 시장경제의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추구(profit-seeking)”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독점적 지위나 정부보조의 획득 가능성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설명된다. 장기간의 사회주의체제는 일반 주민들을 소외시키며 사회주의형 기득권층(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엘리트)들에게 권력과 사회적인 자원에 대한

53) O. Kryshstanovskaya & S.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pp. 717-721.

54) 제도가 시장의 질서가 지배적인 상태로부터 직접적인 정치적 할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모호한 상태로 접근할수록 지대추구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J. A. Buchanan, et. al.,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p. 4. 따라서 국가통제의 약화와 지배집단의 비 제도적 간섭이 증가하는 이행기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지대추구형태가 증가하게 된다.

통제력을 집중시켜 놓았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는 구 기득권층들이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인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지대추구자로 전환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지대추구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는 매점매석(arbitrage), 수입보조금(import subsidies), 정부용자보조금(credit subsidies), 노멘클라투라 사유화(Nomenklatura privatization)이다. 매점매석은 지대추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결핍경제가 일반적인 특성이었던 사회주의체제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점매석의 특성이 거대화된 것은 원유, 가스, 그리고 금속 등의 가격이 국제가격의 1%미만에 해당했던 1991-1992년 러시아의 이행기였다. 러시아의 석유, 가스, 금속 등을 러시아국내가격으로 구입한 뒤 이를 국제시세로 되파는 거래규모는 1992년 러시아 GDP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수입보조는 또 다른 형태의 지대추구행위로서 1992년의 경우 필수식량의 수입자는 공식적인 거래율의 1%만을 지불했다. 대신 러시아 GDP의 15%이상이 수입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다. 공식적인 러시아 국내의 회계상에는 잡히지 않았으나, 서구의 신용판매에 의한 지불대금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불책임을 지고 있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보조는 또 다른 지대추구를 가능케 했다. 1992년 가격자유화이후 화폐가 부족했을 때 국영기업들은 국가와 중앙은행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고, 이를 성사시켰다. 1992년 9월에만 30%의 화폐량이 증가했다. 국영기업들은 1년에 2500%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에서도 연 10-25%의 이자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국영기업에 대한 융자보조는 1992년 러시아 GDP의 30%에 해당했다.⁵⁵⁾ 국가통제체제의 약

화과정에서 구 체제의 엘리트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제도에 대한 간섭과 이용을 통해서 막대한 부의 축적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노멘클라투라 사유화 역시 지대추구행위의 일종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형태가 불분명하고 주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석유나 가스부분의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그 자체가 막대한 지대의 취득이 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은 경쟁력있는 부분은 노멘클라투라 사유화에서 주요한 대상이 된다. 노멘클라투라가 이행기의 새로운 경제적 지배자로 등장한 것은 이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의 자산들을 실질적인 자신들의 수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⁵⁵⁾ 즉 노멘클라투라들이 이행

55) A. Aslund,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 2, Jan, 1996, pp. 13-15.

56) 러시아에서 노멘클라투라들은 1987년에 시작되어 대중적인 사유화가 실시될때 이미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이윤이 나는 부분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유화를 완성시켜 놓고 있었다. 도소매 유통, 은행 기타의 건실한 기업들이 노멘클라투라의 수중에 놓여졌다. 정부부서들은 회사로 바뀌었고, 장관은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이 회사들은 합작회사의 주식을 획득할 권리를 획득했으며, 주주는 관련분야에 관련했던 구 정부부서의 고위관리들이었다. 단일체제를 형성했던 은행은 개별적인 상업은행으로 쪼개졌다. 모스크바 질로스트은행은 모스비지니스은행으로 프롬스트로이은행은 프롬스트로이 상업은행으로 바뀌었다. 또한 새로운 상업은행들이 재정부서의 관료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생산수단의 할당을 책임지는 부분(Gosnab)과 소비품의 유통을 책임지는 정부부서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던 거래분야도 같은 방식으로 사유화되었다. Gosnab은 러시아의 첫 번째 교환시장의 설립에 기초가 되었다. '러시아상품', '천연자원거래소', '모스크바상품거래소'와 같은 주요한 거래소들이 쉘소물 관계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유통과 외국무역부의 고위관료들은 자신들이 관련된 상업조직들로 옮겨갔으며, 이전에 자신들이 관리했던 이윤이 많이 나는 분야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립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사유화 이전의 사유화' 과정을 거쳤으며, 따라서 사유화과정과 합법성이 불분명했다. 본격적인 사

기 국유재산을 자신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점유한 클렙토클라투라(kleptoklatura)로 변화했던 것이다.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당 기구에 속해있던 자들이 사회주의체제의 마지막 자구노력이었던 개혁과정에서 준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개혁과정이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유재산형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허용을 마련했을 때 당간부들은 특권을 이용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다. 권력기구의 최상층부가 개혁과정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체에 속해있던 중간 노멘클라투라들은 개혁과정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자발적인 사유화”과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노멘클라투라에게 부의 축적을 가능케 했다. 헝가리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직전 정부가 국유기업을 합작기업이나, 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했을 때 공장의 지배인 집단들은 즉각 이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다. 이들은 외부의 통제를 배제하면서 유용한 자산들을 자신들이 소유자의 일부로 되어있는 자회사로 빼돌렸으며, 결과적으로 국유기업의 부실화는 가속화되었다.⁵⁷⁾

유화이전에도 기업은 기업내부에 상업적인 부분을 설립함으로써 개혁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을 창출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은 경쟁적인 부분과 비경쟁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조악한 품질, 혹은 높은 가격 때문에 비 경쟁적인 생산물들은 국가고시가격으로 팔렸다. 반대로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생산품들은 공장이 설립한 상업구조를 통해서 팔렸다. 국가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기업의 지배인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사유화이전에도 기업은 기업의 운영자들에게 사유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O. Kryshstanovskaya & S.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pp. 717-721.

노멘클라투라의 사기업부분으로의 이전은 이들과 구공산당조직들이 가졌던 물질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적 자원동원능력에도 기인한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조직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적 관계에 대한 이해, 특히 이들간의 집단적 친화력은 물질적 자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자본은 보다 확대된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을 지니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자본이라는 의미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문화적 자본은 주로 교육수준에 기초한 것이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인 관계속에서의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에 기초한다. 어떠한 종류의 자본이든 축적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며, 다른 자산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시기동안에 공산당원이라는 자격은 지배자와 당원간의 제도를 통한 일종의 거래관계에 기초했다. 복종과 충성에 대한 대가로 당원들은 자신들의 경력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안전의 보장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이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 당원이라는 사실은 이에 속한 개인이 사회주의체제에서 다양한 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자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시기뿐만 아니라 이행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⁵⁷⁾

57) R. Frydman, et al., "Capitalism with a comrad's face," *Transition*, Vol. 2, No. 2, 1996, p. 6.

58) J. Karpinski, "Sociologists compare Nomenklatura members and

따라서 일반대중들과 다르게 구 체제의 엘리트들은 사회주의체제와 강한 연속성을 보이며 이행기 사회분화의 상층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구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러시아와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의 엘리트들에 관한 연구⁵⁹⁾는 이들 국가에서의 구체제가 형성한 구조의 강한 영향력과 엘리트의 연속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집단이 아니며, 1988년의 엘리트들과 1993년의 엘리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엘리트의 상당부분이 과거 공산당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1988년의 최고위층 노멘클라투라중 18.7%가 1993년의 사유기업의 최고 경영진으로 바뀌었으며, 48.1%는 정치, 문화, 국유부분 경제의 고위층에 있었다. 폴란드의 경우는 각각 28.4%와 27.45%, 그리고 헝가리의 경우도 29.6%와 17.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노멘클라투라들이 주로 사유기업부분으로 이전했다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주로 정치부분과 기타 공공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와 비교된다. 이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1988년과 1993년 사이에 엘리트의 연속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1983년에서 1988년까지의 엘리트 구성원간의 변화가 1988년에서 1993년까지의 변화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폴란드

contemporary elites," *Transition*, No. 31, May 1996, p. 37.

59) I. Szelenyi, et al., *Elity w Polsce, w Rosji i na Węgrzech*. Wymiana czy reprodukcja? (Elites in Poland, Russia, and Hungary: Change or reproduction?), (Warsaw: Polish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1996)

의 경우는 사회주의시기의 엘리트의 변화보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엘리트 구성의 변화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의 엘리트에 관한 조사에서 현저하게 부각되는 사실은 이들의 대부분이 이전의 공산당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인 1993년의 정치엘리트의 83.4%, 문화엘리트의 77.7%, 경제분야의 경우 국유부분 84%, 사유부분의 52.7%가 과거 공산당의 구성원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1993년의 경제 엘리트의 56.9%, 정치엘리트의 30.5%, 그리고 문화엘리트의 30%가 과거 공산당의 구성원이었다. 헝가리의 경우 이수치는 각각 66.5%, 31.7%, 55.6%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사가 시행되었던 1993년 이후의 공산당의 입지 강화과정을 고려한다면 폴란드와 헝가리에 있어서 공산당원의 경력을 가진 엘리트의 숫자는 더 증가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⁶⁰⁾

러시아의 경우 옐친의 집권이후 엘리트구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당 지도부의 절반, 경제엘리트의 절반이상 그리고 지방의원의 3분의 1이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대통령직속 행정부와 러시아정부의 4분의 3이 구 노멘클라투라의 구성원이었으며 지방의 지도부는 이 비율이 80%를 넘고 있었다는 점에 의해서 의미가 제한된다. 또한 옐친지도부의 3분의 1이 브레즈네프시기부터, 또 다른 3분의 1이 고르바초프시기 부터 노멘클라투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단지 10%만이 포스트 소비에트체제에서 형성된 새로운 엘리트였다. 옐친집권이후의 엘리트들은 구

60) J. Karpinski, "Sociologists compare Nomenklatura members and contemporary elites," *Transition*, No. 31, May 1996, pp. 36-37.

체제로부터 시작되는 경력의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의 제1서기는 지역소비에트의 위원장이 되었고 이후 지역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통령직속행정부와 지역의 엘리트들은 주로 구 소련의 정부구조로부터 기원했으며, 많은 경제엘리트들은 품소몰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는 옐친의 집권이후의 엘리트와 구 노멘클라투라의 연속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⁶¹⁾

<표 2> 옐친집권이후 엘리트의 출신

	최고 지도부	당 엘리트	지역 엘리트	정부	경제 엘리트	평균
노멘클라투라출신	75	57.1	82.3	74.3	61	60.9
부문별 출신						
공 산 당	21.2	65.0	17.8	0	13.1	23.4
품 소 몰	0	5.0	1.8	0	37.7	8.9
소 비 예 트	63.96	25.0	78.6	3.3	26.9	39.5
경 제	9.1	5.0	0	42.3	37.7	18.8
기 타	6.1	10.0	0	30.8	8.2	11.0

61) O. Kryshtanovskaya & S.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pp. 727-729.

이상의 설명은 러시아의 포스트사회주의 이행기가 대중적인 하층분해현상과 아울러 구 체제의 엘리트들의 연속성과 기회의 독점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상층부의 형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구조적인 경제침체와 복지체제의 와해, 노동시장의 재편과정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하향이동의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구 체제에서 축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노멘클라투라들은 시장체제의 엘리트로 신속히 자리를 옮겨갔다.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이 대중적 하층분해과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반면 상층부의 형성은 구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 사회의 구조적인 긴장상태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제Ⅷ장 결 론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소련체제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데 장애물로 등장하는 구조적인 속성들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급속히 이룩하려는 의도를 가진 급진적인 개혁과정은 구체제의 구조적인 결과물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체제의 결과물들이 시장체제로의 이행에 지속적인 문제로 등장

했다. 특히 사회주의체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체제변혁이면서도 새로운 지배세력은 과거와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변화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는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국가소유를 지배적인 형태로 만들었다. 시장은 계획으로 대치되었고, 기업은 중앙집권화된 체제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경제행위에서 자주성과 시민권차원의 자유가 결여되었으며, 사회구조 역시 중앙집권화되었고, 위계적인 것이었다. 행정-명령 체계와 정치적인 요소의 과도한 억압은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무력감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사회주의에 특유한 인성형태를 잉태했다.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국가의존형'(state-dependent)이라는 점으로 귀결되며, 이는 시장체제의 노동자들과 중요한 차이들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구체제의 해체와 신 질서의 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을 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과정에서 국가의존적 특성에서 수혜를 입던 층들의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계는 개인들의 위험을 극소화시키며, 직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관계없이 균등한 임금정책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육체노동자와 중화학공업부분의 노동자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부분의 노동자보다 유리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비숙련 노동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 그리고 집단농장의 농민 등은 시장경제로의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러시아 사회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이행기 전략의 특성인 급진적 이행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통제의 급속한 약화는 구체제의 특성인 독점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익집단들에 의한 통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화와 사유화는 지배세력들의 지대추구행위의 장으로 이용되며, 일반대중들은 유산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당한다. 그리고 이행기의 구조적인 경제위기와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적 질서의 해체과정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하층으로의 분화를 강요당하며, 이는 주민의 주변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소련사회의 해체와 시장체제로의 이행과정은 자율적인 경제주체의 형성을 밑으로부터 자극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층이 특권을 사적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개혁초기인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뿐만 아니라 92년의 급진적 개혁의 시기에도 구체제의 특권체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국가의 권위가 약화되는 과정에서도 관료제도에 기초한 특권들은 유지되었으며, 정치엘리트들의 대다수도 이전의 노멘클라투라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은 구체제의 엘리트와 이행기의 엘리트간의 상당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 사회주의 사회의 이행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 사회주의권국가들의 구조적인 특성과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행전략에 따라서 사회변화의 양태가 일정정도 달라진다. 러시아의 경우 급진적인 사회의 해체에서 오는

다양한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구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지배체제, 계급구조와 사회체제와 같은 구조적인 영향들이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의도했던 급진적 개혁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사회의 경우 개혁으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구 체제의 요소들의 지속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효율성은 러시아가 채택하고 있는 개혁전략의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 체제의 효과적인 해체와 대안체제의 형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새로운 시장환경을 형성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와 기업가의 형성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은 구체제에 기원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의 영향, 특히 구 지배세력들의 지대추구 행위와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저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배 정 호*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종전직후 재일한인사회의

정치적·사상적 성향과 조총련의 생성

제 III 장 조총련의 주요활동과 발전

제 IV 장 조총련의 쇠퇴와 문화적 갈등

제 V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치학 박사

빈 면

제 I 장 서 론

1945년 8월 종전시 재일韓人들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200-240만 정도로 추산되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즉시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 정도의 韓人들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전후 재일교포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을 보면, 재일교포 1세, 2세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왔고 또 패전직후 변동기에 있는 일본사회에서 대부분 노동자로 하층생활을 하였으므로 민족적 입장과 더불어 정치·사상적 입장에서 일본 共産黨을 비롯한 혁신계세력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이와같은 재일교포 1세, 2세들의 정치·사상적 성향은 패전직후 일본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조류로 부터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요컨대, 패전직후 일본사회의 정치·사상적 조류 및 재일교포사회의 정치·사상적 성향은 在日韓人 혁신계세력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조성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부터 탈피하여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일본 자본주의사회를 발전시키게 되자,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일본의 정치사회 및 재일교포사회는 변하게 되었고, 더우기 한국정부가 재일 조총련계 교포들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재일韓人 혁신계세력은 약화되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는 일본사회 및 재일 韓人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조류나 성향,

그리고 한국정부의 대일본정책 및 재일교포정책이 재일韓人 혁신계세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또 그러한 정치적, 사상적 변화의 흐름이나 정책의 전개에 在日韓人 혁신계세력이 유연하게 적응할 때는 생존·발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약화되고 쇠퇴하여 몰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아래에서 (1)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등의 세대변화 (2) 일본사회의 변화 및 재일동포사회의 변화 (3) 한국정부의 在日조총련계 교포 포용정책의 전개 (4) 북한의 변화 (4) 국제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과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적응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의 개념은 주어진 공간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체계나 행동양식 등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¹⁾

한국과 일본에서 조총련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아직 저조한 편임을 고려해 볼 때,²⁾ 본 연구의 제1의 목적은 조총련의 생성, 발

1)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2) 조총련이 폐쇄적 집단인 만큼 조총련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과거 조총련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통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 편이나 문헌적 자료는 극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조총련에 대한 연구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최근의 연구도 아주 저조한 편이다. 특히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연구와 그러한 연구를 통한 이념적, 문화적 분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田駿의 『朝總聯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2)는 勞作, 이승목의 “조총련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조총련의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1978)은 秀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최

전, 쇠퇴에 대한 체계적 분석 그 자체에 있다. 아울러 제2의 목적은 共產主義 조직인 조총련이 資本主義 社會인 일본에서 겪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이며, 제3의 목적은 재일교포 통일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II장 종전직후 재일한인사회의 정치적·사상적 성향과 조총련의 결성

1. 終戰直後 在日韓人社會의 政治的·思想的 性向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의 시기에 이르러 밀대 부족한 전시노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년 5월에 “국가총동원법”을, 1939년 10월에 “국민징용령”을, 1944년 8월에는 年전원에 대한 “징용령”을 공포, 실시하였다.

따라서 많은 韓人들이 강제징발되어 일본으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3)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韓人의 數는 83만여명정도로 추산된다.

근의 연구로는 이도형의 「북한 전위조직 조총련의 실체」(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를 들 수 있다.

일본에 노동자로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은 사하린과 지시마(千島)의 공작장, 홋카이도의 유우바리(夕張)탄광, 후쿠시마의 초반(常磐)탄광, 도카에(道志) 단나(丹那)굴길 공사장, 이다쓰께(板付)의 비행장 공사장, 찌쿠호(千曲)탄광, 오이다의 방직공장, 마쯔시로(松代)의 군사시설 공사장 등지

1945년 종전시 재일 韓人의 數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200-240만정도로 추산된다.⁴⁾ 이가운데 상당수는 한빈도로 귀환하고, 약 60만정도의 韓人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⁵⁾

종전직후의 재일교포사회는, 전쟁에 패한 일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동기에 있었으므로, 일본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조류로부터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패전과 더불어 일본은 사회적으로는 산업시설의 파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무질서한 혼란상태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긴접적이지만 미국의 점령통치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異民族의 지배를 받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아, 빈곤, 기성 권위의 추락, 가치관의 파괴, 무질서 등은 일본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사상이 급속히 전파되도록 하였다.

소련을 중심으로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은 “패전국가 일본”에서 권위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아울러 주도적인 사상의 한 조류를 이루게 되었다.

혁신사상이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 미치는 사상적 분위기속에서, 사회당⁶⁾과 공산당⁷⁾은 합법적인

에서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려야 하였다.

- 4) 森田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法務研修所, 1955), p. 5
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社, 1957. 6), pp. 1
; 재일본 조선인총련연합회, 「총련」, (조선신보사, 1990. 12), p. 8
照.
- 5) 1946년 2월 17일 미국 점령군 총사령부(GHQ)가 신고받은 재일
국민의 총수는 647,006명이었다.
- 6) 共產主義와 선을 그었던 戰前의 無産政黨들은 1945년 10월 단

치세력으로서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당은 일시적이거나 미국점령당국의 지원아래 정권까지 장악하였다.⁸⁾

이와 같은 일본사회의 정치, 사상적 상황은 재일교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 노동자로 하층생활을 하였던 재일 교포 1세, 2세들은 민족적 입장과 더불어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였고,⁹⁾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혁신계세력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일본제국주의 시절, 피압박민족으로서 엄청난 압박과 서러움을 겪었던 대다수의 재일교포 1세, 2세들은 사실 사상적인 입장에 앞서 민족적 차원에서 戰前에 천황제와 침략전쟁, 식민지통치를 정면으로 반대했던 일본의 혁신계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감을 가져 그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재일교포 1세, 2세들의 이와같은 사회주의 지향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은 한반도의 38선 분단에 따른 국적선택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났다. 재일교포 1세, 2세들의 본적지를 보면, 경상남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8선 이남지역 출신이 거의 대다수이다. 그런데 국적선

로 결집하여 社會黨을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 7) 1922년 7월 공식적인 당조직을 갖추었던 共產黨은 1945년 12월 합법정당으로 등록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 8) 1947년 4월 총선거에서 社會黨은 제1당으로 등장한 뒤 1948년 10월까지 정권에 참여하였다.
- 9) 심한 차별과 비참한 하층 노동층을 구성하고 있었던 재일동포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은 지극히 매력적이며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상이었다. 이승목, 앞의 논문.

택 상황을 보면, 1950년도의 북한국적 취득자는 약 46만 7,470명, 한국국적 취득자는 약 7만 7,433명이다. 즉 재일교포들 가운데 86%가 북한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표 1>참조).

절대다수의 재일교포들은 자신들이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고 자신들의 고향 또한 미국의 통치하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선택한 것이다.

<표 1> 해방직후 외국인등록의 國籍欄에 나타난 韓國籍과 朝鮮籍

	연말의 한국·조선인 등록 총 수	「한국」기재 (韓國籍)	「조선」기재 (朝鮮籍)
1947	598,507	--- 0%	598,507 100%
1950	544,903	77,433 14%	467,470 80%

<출처> 「朝鮮總聯の研究」(東京: 寶島社, 1995) p. 51.

요컨대 패전직후 일본사회의 정치·사상적 조류 및 재일韓人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은 재일韓人 혁신계세력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조성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2. 在日僑胞 自治團體의 左傾化와 朝總聯의 結成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재일교포들은 해방된 민족으로 처우받고 회복된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내 각지에서 약 300여개

의 韓人자치단체를 결성했다. 즉 재일교포들은 귀환의 후원, 생활 상담 등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300여개의 각종 소규모 자생단체들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재일교포대표들은 일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을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단체로 결성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10일 東京에 모여 「在日本朝鮮人聯盟 中央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同年 10월 15일에는 東京의 日比谷공원에서 전국대표 약 5,000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통하여 「在日朝鮮人聯盟」(이하 「朝聯」이라고 칭함)을 결성하였다.

「朝聯」은 좌우세력을 망라한 韓民族團體로 출발하였지만, 재일 韓人 좌파세력들이 세력확대를 위하여 공작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이념갈등에 따른 조직적 분열¹⁰⁾을 거치면서 좌경화되었다.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좌익단체로 변모한 「朝聯」은 폭력적인 極左路線을 추구하다가 1949년 9월 8일 강제해산을 당하였다.

재일 韓人 좌파세력들은 「朝聯」의 해산으로 활동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祖國防衛委員會」(1950. 6.30)와 「在日本朝鮮統一民主戰線」(1951. 1.9)을 조직하였고, 일본공산당의 지도에서 북한노동당의 지도로 노선을 전환시켜면서 「朝總聯」(1955. 5.5)을 결성하였다.

즉 조총련은 「朝聯」의 좌경화, 「朝防委」 및 「民戰」의 발전적 해

10) 일본 공산당의 「朝聯」의 주도권 장악에 반발한 民族系 청년들은 1945년 11월 16일 「朝鮮建國促進青年同盟」을 결성하고 1946년 1월 2일 정치단체인 「新朝鮮建設同盟」을 조직한 후 「朝聯」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朝聯」이 좌경화되자 이에 대항하여 보수적인 민족세력은 「新朝鮮建設同盟」을 주축으로 하여 1946년 10월 3일 「在日本朝鮮居留民團」을 결성하였다. 「在日本朝鮮居留民團」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으로 改稱되었다.

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生成된 것이다. 조총련의 결성은 「朝聯」-->「朝防委」 및 「民戰」-->「朝總聯」이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 졌다.

가. 일본 共産黨의 개입과 「朝聯」의 左傾化

재일교포 200만여명이 결합한 「朝聯」은 좌우파를 망라한 재일韓人단체였지만, 戰前의 일본 共産黨 간부였던 金天海가 「朝聯」에 개입하게 된 이후부터 좌경화하기 시작했다.

1945년 10월 10일 德田球一을 비롯한 일본 共産黨 간부들과함께 출옥한 김천해는 동년 10월 15일 「朝聯」결성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대중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朝聯」의 최고고문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朝聯」에 최고고문으로서 개입하게 된 김천해는 「朝聯」의 주도권 장악 및 좌경화를 위하여 「朝聯」에서 보수적인 민족주의 우파세력들을 축출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그 결과 「朝聯」은 김천해, 김두용, 박은철 등 일본 공산당 간부를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들에게 장악되고, 「朝聯」은 일본 共産黨의 재건을 위한 활동거점이 되었다.

일본 共産黨은 「朝聯」을 활동거점으로 黨재건운동을 전개하였고, 마침내 1945년 12월 제4차 黨大會를 통하여 黨을 부활시킴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 共産黨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德田球一서기장의 최측근인 김천해는 黨의 중앙위원, 정치위원, 조선인 부장직을 겸직하게 되었고, 「朝聯」내 韓人좌파 세력들도 國際共産主

義 運動의 “一國一黨의 原則”에 따라 일본 共產黨에 가입하게 되었다.¹¹⁾

이렇게 「朝聯」은 일본 共產黨과 동일한 理念아래 동일한 課題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동일한 조직을 이루게 되었다.

「朝聯」의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전략·전술은 일본 共產黨의 최고 간부와 「朝聯」의 최고간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졌고¹²⁾ 일본 共產黨은 黨의 정비와 더불어 지도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세력확장과 더불어 「朝聯」에 대한 지도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갔다.

일본 共產黨의 「朝聯」에 대한 지도력의 강화와 더불어 「朝聯」은 일본 共產黨의 하부조직으로 전략되어 갔고, 그에 따라일본 共產黨과 조직적 일체화를 이루어 갔다.

兩조직의 일체화에 따라 「朝聯」과 일본 共產黨간의 조직적, 人的 관계는 중앙단위에서 부터 각급조직, 각분야에 걸쳐 친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와같은 「朝聯」과 일본 共產黨간의 조직적, 인적 관계는 일본 共產黨의 조직적인 신장과 그에 따른 영향력의 증대를 「朝聯」의 조직적 성장 및 일본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로 연결시켰다.

黨재건 직후의 일본 共產黨의 성장상황을 보면, 1945년 12월 黨 재건대회 당시 1,083명이었던 당원수가 3개월후인 1946년 2월에 개최된 제5회 대회에서는 7배 가까이 증대하여 약 7만여명에 달하게 되었고, 기관지 「赤旗」의 발행부수는 25-26만부를 상회하게

11)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一國一黨”원칙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外國人의 경우 공산당에 入黨하려면 在留國 공산당의 당원이 되어야 했다.

12) 「朝總聯」, (中央情報部, 1975. 11.) p. 10

되었다. 또 일본 共産黨은 일본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더불어 노동 조합을 통한 세력확대를 꾀하게 되었는데, 1946년 8월 계급투쟁 노선을 견지하는 노동연합체인 「全日本産業別勞動組合會議」가 일본 共産黨의 주도아래 결성되게 되었다. 「全日本産業別勞動組合會議」에 결집된 産別勞組는 21組合 조합원수 1,559,469명인데, 이는 전체 조직노동자의 약4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아울러 일본 共産黨은 新日本文學會(1945년 12월 창립), 日本民主主義科學者協會(1946년 1월 창립), 日本民主主義文化聯盟(1946년 2월 창립) 등의 左翼團體가 발족하는 것을 주도하였고 青年共産同盟을 재건하였으며, 全日本學生自治會總聯盟(全勞聯)을 결성하였다.¹³⁾ 그리고 일본 共産黨은 野坂參三의 지휘아래 평화적인 의회전략을 하였는데 1946년 4월의 총선거에서는 衆議院에서 5席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1949년 1월의 총선거에서는 무려 35席이나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共産黨의 활발한 활동 및 발전은 바로 「朝聯」이 일본사회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즉 재일교포 사회의 좌파세력이 전후의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은 이때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전직후의 일본사회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던 일본 共産黨은 1949년 1월의 총선 이후 스탈린과 코민포름의 지령에 따라 평화적인 의회전략에서 폭력적인 극좌 투쟁노선으로 전환하면서 그 세력이 현저히 감퇴하게 되었다.¹⁴⁾

13) 「日本共産黨 50年」(日本共産黨中央委員會出版局發行, 1972. 8.20), pp. 100-106.

14) 1950년 6월 6일 미국 점령군 총사령부의 지령으로 德田서기장을 비롯

아울러 일본 共産黨과 활동방침을 같이 하였던 「朝聯」도 일본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아주 감소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 정부수립 강령을 즉시 지지하였던 「朝聯」은 일본 共産黨의 활동방침에 따라 國際共産主義 路線 및 극좌투쟁노선을 추종하면서 “조선의 통일과 독립”, “일본의 민주혁명 달성” 등을 표방한 많은 불법 폭력사태를 유발하였는데, 「朝聯」의 이와같은 극좌투쟁노선에 따른 조직적 폭력행위가 일본사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朝聯」계의 폭동은 일본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심정에 잇을 수 없는 것으로 인상지워졌다.¹⁵⁾

1949년 9월 8일 일본 법무성과 미국 점령군 총사령부는 「朝聯」을 폭력단체로서 규정하고 「團體 등에 관한 規定令」 제4조에 의거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법무성과 미국 점령군 총사령부의 해산명령에 따라 「朝聯」과 그 산하의 前衛적 행동부대인 『在日朝鮮民主青年同盟』(『民靑』)은 해산되고 朝聯系 학교는 폐쇄되었다.

「朝聯」의 해산은 재일 韓人좌파세력이 향후에도 日本 資本主義體制를 부정하고 이념적 마찰과 더불어 폭력적인 극좌노선을 추구할 경우에는 불온시당하여 극히 약화되거나 몰락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여 주요간부 24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고, 동년 7월 18일에는 黨기관지 「赤旗」가 무기한 발행정지되었다.

15) 田駿, 前掲書, p. 486. 필자가 만난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이 당시에 청년기를 보낸 일본인들은 朝聯系의 폭동을 생생히 기억했다. 朝聯系의 폭동은 일본인들의 在日韓人들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어둡게 한 사건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혁신계 정치세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 겪을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기도 하다.

나. 북한 노동당으로의 지도노선의 전환과 조총련의 결성

『朝聯』해산 이후 그 산하단체였던 『朝鮮解放救援會』와 『在日朝鮮民主女性同盟』은 『朝聯』의 舊組織을 보존하고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朝鮮解放救援會』와 『在日朝鮮民主女性同盟』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광범한 조직이었던 『朝聯』의 舊組織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朝聯』의 舊幹部들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이강훈을 중심으로 한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형성 제창에 대항하고 『朝聯』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를 결성하여야 했다. 『朝聯』의 지하간부들은 1950년 4월 24일 『朝鮮人團體協議會』을 결성하여 그 산하에 『朝鮮解放救援會』, 『在日朝鮮民主女性同盟』, 『在日朝鮮人學生同盟』, 『在日朝鮮民主女性同盟』 등을 망라시켰다.

이와 같은 『朝聯』舊幹部들의 조직재건 움직임은 한반도에서의 南北의 대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나아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중앙위원들의 공직추방과 더불어 기간조직을 地下化하였던 일본 共產黨에게도 黨대세를 긴급하게 갖추도록 하였다. 즉 일본 共產黨은 黨의 『朝鮮人部』를 검토하여 『民族代表部』로 재출발시키고, 나아가 『民族代表部』로 하

여금 1950년 7월 「祖國防衛委員會」의 결성과 더불어 在日 조선청년의 결집을 위한 「祖國防衛隊」라는 서클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으로 부터 조국통일활동에 동참을 요청받았던 「朝聯」의 舊幹部들은 「朝鮮人團體協議會」로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在日교포사회에서의 조직재건 및 확대를 위하여 1950년 6월 16일 「在日朝鮮民主民族戰線 結成準備會」를 발족시켰다.

「在日朝鮮民主民族戰線 結成準備會」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즉시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 準備會」로 개칭되었다가 다음해인 1951년 1월 9일에 이르러 전국적 조직인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이하 「民戰」이라 칭함)으로 정식 발족되었다. 「民戰」의 결성이 지연된 것은 한국전쟁의 戰況과 관계가 있다. 즉 「朝聯」계 인사들은 1950년 9월 14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轉機로 戰況이 북한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11월 25일 中共軍의 개입으로 戰勢가 다시 북한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勢확대를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발족시킨 것이다. 한국전쟁의 영향속에서 결성된 「民戰」은 그후 제일 韓人좌파세력들의 결집체로서 기반을 공고히 해갔다.

그런데 1953년 11월 11일 「民族代表部」의 주도아래 개최된 제4차 「民戰」 전국대회 이후부터 중앙간부의 다수가 일본 共產黨의 당원이 됨에 따라 「民戰」과 일본 共產黨과의 관계는 「朝聯」때보다 더욱 긴밀해졌고, 아울러 「民戰」은 일본 共產黨의 혁명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民戰」시기까지만 해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一國 一黨의 원칙”이 엄존하였으므로 재일 韓人公산주의자들이 共産黨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共産黨에 당원으로 가입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朝聯」해산된 후, 재일 韓人좌파세력들은 일본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¹⁶⁾ 일본 共産黨의 지도아래에서 「祖國防衛委員會」 및 「民戰」의 활동을 전개했었다. 즉 일본 共産黨이 「民戰」이 결성된지 1개월후인 1951년 2월 제4차 전국협의회에서 무력투쟁을 행동방침으로 결정하자 「民戰」은 합법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였고, 「祖國防衛委員會」는 비합법적인 군사혁명노선에 따라 투쟁을 전개 하였던 것이다. 「民戰」은 일본 공산당의 합법적 운동노선에 입각하여 주로 對日 單獨講和條約 反對, 미일안보조약 및 군사기지 반대, 강제송환 반대, 민족교육의 확보, 치안입법 반대, 재군비 반대, 한일회담 분쇄, 吉田내각의 타도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활동하였고, 「祖國防衛委員會」는 약 4,000명의 조직원을 중심으로 무기의 제조 및 모집, 군사훈련, 한

16) 일본 패전후, 「朝聯」은 일본 공산당과는 黨 재건때부터 一心同體로 활동을 해왔는데 일본당국은 「朝聯」과 일본 共産黨의 해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朝聯」에 대해서 더욱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일본당국은 「朝聯」에 대해서 해산 및 재산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데 비하여 일본 共産黨에 대해서는 중앙간부들의 공직에서의 추방, 당 기관지 “赤旗”의 무기한 발행정지, 점령군 총사령부의 “레드 퍼지(red purge)”지령에 따른 신문·방송·통신분야 등에서의 공산당계 인사 약 14,200명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朝聯」의 간부들은 일본 당국에 대해서 민족차별에 따른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 共産黨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즉 「朝聯」의 舊幹部들은 일본 共産黨으로 부터 이탈된 새로운 조직체의 결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국에 보내는 군수품의 생산 및 수송 방해, 反戰罷라 배포,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불법행위 등의 비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停戰된 후, 「民戰」과 「祖國防衛委員會」는 일본 共産黨의 방침에 따라 투쟁목표를 다소 변경하여 “3反투쟁”, 즉 反美, 反요시다(吉田)內閣, 反日本再武裝을 기치로 내걸고 극좌 폭력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民戰」 및 「祖國防衛委員會」의 활동은 격렬하였는데, 특히 「祖國防衛委員會」의 투쟁은 매우 과격하였다. 그와같은 과격한 투쟁은 대외적으로 이전의 「朝聯」계의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일본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고립화를 초래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일본 공산당원 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치름에 따라 조직의 약체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民戰」의 내부에서는 일본 共産黨의 극좌 폭력노선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고 아울러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일본 共産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되었다. 여기서 「民戰」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일본 共産黨대신에 북한으로의 傾斜을 의미하는데,¹⁷⁾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民戰」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확대되어져 갔다.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¹⁸⁾와 일본에서의 대공산권 유화적 정권의 등장으로¹⁹⁾ 대일본접근에 유리한 환

17) 이승목, 앞의 논문, pp. 47-48.

18)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평화공존 노선을 주창하였는데 그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부터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19)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

경이 조성²⁰됨에 따라 북한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아울러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영향력증대를 위하여 「民戰」으로 하여금 일본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지도노선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북한은 1954년 8월 30일 외무상 南日의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민들에게 대한 일본 정부의 비법적 박해를 반대 항의하여”²¹라는 성명을 통하여 재일 韓人들의 정당한 권리를 북한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로 간주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보호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일본 共産黨의 「民戰」에 대한 직접지도를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표명하였고, 아울러 韓德銖를 중심으로 한 民族主義派로 하여금 主流인 「民族代表部」派에 대하여 정면 비판을 가하도록 하였다.

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외정책은 대미의존정책으로 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 “日本·北韓의 關係正常化와 남북관계”,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第5卷 (統一院, 1994), pp. 133-213

21) 『조선중앙년감 1956』 (평양 : 국제생활사 1956), p.10.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대한 일본정부의 이상과 같은 비법적 박해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현대 국제법에 공인된 원칙들과 관례들의 란포한 위반이라고 인정한다. 재일 조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 부동한 정책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기 조국의 자유와 통일 독립을 위하여 리 승만 괴뢰 도당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자유를 보장하며 이미 강제로 수용한 조선인들을 즉시 석방하고 강제추방을 중지하며 일본에서의 조선인들의 거주 및 취업의 자유와 생명 재산의 안전 및 민주 민족 교육 등 일체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주며 비법적으로 몰수한 일체 재산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태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民族主義派의 「民族代表部」派에 대한 비판의 전개와 더불어 1955년 3월 11-12일에 개최된 제19차 「民戰」중앙위원회에서는 民族主義派와 「民族代表部」派가 격렬하게 대립하였는데, 이미 북한의 「조선통일 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던 한덕수는 제19차 「民戰」중앙위원회에서 在日韓人の 運動과 活動에 관한 연설²²⁾을 통하여 주류파에 대하여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南日의무상의 성명의 취지를 강조하였고, 나아가 在日朝鮮人 共產主義者の 지도하에 全在日同胞가 총단결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덕수의 연설은 1955년 3월 22일자 「解放新聞」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면 게재되었는데, 이때 이미 조총련의 구상 및 운동방침의 기본은 제시되었던 것이다.

제19차 「民戰」중앙위원회를 계기로 民族主義派가 大勢를 장악하게 되었고, 「民戰」의 활동은 사실상 북한의 주도아래 전개되었다. 그리고 1955년 5월 24일 북한의 지원아래 치루어진 제6차 「民戰」전체대회를 통하여 마침내 「民戰」과 「朝防委」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동년 5월 25일 「朝總聯」(「在日朝鮮人總聯合會」의 약칭)은 결성되었다.

「朝總聯」의 출범과 더불어 일본 共產黨출신의 「民戰」간부들은 黨籍을 이탈하였고, 대부분의 「民戰」간부들은 「朝總聯」의 주요직책을 맡았다.

22) 한덕수는 연설도중에 회의장이 驟然해지자 降壇하였는데, 연설문의 전체내용은 1955년 3월 22일자 「解放新聞」에 전면게재되었다. 「解放新聞」에 게재된 연설문의 주요내용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성격과 임무, 과거 운동에서의 誤謬, 금후 활동의 기본, 금후의 투쟁과제, 재일조선동포의 총단결에 관한 것이다.

「朝總聯」의 결성배경 및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국제환경 및 일본 국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1)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여 평화공존노선을 주창함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 부터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고, 또 (2)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親美的인 요시다 政權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政權이 등장하면서 대외정책은 對美的존정책으로 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대일본정책을 유화·접근정책으로 전환토록 하였다.²³⁾

23) 북한의 南日외무상은 1954년 8월 30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들에게 대한 일본 정부의 비법적 박해를 반대 항의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제일 조선인의 정당한 권리를 정부정책차원에서 보호할 것임을 천명한 것에 이어 1955년 2월 25일 대일 관계에 관한 성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북한 정부는 남일외무상의 성명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면서도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관계 및 관계정상화를 향한 북한·일본 관계의 발전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의사표시한 것이다. 「조선중앙년감 1956」 p.16.

「-----조선 인민은 과거에 조선을 강점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제패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본을 재무장하여 일본에 군국주의를 재생시킴으로써 일본을 아세아 침략의 책원지로 전변시키며 일본 인민을 새로운 군사적 모험에 리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선 호상 리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적 관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 수상 하토야마씨의 우리 공화국과 경제적 관계

둘째, 「民戰」의 내부에서는 일본 共産黨의 극좌노선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일본 共産黨의 지배로 부터 이탈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는데, 북한의 대일본 유화적 접근은 그와 같은 「民族主義」派가 「民戰」 및 재일 韓人사회에서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데 지원세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民戰」의 지도노선이 일본 共産黨에서 북한 노동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朝總聯」이 결성되었는데, 북한과 「民族主義」派의 주도아래 「朝總聯」이 출범하였다는 것은 해방후 재일 韓人사회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규제해왔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원칙인 “一國一黨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일 韓人좌파세력들은 해방후 일본 共産黨과 10년간에 걸쳐 형성된 人的·조직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대일본정책 및 재일교포정책이 부재하였던 시기에 북한이 대일본 유화적 접근 및 재일교포 포용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재일교포사회의 좌경화를 가속화하였고 아울러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증대시켰다. 실제로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은 「朝總聯」의 조직적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海外前衛組織을 확보한 것이다.

를 개선하며 회담할 용의를 표명한 최근 발언을 긍정적으로 대하며 따라서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관계 및 기타 조일관계 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제Ⅲ장 조총련의 주요활동과 발전

1. 朝總聯의 組織整備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둘러싸고 분열되었던 社會黨이 1955년 10월 재통일됨에 따라 이에 자극을 받은 보수진영도 대통합을 이루게 되어 自由民主黨(이하 자민당이라 약칭함)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총련은 자민당과 사회당을 양측으로 하는 55년체제 아래에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조총련은 '보수 대 혁신' 또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제도화된 틀속에서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노선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조총련은 東京에 있는 중앙본부가 지방조직을 통괄하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조총련의 조직기구를 보면, 중앙조직은 中央大會(全體大會), 中央委員會, 中央常任委員會, 監査委員會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조직은 일본의 행정구역에 준해서 都·道·府·縣本部 49個所, 支部 320個所, 分會 2,000個所와 7個 地方協議會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조총련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은 中央常任委員會의 議長에 의하여 주관되었다. 말하자면, 조총련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인

한덕수의 지휘아래 한덕수계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8,500명의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조총련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1957년 3월 결성된 '學習組'는 비밀조직으로서 '김일성주의'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고 '조국혁명=조국통일'을 위해 몸을 바치는 핵심적인 '혁명투사' 조직이다. '學習組'는 북한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였다.²⁴⁾

그리고 조총련은 계층별, 세대별, 직능별, 성별 활동과 여론주도를 위한 선전·홍보활동을 위하여 傘下에 여러 단체들을 두었다. 예컨대 조총련은 「재일조선청년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등 13개의 산하단체와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등 14개의 사업체를 두었던 것이다.

조총련의 주요 산하단체 및 주요 사업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산하단체>

재일조선청년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재일조선인교육회, 재일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조선유학생동맹,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재일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조

24) 김병직이 제1부의장으로 재임시에는 '學習組' 산하에 특수공작부대를 설립하여 감시·미행·도청 등의 조직내 통제활동에 종사토록 하였다. 또 조총련 비밀조직의 하나인 '낙동강'은 한국내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비밀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선인체육연합회, 재일조선인불교도연맹, 재일조선인통일동지회.

<주요 사업단체>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재일조선인통신교육협회, 재일수출입상사,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조총련 중앙학원.

2. 在日僑胞社會에서의 朝總聯의 影響力 增大와 主要活動

조총련은 1957년에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1) 재일교포의 민족적 대중단체 (2) 북한 노동당의 일본지부 (3) 주일 북한대표부 (4) 북한의 재외경제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일 한인사회의 勢확대를 위하여 (1) 조국의 평화통일 (2) 민족권리의 옹호 (3) 민족교육의 추진 (4) 북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정치목표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총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일본사회 및 교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총련은 평화통일운동의 적극적 추진, 민족교육사업의 전개, 재일교포 복송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비약적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²⁵⁾

25) 이승목, 앞의 논문, pp. 53-64.

가. 조총련의 평화통일운동과 문화선전활동

한반도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이승만정부는 무력복진통일을 주창하였고, 이에 비하여 한국전쟁을 도발하였던 북한은 휴전이 되자마자 ‘남한의 북침’을 강조하면서 자기합리화를 위한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에 남한은 가해자이고 북한은 피해자라는 선전을 펼치면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조총련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남한의 북침론을 대대적으로 정치선전을 하였고 이승만정부의 무력복진통일에 맞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사회의 정치사상적 분위기를 보면,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정치세력들은 ‘헌법개정반대, 평화헌법수호’, ‘미일안보조약반대’, ‘비동맹 중립주의’, ‘재군비 반대’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본사회에서 평화주의노선으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즉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제도적 정치권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평화주의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본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편승한 북한의 평화통일론은 일본사회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여기에는 이승만정부의 철저한 반일정책노선이 기여한 점도 있다. 이승만정부는 반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을 나포하고 억류하였는데, 일본국민들은 그와같은 이승만정부를 호전적으로 보게 되었고 따라서 이승만정부의 북진무력통일론보다 북한의 평화통일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사회의 반응은 재일교포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대체로 재일교포사회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므로 무력통일에 대해서는 反통일정책으로 간주하고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즉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재일교포사회는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이승만정부의 북진무력통일론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의 차원이 아닌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였고 민족평화통일론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²⁶⁾

요컨대 북한과 조총련은 평화통일론에 따른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재일교포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지지의 확대와 더불어 ‘평화에호적이며 민족주의적’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아울러 조직을 확대·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발판으로 조총련이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勢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에 적지않게 기인한다. 조총련은 朝鮮新報社를 언론·출판 선전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그밖에 朝鮮通信社, 九月書房, 時代社, 學友書房, 朝鮮畫報社 등을 통하여 북한과 조총련의 노선 및 입장을 홍보하는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였다.

조총련계에서 발간되는 주요 기관지만 살펴 보아도, 「朝鮮新報」(日刊, 韓國語), 「朝鮮新報」(週刊, 日本語), 「總聯週刊」(韓國語), 「祖國」(日刊, 韓國語), 「朝鮮通信」(日刊, 日本語), 「朝鮮英文通信」

26) 이승목, 앞의 논문, p. 55.

(日刊), 「朝鮮書報」(月刊, 日本語), 「朝鮮青年」(週刊, 韓國語), 「朝鮮青年」(月刊, 日本語), 「朝鮮女性」(月刊, 韓國語), 「朝鮮商工時報」(週刊, 日本語), 「文藝學術」(月刊, 韓國語), 「朝鮮大學新聞」(日刊, 韓國語), 「朝鮮大學新聞」(月刊, 日本語), 「친한동무」(旬刊), 「セセテ」(月刊, 日本語), 「朝鮮資料」(月刊, 日本語), People's Korea(週刊)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朝鮮新報」(日刊, 韓國語)²⁷⁾이다.

또 조총련은 예술활동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북한과 조총련을 홍보하는 영화상영은 물론, 中央藝術團, 朝鮮演劇團, 金剛山歌劇團 등을 전국 순회공연시켜 재일교포들의 민족적 정서와 他國살이의 애환을 달래주면서 북한과 조총련의 정책노선을 홍보하고 그 지지를 확대시켜 나갔다. 재일교포들의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이데올로기를 넘어 교포사회에 널리浸透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총련의 선전활동은 일본사회 및 교포사회에 대하여 조총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총련의 선전조직은 대체로 1960년대 前半에 걸쳐 대대적으로 확대·발전된다. 즉 뒤에서 곧 언급할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하여 조총련의 조직 및 재정적 기반이 비약적으로 증대될 때 확대된 것이다.

27) 「朝鮮新報」(日刊, 韓國語)는 1945년 해방직후 朝聯의 기관지 「朝鮮民家新聞」이 1946년 9월 「解放新聞」으로 개칭되고 1956년 12월 20일에 다시 「朝鮮民報」로 개칭되었다가, 1961년 1월에 현재의 「朝鮮新報」로 개칭되었다. 「朝鮮新報」는 1961년 9월 9일부터 日刊化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조총련의 교육사업

한민족은 유교의 영향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재일교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방된 재일교포들은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국어강습소」를 세우고 여기에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자녀들을 입학시켜 한글을 비롯한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朝聯」의 등장과 더불어 「國語講習所」는 1946년 봄부터 재정비되어 초등교육 전반에 걸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들의 교육열을 고려해 볼 때, 재일교포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교포사회에서 조직의 확대 및 영향력의 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의식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대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조총련의 결성과 더불어 재일교포 교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1955년 5월 25일 조총련이 결성됨과 동시에 채택된 「朝總聯 結成大會決定書」에서는 교육기본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① 앞으로 조총련은 북한의 배려에 의한 교육행정면의 지도적 책임을 진다.
- ② 북한의 교육체제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헌법과 교육관

계 諸법규를 준수하고 전반적인 민족교육을 행한다.

③ 북한의 교육노선에 입각하여 제일 조선인의 교육을 발전 시킨다.

④ 종래의 일부 잘못된 정치주의적 편향(일본공산당에 협력해서 일본의 공산혁명에 참가하는 정치교육)을 시정한다.

이와 같은 교육기본정책을 설정한 조총련은 1956년 2월에 개최된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북한의 인민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등에 관한 규정을 일본의 여러 정세에 적합하도록 약간 수정하고, 조총련교육의 기본목표·교육방침 등 주요지침인 「各級學校規定」을 제정·채택하였다. 나아가 조총련은 「在日朝鮮人學校規定」에서 교육목적을 “인민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교양을 시행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켜 민주조국건설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한다”고 정하였으며,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였다.

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과 정강에 기초를 두고 학생의 정치적 훈련 강화에 주력하며 諸般민주과업의 국가적 사명을 자각시킨다.

②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실하게 복무하는 애국사상을 배양시킨다.

③ 모든 비과학적 사상을 일소하고 사물현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토록하여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케 한다.

④ 노동의 의의와 기술의 중요성을 자각시킴으로써 생산의 식을 향상시키고 국가자원의 애호,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⑤ 민족문화를 규명하고 계승함과 동시에 소련을 비롯한 선진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민주주의 조선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⑥ 규율을 지키고, 개인을 인민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민주도덕의 실천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킨다.

요컨대, 조총련 교육의 기본정책은 북한의 교육노선에 입각하여 한편에서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조총련의 공산주의사상 교육은 1958년 8월경부터 재일교포 北送運動이 추진되면서 강화되었다.²⁸⁾

이와 같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에 대해 북한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재일교포의 민족교육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조총련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교육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즉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했던 1957년 4월에 북한은 1억 2,100만엔(61만5천5백80달러)의 교육자금을 조총련에게 지원하였다.²⁹⁾ 그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매년

28) 李瑜煥, 「재일한국인60만」(東京: 洋洋社, 1971) pp. 225-228.

29) 1957년 한국정부는 재일교포를 위한 교육지원 자금으로 2만2천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1/28에 지나지 않는다.

‘新年축하’ ‘김일성 생일’ ‘북한정권 수립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등에 학교운영비 및 장학금 명목으로 조총련의 교육자금을 지원하고 있다(<표 2>참조).

또 북한은 교육지원자금과 병행해서 교육활동가에게 훈장, 메달, 공훈교원, 인민교원 등의 명예칭호를 부여하고 아울러 박사, 교수, 준박사, 부교수의 학위·학직까지 수여하면서 조총련의 교육사업을 지원하였다.³⁰⁾

현재 조총련은 일본의 47개 都道府縣가운데 27개 지역에 67개의 유치원, 83개의 초급학교, 56개의 중급학교, 12개의 고급학교, 1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외교포조직이 세운 유일한 대학인 朝鮮大學은 1956년 4월에 2년제 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북한의 재정적 지원아래 1958년 3월부터 4년제 대학으로 성장하였고 1968년 4월에는 사회당출신의 美濃部 東京都지사로부터 ‘各種學校’로 인가를 받았다. 조선대학의 인가를 전후하여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총련의 각급학교들도 속속 인가를 받았다.³¹⁾

이와 같이 일본의 여러 지역에 유치원부터 고급학교까지 설립하고 대학까지 세웠다는 것은 조총련의 커다란 업적이기도하다. 그리고 북한지지의 입장에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

30) イム・チョンスク, 「在日僑胞たちの法的地位」(ピョンヤン, 1990) p.163., 安夢彌 “日本の在日朝鮮人政策と日本”, 「미소연구」 제7집(1994)에서 재인용.

31) 조총련은 조총련계 학교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교육투쟁을 하였는데, 1967년 3월부터 1년간 전개된 투쟁집회에 연 14만명의 교포들이 동원되었다. 또 조총련의 교육반대투쟁에는 일본의 6,000여 사회단체, 5,300여 명의 학자, 문화인, 법률가들을 포함한 3만여명의 각계인사들도 참가하였다.

본대생의 교포 2세, 3세들을 위하여 한글교육과 역사,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조총련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업적이다.³²⁾

그러므로 조총련계 교포들뿐만 아니라 민단계교포들의 자녀들도 적지않게 조총련계 학교를 다닌 것이다. 재일교포사회에서는 “며느리는 우리글과 우리풍습을 아는 조총련계 출신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는 여담도 있다.

한편, 조총련은 조직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일본전역에 있는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총련은 민족학교를 재일교포들의 결집의 場으로 이용하였고, 민족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광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케 하여 세력확대를 도모하였다.³³⁾ 사실 조총련계 학교의 사상교육은 조직구성원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하여 조직의 확대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조총련계 민족학교출신졸업생들의 사상적 성향은 대체로 일본자본주의체제의 틀내에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정치적으로는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요컨대 북한의 막대한 교육자금지원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밑거름이 되었고 아울러 조총련의 조직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였

32) 제일한인 좌익계 세력과 조총련계의 교육사업은 북한에 이용당하는 면도 있었지만 민단계가 할 수 없었던 업적을 남겼다. 허동찬 “조총련 교육”,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33) 지금까지 조선대학 졸업생이 1만명이다. 재일교포가 70만명이므로 교포 70명 중 1명이 조선대학 졸업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졸업생들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는 재일교포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선대학 졸업생은 조총련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이는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표 2> 북한의 교육지원 자금(1957-1990년)

(단위: 천엔)

회	연월일	금액	회	연월일	금액	회	연월일	금액
1	1957.4.19	121,099	12	1963.6.29	202,770	23	1967.3.8	303,420
2	1957.10.9	100,510	13	1963.9.1	186,852	24	1967.7.24	201,420
3	1958.3.28	100,000	14	1964.4.28	303,930	25	1967.10.9	301,950
4	1958.9.25	100,210	15	1964.7.31	302,940	26	1967.12.22	194,246
5	1959.2.19	176,382	16	1964.11.4	201,400	27	1968.2.5	305,025
6	1959.9.30	114,654	17	1965.3.31	302,038	28	1968.6.4	347,305
7	1960.2.26	202,100	18	1965.8.27	202,020	29	1968.10.12	345,783
8	1960.8.31	217,392	19	1965.11.23	303,450	30	1969.2.10	299,754
9	1961.3.17	411,066	20	1966.2.28	303,570	31	1969.4.3	350,960
10	1962.3.14	558,470	21	1966.8.29	201,860	32	1969.8.5	298,261
11	1963.3.21	401,440	22	1966.11.25	303,210	33	1969.10.14	247,950

회	연월일	금액	회	연월일	금액	회	연월일	금액
34	1970. 2. 8	303,121	62	1976. 4. 9	700,000	90	1983.12.30	333,500
35	1970. 4. 7	300,755	63	1976. 9.30	641,182	91	1984. 2.15	364,755
36	1970. 9. 8	297,780	64	1976.12.29	492,950	92	1984. 4.13	353,540
37	1970.10.26	302,850	65	1977. 4.10	500,000	93	1984. 9. 8	313,200
38	1971. 1.30	302,365	66	1977. 9.25	924,500	94	1984.12.31	291,100
39	1971. 4. 8	301,945	67	1978. 1. 7	462,589	95	1985. 2.26	261,300
40	1971. 8. 5	301,910	68	1978. 4.19	500,000	96	1985. 4.12	254,050
41	1971.10. 3	289,345	69	1978. 9. 4	500,000	97	1985. 9. 5	238,700
42	1971.12.20	302,827	70	1978.12.20	500,000	98	1985.12.31	243,240
43	1972. 1.30	300,825	71	1979. 4.15	500,000	99	1986. 2.15	187,910
44	1972. 4. 9	318,060	72	1979. 9. 8	500,000	100	1986. 4.11	180,100
45	1972. 7. 6	342,270	73	1979.12.14	550,000	101	1986. 9. 9	155,100
46	1972.10. 9	363,425	74	1980. 1. 1	420,000	102	1986.12.29	163,080
47	1972.12.29	357,225	75	1980. 4.13	546,000	103	1987. 2.13	153,550
48	1973. 2. 8	355,925	76	1980. 9.12	515,000	104	1987. 4.13	145,400
49	1973. 4. 7	374,176	77	1980.10. 9	493,000	105	1987. 9. 7	141,550
50	1973. 7.23	334,725	78	1980.12.31	485,000	106	1987.12.29	126,450
51	1973. 8.31	321,421	79	1981. 2.19	473,000	107	1988. 2.15	128,800
52	1973.12.28	369,684	80	1981. 4.15	465,000	108	1988. 4.12	125,700
53	1974. 3. 2	362,010	81	1981. 9. 7	418,000	109	1988. 9. 6	136,080
54	1974. 4.11	595,170	82	1981.10.10	423,400	110	1988.12.29	125,100
55	1974. 5.18	601,425	83	1982. 2.16	435,000	111	1989. 2.17	251,600
56	1974.10.26	697,150	84	1982. 4.11	648,000	112	1989. 9. 6	214,650
57	1975. 1. 1	703,450	85	1982. 9. 9	440,000	113	1989.12.27	142,300
58	1975. 1. 1	752,584	86	1982.12.30	385,000	114	1990. 3.13	144,000
59	1975. 4.16	1,060,122	87	1983. 2.15	363,000	115	1990. 4.12	158,000
60	1975. 5.25	608,265	88	1983. 4.14	358,000	116	1990. 9. 5	143,500
61	1975.12. 5	613,350	89	1983. 9.28	369,200			

<출처> 「朝鮮總聯」(東京: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1991) p. 73

다. 조총련의 금융사업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재일 한인 1세, 2세대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서 일본각지의 탄광, 철도 및 도로건설, 군수공장 등에 노동자로 일하며 하층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특히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재일교포들은 토목공사장의 인부, 가방·구두·고무타이어·넙비 등의 수리공으로 일하거나 영세한 ‘곱창구이집’, ‘국수·수제비집’, 판매업 등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활을 영위하였다. 日本 法務省 入國管理局이 편찬한 『出入國管理와 그 實態』(『出入國管理とその實態』, 1959年版)를 보면, 약 60여만명의 재일교포 가운데 무직자가 45만 9천여명정도이다.

또 ‘맨주먹’으로 상공업을 시작한 재일교포들은 일본정부의 규제, 차별에 의한 어려움은 물론,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무척 고생을 하여야 했다. 일본은행들은 일본기업들도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더우기 ‘재일교포들은 귀국해버리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따라서 재일교포들은 민족적 차별을 극복하고 상공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민족금융기관의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일본당국은 民團계와 「朝聯」계 공동운영을 조건으로 同和信用組合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1952년 6월 20일 同和信用組合이 운영되면서 神戶, 川崎, 名古

屋, 京都, 大阪 등 8군데에 민족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10군데, 1962년에는 19군데가 세워졌다.

그런데 同和信用組合은 민단계와 조총련계간의 갈등으로 내분을 겪다가 1961년 5월 제 9차총회의 조총련가맹 결정과 더불어 조총련기관으로서 발전을 하게 되고 명칭도 朝銀 東京信用組合으로 바뀌게 된다. 조총련의 금융사업은 朝銀信用組合을 일본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총련계 금융조합의 발전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송금되어 오는 교육사업 지원금 및 장학금이 朝銀信用組合에 예치되는 것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와 같은 북한의 금융자금의 지원을 배경으로 조총련은 朝銀信用組合을 일본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금융사업을 전개한 것이다.

朝鮮信用組合은 조총련의 결성당시에는 8군데의 信用組合, 14개의 점포, 8억 8천만엔의 예금액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 6월경에 이르러서는 38군데의 信用組合, 176개의 점포, 2조 375억엔의 예금액 규모로 성장하였다.

조총련의 금융사업 추진은 朝鮮信用組合 등 조총련계 금융조합을 확대·발전시켰고, 그러한 조총련계 금융조합은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민족차별과 불리한 대부조건에 고생하던 재일교포 및 교포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조총련계 교포뿐만 아니라 민단계 교포들도 조총련계 금융조합을 이용하였다.

현재 조총련계 상공인은 약 2만2천여명 정도인데 이들은 빠칭포, 부동산업, 불고기집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3백억-4백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朝銀信用組合을 비롯한 조

총련계의 금융조합은 이들의 사업이 성장하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조총련의 교육사업이 재일 교포사회에 문화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쳐 조직의 확대발전에 기여하였다면, 금융사업은 재일 교포사회의 경제적 기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확대발전에 이바지한 것이다.

라. 조총련의 재일교포 北送事業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측은 일본정부에게 재일교포의 복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조총련도 1958년 8월 12일 東京에서 열린 8·15해방 13주년 기념대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宣傳要請文을 통하여 “재일본 조선인의 북조선귀국을 보장하여 조속히 그것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망한다”고 공식적 차원에서 주장하였다. 그리고 同年 9월 8일 김일성은 북한정권 창건 10주년 기념대회에서 “無權利와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일본에서 생활의 길을 잃고 조국의 품속에 돌아오고 싶다는 그들의 염원을 熱烈히 환영한다. 공화국 정부는 재일동포가 조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보증해 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민족적 의무로 생각한다.”고 연설하면서 조총련의 재일교포 복송운동을 격려했다. 또 同年 9월 16일 북한의 남일 외교부장은 “최근, 재일조선공민은 자기들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귀국하여 안정된 생활

을 누리고 싶다는 염원을 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 줄것을 공화국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공민들은 실업과 無權利에 의하여 극도로 비참한 생활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향유치 못하고 있으며, 진학과 졸업후의 생활안정을 보장 못받고 있다. ----- 우리들은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에 귀국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조선공민을 우리측에 인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한다”며 한층 박차를 가했다.³⁴⁾

이와 같은 북한측의 요구에 응하여 일본정부는 1959년 2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희망하는 재일교포에 한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간에는 1959년 4월 13일부터 제네바에서 17차에 걸친 교섭회의를 하게 되고, 마침내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켈커타에서 일본 적십자대표와 북한 적십자대표간에 재일교포의 北送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다.³⁵⁾ 재일교포의 북송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총련의 재일교포북송사업은 일본정부의 보조 아래 추진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제1차 재일교포의 북송이 실시된 이래, 1967년 11월 12일 북송협정이 폐기될 때까지 155차례에 걸쳐 총 88,611명의 교포이 니카타(新潟)항구를 통하여 북한으로 보내졌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의 북송사업에 관련된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34) 이승목, 앞의 논문, pp. 59-60.

35) 중앙정보부, 앞의 책, p. 113.

첫째, 당시 북한은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을 겪고 있었으므로 노동 공급전략의 일환으로 북송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북한은 동포에 차원에서 북송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재일교포사회에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일교포사회 전체를 적화시킨다.

셋째, 한국이 재일교포의 북송반대를 반대할 경우, 이를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는데 이용한다.

넷째,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재일교포북송사업이 었지만, 조총련계 교포사회에서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속에 서럽게 살고 있는 재일교포들을 구출해 주는 민족주의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 졌다. 즉 재일교포들이 155차례에 걸쳐 88,611명이나 북한으로 간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조총련계 교포들은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조총련의 북송사업이 그렇게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호응을 받으며 전개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일교포 1세·2세들은 일본에 정착하기보다는 조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사회에서는 재일한인들을 한반도로 돌려보내라는 여론이 있었다.

둘째,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회가 못 되었고 더우기 당시의 재일교포들은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취직도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장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셋째, 재일교포들은 소박한 민족감정에서 남의 나라 일본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조국의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넷째, 당시의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교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³⁶⁾

다섯째, 재일교포들은 북한의 사정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었으므로 조총련과 일본의 혁신계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지상낙원론’ 선전에 현혹되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막대한 교육 원조비 및 장학금은 재일교포들이 그 와같은 환상을 갖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재일교포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조총련의 북송사업에 적극 호응토록 한 것이다.

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은 1966년 8월 북송협정의 폐기와 더불어 일시 중지 되었지만, 1971년 2월 북송재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속 추진되었다.³⁷⁾

이와 같이 재일교포들의 호응속에 전개된 조총련의 북송사업은 조총련의 재정기반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조총련은 북송교포들에게 (1) ‘지상낙원’ 북한에 가면 모든 생활을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고 선전하였고, 나아가 (2) 조총련에 돈이나 집 등 재산을 기부하였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 반대급부로 우대를

36) 조총련에 의한 북송사업이 시작된 4개월후 한국에서는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정권이 붕괴하고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정국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게다가 ‘보리고개’ 등 경제적으로는 절대 빈곤상태에 있었다.

37) 1996년 현재 북송교포는 93,33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받는다는 선전을 하였다. 즉 북한은 북송교포들의 재산기부를 유도하는 선전공세를 펼친 것이다.

그 결과 북송교포들의 상당한 재산이 조총련에 기증되었다. 이로써 조총련의 재정적 기반은 북송교포들의 재산기증, 조총련계 교포들의 경제적 기반강화 등으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以上에서 살펴 본와 같이 조총련은 민족교육사업, 재일교포 북송사업 등을 계기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그와같이 조직을 확장하고 세력을 확대한 조총련은 일본의 좌파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그 폭을 넓혀 나갔다.

조총련은 1950년대까지는 주로 일본공산당과 직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1960년대후반부터 변화를 나타내었다. 특히 북한과 조총련은 일본의 정계 및 의회에 접근하기 위하여 제 1야당인 사회당에게 접근하였다. 조총련의 사회당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1971년 11월 16일 일본 사회당을 기반으로 하는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결성되도록 하였다.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결성됨에 따라 일본사회에서 조총련의 위상은 제고되었고 아울러 일본·북한의 관계까지도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즉 북한과 조총련에게 있어서 일본공산당보다 사회당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북한·조총련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는 1972년 일본 공산당이 기관지인 「赤旗」에서 김일성의 환갑잔치소동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상당한 불편한 관계로까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정당차원에서 전개될 경우 사회당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제Ⅳ장 조총련의 쇠퇴와 문화적 갈등

1. 朝總聯의 衰退

가. 조총련의 내분과 조직의 약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총련은 1955년 한덕수 등의 민족주의파와 일본 공산당계의 민족대표파의 대립속에서 결성되었다. 따라서 결성이후에도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주도권 쟁탈로 내분이 생길때마다 한덕수계 세력을 지원하고 그 반대세력은 북한으로 소환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였다.³⁸⁾

그런데 한덕수와 그 측근간의 주도권 쟁탈인 소위 ‘김병직 사건’은 내부 권력투쟁 수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김병직 사건’을 살펴보면, 한덕수의 조카사위로서 한덕수체제의 핵심인물이었던 김병직 제1부의장은 한덕수를 제쳐놓고 일본의 정계, 재계, 언론계의 ‘평양창구’ 역할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즉 김병직 제1부의장은 북한진출을 희망하는 재계인사를 중심으로 ‘평양방문 경제사절단’을 조직하는 등 일본·북한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김병직 제1부의장은 김일성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따라서 1972년 8월 30일 ‘제1

38) 이왕세 “재일 조총련의 성장과정과 활동실태”, 『統一論叢』 제4권 2호 (통권 77호), p. 92.

차 남북적십자회담'의 자문위원으로서 선출되자 김일성의 신임을 바탕으로 한덕수의 존재를 無力化하기 시작하였다. 한덕수와 김병직사이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권력암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와 김병직의 암투가 노골화되자 북한은 니카타항구에 정박중인 만경봉호에 조총련 활동가들을 집결시킨 후 한덕수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다. 요컨대 북한은 일단 한덕수의장의 유일 지도체제를 확립시킨 후 김병직을 다시 그밑에 복귀시켜 활동을 재개시키려는 의도에서 한덕수를 옹호한 것이다.

그러나 조총련의 내부수습과정에서 김병직에 대한 반발이 너무 컸으므로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김병직을 실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병직은 남북적십자회담의 북측 자문위원으로 평양에 가있다가 돌연 실각되어 일본으로 돌아 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김병직 사건'은 단순히 내부권력투쟁수준에서만 그치지 않고 조총련의 조직 및 활동, 일본·북한관계의 개선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일본측은 대북한교섭 상대자의 돌연 실각에 따라 조총련을 불신하게 되었고, 또 김병직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한덕수의 비리가 폭로됨에 따라 조총련과 북한의 도의적인 권위와 위신이 실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의 약화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김병직 사건'이 조총련의 조직 및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김병직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한덕수의 재정부정 및 조직의 私物化 등을 포함하여 조총련의 비행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조

총련과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권위와 위신이 실추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재일 조총련계의 상공인들의 조총련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되었다. 즉 조총련 조직의 재정적 기반의 약화와 더불어 조직의 쇠퇴가 가속화된 것이다.

둘째, 김병직이 축출되고 한덕수 유일체제가 확립되었으나 주류계의 내분이었던 만큼 그 후유증도 상당히 컸다. 즉 조총련 조직은 전체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약화되었다.

셋째, 한덕수는 북한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요직에서 김병직 및 김병직 계열의 세력을 축출하였으므로, 조총련의 북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북한노선을 한층 강하게 추종하게 되었다. 이는 조총련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경직시켜 결과적으로 조직의 쇠퇴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조총련의 약화와 더불어 한덕수일파는 북한에 대한 충성심의 과시로 명맥을 유지하여야 했다.

넷째, 1972년 닉슨 美대통령의 방국방문, 일본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남북한간의 대화진전과 그에 따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 등 국제정세 분위기는 데탕트적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국제환경의 데탕트적인 상황속에서 일본과 북한의 접근은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었다.³⁹⁾ 그런데 그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일본의 정·재계 및 언론계의 공작을 담당하였던 김병직이 남북접십자회담의 북측 자문위원으로 평양에 가있다가 돌연 실각되어 일본으로 돌아 올 수

39) 1971년 11월에 자민당의 쿠노츠히(久野忠治)의원을 임시회장으로 하고 234명의 자민·사회당 의원들로 구성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설립하였다. 일본정부는 국제환경의 데탕트적 상황속에서 정부간 수준의 외교채널을 대신하여 일본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채널을 대북한접촉창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각계내부에서 조총련과 북한의 위신과 권위를 상당히 실추시켰다. 일본측은 대북한교섭 상대자가 실각함에 따라 대북한 접근계획을 포기하여야만 했다.

만일 김병직이 실각되지 않았더라면 일본·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진전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조총련은 일본사회 및 재일 교포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지상낙원론의 붕괴와 조총련의 쇠퇴

북한에서 1960년대후반부터 추진된 김일성의 신격화 및 그의 족벌우상화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조총련에서도 1972년 4월 김일성의 환갑축하행사를 전조직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총련은 50억円이상의 금품을 거두어 환갑선물로 김일성에게 바쳤다. 그런데 그와같은 조총련의 대대적인 김일성 환갑축하행사는 재일 조총련계교포들의 적지않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김일성의 신격화와 代를 이은 김정일의 후계자지명은 재일 조총련계 교포들의 조직이반 현상을 초래하였다. 조총련계 교포들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의私有化·세습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우기 북송교포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조총련의 터무니 없는 '지상낙원론' 선전은 한계에 부딪치게되었다. 즉 북송된 가족이나 친지들이 편지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오면서,⁴⁰⁾ 조총련계 교포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이나 생활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울러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환상의 붕괴는 자연히 북한 및 조총련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조총련의 대대적인 선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고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즉 김일성의 신격화 및 권력세습에 대한 조총련계 교포와 일본 좌파지식인들의 반발, '지상낙원론'의 붕괴 등으로 조총련의 구심력이 약해지고 조총련계 교포들의 조직이반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총련의 조직은 점차로 쇠퇴하게 된 것이다.

조총련의 구심력 약화에 따른 조직의 쇠퇴는 한국정부가 조총련계 교포의 모국방문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한층 가속화되었다. 한국정부와 民團은 1975년 4월부터 조총련계 교포의 省墓訪韓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한국정부와 民團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제일 조총련계 교포 포용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75년 추석, 북한을 지지하고 한국정부를 적대시하였던 조총련계 교포들은 대부분 30년만에 한국의 고향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성묘를 하고 친지들을 만난뒤 일본으로 돌아 갔다. 이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형제와 재회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일본의 TV,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되자, 성묘단사업은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었고 연말연시, 한식, 단오절 방문단으로 계속 확대·발전되어 갔다.

한편 성묘단에 참가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조총

40) 북송교포들로부터의 편지는 공통적으로 일본에서 생필품을 부쳐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유적 표현으로 북한에 오지 말라는 것도 있었다.

런계 교포들은 북한과 조총련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정치적, 사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더우기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총련계 교포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환멸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성묘단으로 한국을 다녀온 교포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총련의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였고, 또 조총련의 조직과 인적·경제적 관계때문에 부득히 이탈할 수 없었던 교포들은 조직의 활동에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즉 한국정부와 민단의 성묘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조총련의 구심력은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조직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요컨대, 재일 조총련계 교포의 모국성묘단 사업은 조총련계 교포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과 동시에 조총련의 조직을 근거에서 약화시켰던 것이다.

다.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조총련의 몰락

조총련 주류의 내분, 북한실상에 대한 파악과 지상낙원론의 붕괴, 한국정부 및 민단의 성묘단 사업에 따른 조총련계 교포사회의 동요 등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조총련의 쇠퇴는 일본 국내환경의 변화와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층 가속화되었다.

먼저 일본의 국내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사회에는 고도성장 및 경제발전의 귀결로서 계층의식이나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계급(혹은 계층)시스템의 비구조화가 진행되

었고, 그 결과 경제적 생활상 中流意識을 가지고 있는 新中間大衆 (new middle mass)이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사회에서의 新中間大衆은 大衆消費, 大衆教育, 大衆媒體라는 거대한 먹사기에 의해 생활양식이 균질화됨에 따라 나타나게 된 새로운 계층으로서 화이트 칼라(white color), 블루칼라(blue color), 농민, 자영업주 등의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인구의 '거대한 중앙부분'이다.⁴¹⁾ 이는 전후 고도경제성장의 덕택으로 생활양식상 하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계층이 일본사회에서 매우 적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화이트칼라를 비롯하여 블루칼라, 농민, 자영업주 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소비의 고도화, 사회보장제도의 충실, 대중교육의 고도화를 향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⁴²⁾

富永建一은 『日本の階層構造』(1979)에서 1975년경에 이르러 일본국민의 약 90%가 중류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村上泰亮는 富永建一의 견해를 받아들여 '新中間大衆의 時代'라는 주장을 펼쳤다.⁴³⁾

이와 같은 新中間大衆의 등장은 일본사회를 保身化시키면서 정치적으로는 계급정치의 쇠퇴를 초래함과 동시에 이익정치의 기반을 조성시켰고, 지지정당없는 층을 증대시켰다. 즉 新中間大衆이 등장함에 따라 이데올로기 정치의 기반은 약화되고 혁신정당에

41) 村上泰亮 『新中間大衆의 時代』 東京 中央公論社 1985 p.226 ; 村上泰亮·公文俊平·佐藤誠三郎 「文明としてのイエ社會」 (東京: 中央公論社, 1981), pp. 528-529.

42) 富永建一編, 「日本の階層構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9) p. 376.

43) 村上泰亮의 앞의 책(1985)이 그러한 주장을 펼친 책이다.

대한 지지율은 격감한 것이다.

일본사회의 保身化에 따른 혁신세력의 약화는 1980년대 후반이후의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층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이후의 국제환경의 변화를 보면, 1989년에 일어난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이라는 대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미·소를 양축으로 형성되었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과도기적 정치적 변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변동은 일본 국내정치와 '보수 대 혁신'의 대결구도가 붕괴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계 정당들의 지지기반을 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탈냉전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1993년 7·18총선이후 일본의 정치는 55년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정치적 틀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공간은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계세력이 침화하면서 거의 보수·우경화로 변화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조총련과 조총련계 교포사회도 탈 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전환기적 변화, 일본국내의 정치·사회적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본 국내외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구도가 붕괴됨에 따라 조총련계 교포사회는 이데올로기보다도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44) 배정호 "일본 新保守勢力의 등장과 대외정책 전망", 「日本の 政策變化와 將來」 (서울 : 산업연구원, 1996)

가올이게 되었다. 그리고 조총련계 교포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3·4세의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혁신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조총련계 교포사회의 변화는 조총련의 기반침화 및 쇠퇴로 직결되었다.

<표 3>에 나타나있듯이 재일교포사회의 국적상황을 살펴보면, 조총련의 출범당시에는 韓國籍 25%, 朝鮮籍 75%였는데, 한일국교 정상화가 된지 4년후인 1969년에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1992년에 이르러 韓國籍 78%, 朝鮮籍 22%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 朝鮮籍의 재일교포들은 일본국적으로 귀화하거나 韓國籍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1900년대 이후 조총련계 교포의 한국적 취득자는 약 3만 명정도이다.

<표 3>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에 나타난 韓國籍과 朝鮮籍

	연말·한국 조선인 등록 총 수	「한국」 기재 (韓國籍)	「조선」 기재 (朝鮮籍)
1955	577,682	143,889 25%	433,793 75%
1960	581,257	179,298 31%	401,959 69%
1965	583,537	244,421 42%	339,116 58%
1970	614,202	331,389 54%	282,813 46%
1992	688,144	535,200 78%	152,900 22%

<출처> <표 II-1>와 동일

朝鮮籍의 감소, 즉 조총련계 교포의 이탈은 조총련의 응집력이 그 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조총련계 교포 사회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총련의 핵심조직과 조총련계 교포사회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朝總聯의 文化的 葛藤

가. 조총련 교육사업의 갈등과 한계성

조총련은 일본 각 지역에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설립하고 이 민족학교를 재일교포들의 조직적·이념적 결집의 場으로 활용하여 세력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와같은 교육사업을 통한 조총련의 조직 확대 및 발전은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북한으로 부터 막대한 교육지원금을 원조받는 조총련계 학교는 한글공부 등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공민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상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총련계 학교에서는 교실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비치되고 각종행사 때에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찬가가 제창되며 주체사상교육이 중시되었다.

그런데 조총련의 주체사상교육은 북한 및 조총련의 쇠락과 더불어 재일교포사회가 1세에서 2·3·4세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재일교포 1세들이 가슴속에 늘 '언젠가는 고국으

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2·3·4세대들은 일본사회에 定住하려고 한다. 즉 재일교포 2·3·4세대들이 일본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치사상교육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경쟁사회인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재일교포 3·4세대들이 조총련계 학교의 개인승배교육에 거부반응을 나타내면서 조총련계 학교의 입학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계 학교의 학생수를 보면, 1985년에 2만2천명이었던 것이 1993년에 이르러서는 5천명이 감소하여 1만7천명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조총련계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1, 고교 12, 중급 52, 초급 76 등 총 142개교가 일본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학교는 학생수가 줄고 북한으로부터의 교육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교육지원금은 1957년부터 95년까지 총 132회에 걸쳐 424억 9,000만圓이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어려움때문인지 대폭 감소되고 있다.(<표 4>참조)

<표 4> 최근 북한의 교육자금지원 추이

(단위 : 천圓)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금 액	265,000	381,000	327,000	313,000	361,000

즉 조총련의 교육사업은 한계에 도달해 있고 조총련계 민족학교의 장래는 상당히 어두운 것이다. 조총련 교육사업의 갈등 및 한계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총련계 민족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 정해져 있는 정규학교 즉 '1條校'가 아니고, 학교교육법 제 83조에 정해져 있는 '各種學校'로 認可받았다. 따라서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은 졸업후 檢定試驗을 통해서 學歷檢定을 받아야 했다. 이는 조총련이 일본 文部省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직원 채용, 교과서검정, 교과과정편성 등에 있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즉 조총련으로서는 일본 文部省의 재정적 지원대신 북한으로부터 교육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교육 등 북한공민으로서의 사상교육을 시행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일본사회에서의 학력 불인정은 일본사회에 정주하려는 재일교포 3·4세들로 하여금 조총련계 학교를 기피토록 하였다.

둘째, 재일교포 3·4세들은 대체로 일본형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차원에서는 상당히 일본사회에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재일교포 3·4세들은 북한공민교육을 지향한 조총련계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재일교포 3·4세들은 조총련계 학교의 교육이 일본사회에서 취직을 하는데는 물론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조총련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북한으로부터의 교육지원금의 대폭 감소는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조총련계 학교의 재정적 고충은 조총련의 교육사업의 한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조총련은 以上과 같은 조총련 교육사업의 갈등, 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 1992년부터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착수하였고, 나아가 (2) 일본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의 公的 援助를 받기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총련계 학교가 일본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일본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북한으로 이탈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조총련 출판문화사업의 갈등과 한계성

조총련은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출판문화사업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조총련은 「조선신보」, 「朝鮮畫報」 등을 통하여 조총련의 조직활동 및 산하단체의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보도를 하면서 조총련계 동포들에게 주체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계 교포사회가 1세에서 2·3세중심으로 바뀌고 3·4세 교포가 증가하면서 조총련 출판문화사업은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2·3·4

세 교포들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개인우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모금강요에 불만을 나타내었고, 아울러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숭배에 치중하고 있는 조총련계 기관지들에 대해서도 외면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조총련계 2·3·4세 교포들의 조총련계 기관지에 대한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조선신보」, 「朝鮮畫報」 등의 판매부수 및 구독부수는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즉 경영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조선신보」는 월 2,06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하는 독자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발행부수를 1995년에 3만 2,000부로 격감시켜야 했다.(1990년에는 60만부) 현재 「조선신보」는 연간 4억 원이상의 적자때문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朝鮮畫報」 역시 구독부수의 감소에 따라 광고수입이 줄어 들면서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고, 따라서 1995년에는 발행부수를 1만 2,000부로 대폭 감소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출판문화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총련은 산하 유관 사업체로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九月書房」을 「조선신보사」와 통합하여 적자재정의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구독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2일부터 「조선신보」의 내용을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생활, 문화, 오락, 취미 등에 관한 기사를 확대하였다. 또 조총련은 1996년 3월 5일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래의 북한선전위주의 「朝鮮畫報」대신 새로운 잡지의 창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즉 조총련은 「朝鮮畫報」을 폐간하고 1996년 7월부터 새로운 잡지 「이어」(日本語)⁴⁵⁾을 발행하였

다. 「이어」는 조총련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재일교포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법률, 문화, 스포츠, 취미, 오락 등을 양질의 칼러화보에 담고 있고, 광고도 조총련계 기업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全日空, 코카콜라 등의 선전을 싣고 있다. 앞으로는 민단계 기업에 대한 광고도 실을 계획이라고 한다.

조총련 기관지의 이와 같은 변모는 이념보다는 현실생활을 중시하는 3·4세 교포들이 증가함에 따라 구독률이 저하되고 경영난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조총련은 경영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젊은 3·4세 교포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새로운 대중교양·정보지를 지향하여 편집된 「이어」는 조총련계뿐만 아니라 민단계 젊은 세대들에게도 구독권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조총련은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과 탈냉전시대의 도래,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혁신세력의 침화, 재일교포사회의 3·4세로의 세대교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어」의 편집혁신 등 생존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45) 조총련은 1996년 3월 16일 10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새로운 잡지의 題號를 현상공모하였다. 공모 마감 결과 「이어」, 「바람」, 「날개」, 「한길」, 「메아리」, 「8·15」 등 2,206건이 접수되었다. 그중에서 조총련사회가 일본사회내에서 계속 발전하여 이어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 글인 「이어」가 채택되었다.

제 V 장 결 론

패전직후의 일본은 사회적으로는 산업시설의 파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무질서한 혼란상태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간접적이지만 미국의 점령통치아래에 놓여 있었으므로 사회주의 혁명 사상이 지식인 사회에서나 노동자사회에서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와같은 사상적 영향속에서 절대다수의 재일교포들은 자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신들의 고향 또한 미국의 통치아래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한국국적 대신 북한국적을 선택하였다.

즉 패전직후 일본사회의 정치·사상적 조류 및 재일교포사회의 정치·사상적 성향은 재일한인 좌파세력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사상적 환경속에서 「朝聯」이 좌경화되고 「朝防委」 및 「民戰」이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조총련은 재일교포사회의 중심적 단체로 등장한 것이다.

조총련은 1957년에 중앙집권적 체제로서 조직정비를 완료한 뒤 (1) 재일교포의 민족적 대중단체 (2) 북한 노동당의 일본지부 (3) 주일 북한대표부 (4) 북한의 재외경제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1) 조국의 평화통일 (2) 민족권리의 옹호 (3) 민족교육의 추진 (4) 북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정치목표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조총련은 평화통일운동의 적극적 추진, 민족교육사업의 전개,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이 미지를 개선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조총련은 주류의 내분, 재일교포들의 북한실상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지상낙원론의 붕괴, 한국정부 및 민단의 성묘단 사업에 따른 조총련계 교포사회의 동요 등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와 같은 쇠퇴는 (1) 일본국내의 정치사회적 변화, (2) 동구권 붕괴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 (3)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의 쇠락 (4) 재일교포사회의 1·2세에서 3·4세로의 세대교체 등으로 인하여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조총련의 쇠퇴와 더불어 朝鮮籍의 재일교포들은 일본국적으로 귀화하거나 韓國籍으로 국적을 이전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조총련계 교포의 이탈은 조총련의 응집력이 그 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조총련계 교포사회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조총련의 핵심조직과 조총련계 교포사회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조총련계 교포사회의 2·3·4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므로,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던 재일교포 1세들과는 달리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즉 조총련계 교포 2·3·4세들은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총련계 2·3·4세 교포들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경조사 등을 통하여 끈끈한 인적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조총련의 조직활동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계 교포들이 일본사회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 또는 마찰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에 기인한 이념적 갈등이나 마찰

보다는 민족적 차별에 의한 갈등이나 마찰이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1) 일본의 정치체제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을 체제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 (2) 조총련계 교포들이 민단계 교포들에 비해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민단계 교포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비하여, 조총련계 교포들은 일본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대립에 따른 민단과 조총련 핵심조직과의 갈등·대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있다. 또 조총련의 세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위기속의 조총련 핵심조직은 그 응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은 통일한국을 지향한 한국의 對재일교포정책,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파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바를 시사한다.

첫째, 한국의 對북한정책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對재일교포정책은 포용정책을 기조로 하면서도 조총련핵심조직과 조총련계 교포를 구분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은 한민족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의 민단계 재일교포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문화교육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단계 교포들이 주도하여 재일교포사회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남북한 통합시 통합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기인한

갈등이나 마찰이 커다란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 및 경쟁이 체제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혁신계 세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독일통일에 나타난 동독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연구

신 울*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통일후 동독지역의 문화적 갈등

제 III 장 문화적 갈등의 정치문제화

제 IV 장 독일정부의 대응책과 문제점

제 V 장 결 론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학 박사

빈 면

제 I 장 서 론

1. 문제제기

통일문화는 분단 반세기 동안 각기 다른 정치, 사회, 경제 체제하에서 살아야 했던 민족이 진정한 민족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통일이란 민족성이라는 의미의 구체적 표현인 「민족 문화」라는 추상적 결속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적 상황하에서 기능적으로 형성된 「국가 존재 목적」이라는 구체적 결속력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민족 공동체 형성이란 사회 심리학적 측면의 문화적 공동체론과 칼 도이치에 의해 자주 거론되는 기능적 공동체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공동체론은 하나의 집단 또는 사회내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 가치관을 사회 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민족의 고유한 의식, 종교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등의 믿음체계(belief system)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반면, 기능적 공동체론 사회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지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정치체계나 경제체계, 법, 교육체계등을 통하여 통합되어 하나의 유기적 사회체제가 성립,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공동체론은 상이한 두 가지의 시각이라기보다 민족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족 국가,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론이 서로 다른 기능의 필요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¹⁾ 즉, 민족 공동체의 형성은 문화적 공동체와 기능적 공동체가 시차적으로나마 일치했을 때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단계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또는 어느 단계가 통일에 더욱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독일의 통일 이전과 통일후의 사회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필자의 경우 이러한 의문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지켜본 경험으로부터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시킬 수 있었다. 「통일이후 부터 통일과정은 시작된다. 이 명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기능적 통일, 즉 기능적 공동체의 형성이 선행되었던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즉, 독일은 그들의 급진적인 통일과정 속에서 사회적 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에, 통일후 비로소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고 시도했으나, 이러한 독일인들의 시도는 서독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후 동독인들은 급작스러운 사회, 문화, 경제체제의 변화로 문화, 사회적인 아노미현상에 시달려야 했고, 서독

1)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6.

인들은 서독인대로 그들이 깊어져야 할 통일 비용과, 분단이후 거의 45년간 상이한 사회, 문화권에서 살아야 했던 동독인들의 이질적 사고 방식과 행동양식 때문에, 통일의 순간적인 기쁨보다 통일의 후유증에 지금까지 시달려야 했다. 독일은 오히려 통일이후 동-서독간의 문화, 사회적인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후부터 통일과정은 시작된다」라는 명제는 이러한 동-서독간의 통일이후 사회, 문화적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료히 시사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문제점을 볼 때, 기능적인 통합은 내부 정치적 원인에서나, 아니면 국제정치적 상황변화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통합은, 이러한 외적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진정한 통일은 오히려 사회, 문화적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을 논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과 그 대비책을 논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이 정치문화적 충격이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정치, 사회, 심리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서술,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동독지역 주민을 크게 성인과 청소년층(12세-18세)으로 구

분하여 그 문화적 갈등 양태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일부 실무자들의 주장도 있으나, 독일의 매스컴(예: 슈피겔)의 보도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들 보도에 의하면 가장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는 계층은 청소년 계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구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출생, 성장한 이들은 통일후 발생한 학교의 구조적 변화, 교육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여가시간의 활용 면에 있어서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아노미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당과 국가가 모든 자유시간을 조직, 관장해 즐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매우 저렴했는데 반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모든 여가시간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경제적 비용 역시 매우 상승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악한 동독의 교육환경(대학교육 포함)속에서 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은 서독지역의 청소년들과 경쟁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문화적 열등의식에 빠져들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방황과 좌절 속에서 청소년들은 범죄나 극우정치운동(Neo Nazism)에 빠져들게 되는데, 특히, 극우 운동에 참여하여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대부분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로서 이들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과 갈등에서 유래하는 청소년 문제와 이에서 파생되는 네오 나찌즘(Neo Nazism), 즉 정치 문제화 현상은 동독 지역의 성인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어 진다. 과거 구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일 자리와 여가시간의 활용이 당과 국가에 의해 보장되었던 사회에 익숙하던 동독지역 주민들은 체제의 변화후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경제적 위기는 많은 동독지역 주민들을 알콜중독과 마약에 빠지게 하고 또한 밀수와 매춘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증오감은, 독일인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 특유의 Nazism과 연결되어,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극우성향으로 전도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약 20%정도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과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의 상황이 자본주의가 동독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고, 일반 주민들 역시 상당수 이러한 주장에 동조, 복고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의 결과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는 수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와 주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이들 선거는 구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후신 「독일 사회당(PDS)」의 두드러진 약진과 아울러, 극우 정당인 「공화주의자 (Republikaner)」의 도약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동독 지역 주민들이 극좌와 극우 두 가지 성향으로 분열되어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양분화 현상은 앞으로 동독지역 내부에서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하고 있고, 이러한 균열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동독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에 있어 지대한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본고는 통일후 동독지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한 뒤 독일 정부의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그러한 방안이 왜 성공적이지 못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의 성공적이지 못함을 특수성과 보편성의 차원에서 재정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정치문화에 맞는 문화적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II장 통일후 동독지역의 문화적 갈등

1.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갈등과 문제점

가. 통일과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이미 주지하다시피 동-서독이 분단 상태로 있을 때에도 동·서독 간의 시청각 미디어의 교류는 존재했다. 즉, 서독지역에서도, 동독의 시청각 미디어의 청취는 가능했고, 동독지역에서도 서독지역의 미디어 청취가 가능했다.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느슨해진 동-서독간의 관세협정의 결과로 서독의 청소년 잡지, 예를 들어, “Bravo”, 또는 “Popcorn”과 같은 잡지 동독지역 청소년들에게 유포되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의 상호적 정보 교환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 지역의 대중 문화, 특히 청소년 문화가 동독 지역의 청소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가지 예로 1970년 동독에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질 무렵부터 서구지역에서는 6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록 음악(Rock Music)의 유행이 동독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 청소년들 사이에도 일기 시작했다.²⁾ 그러한 유행은 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2) Felber, Holm/Stiehler, Hans-Jörg, Rock und Pop. Die Routinen des alltäglichen Ausstiegs. in: Bernd Schorb/Hans-Jörg Stiehler (Hrsg.),

미루어 보아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이미 통일 이전부터 서구의 문화에 상당정도 동화되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이후 그들이 느끼는 문화적 충격 역시 상당히 약한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나 추론은 통일 이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슈나이더(Schneider)와 같은 학자는 동독의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상이한 세계에서 살았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나는 공산당의 공식적인 세포로서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개인만의 세계, 그리고 텔레비전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그는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특질들, 예를 들어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의견의 다원주의와 접할 수 있는 기회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단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교육 역시 이러한 다원주의를 준비시키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통일 후에 겪어야 했던 충격은 앞서 언급한 서구 문화에의 간접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컸다고 분석한다.³⁾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출시킬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동독 청소년들의 대중 매체를 통한 서구

Neue Lebenswelt. -neue Medienwelt? Jugendliche aus der Ex- und Post-DDR im Transfer zu einer vereinten Medienkultur, Opladen 1991, pp. 61-75, 여기에서는 p. 61 ff.

3) Schneider, Herbert, Juge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auf der Suche nach Orientierung? , in: Wölfling, Willi, Was ist nur mit unserer Jugend los?, Weinheim 1994, pp. 389-410, 여기에서는 p. 389 ff.

자본주의 문화와의 접촉이 그들을 서구적 문화 인식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을 가능케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인식체계내에서의 적응이 곧 서구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로의 적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진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통계수치에 의해 확인되어 질 수 있다. 먼저 1992년에 실시된 청소년의 인생관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청소년들 간에 별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 통계에 의하면 동독, 서독 지역 청소년들중 각각 85%이상이 “인생을 가능한한 많이 즐기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소위 “쾌락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미래에 높은 수입”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⁴⁾ 또한, 1994년에 실시된 통계에 의하면 동독 지역 청소년중 약 94%가 자신이 직업을 갖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한다.⁵⁾

그리고 약 84%에 달하는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은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취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⁶⁾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직업관 및 미래관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한 서

4)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Politische und persönliche Orientierungen in Ost und West, Opladen 1992, S. 19.

5) Gericke, Thomas, Einstellungen, Wertorientierungen und Lebensziele bei ostdeutschen Jugendlichen im Altersverlauf, in: Bertram, Barbara, Gelungener Start-unsichere Zukunft?, Weinheim und München 1994, pp. 123-155, 여기에서는 p. 125.

6) *ibid.*, p. 128.

독지역 청소년들의 그것과 별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이 서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적용에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통계를 보면 이러한 추론이 너무 성급함을 알 수 있다. 1992년에 실시된 셸 스터디(Shell-Studie)에 의하면 동독지역 남성 청소년의 약 56%, 그리고 여성 청소년의 약 64%가 국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7) 이는 1989년까지 동독 지역의 대학생중 약 34%가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와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동일한 연관관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8) 즉, 이러한 체제 중심적인 사고는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요구됐던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청소년들의 사고에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들 동독지역 청소년들중 80%가 자신들이 “그들의 조국”에서 2등국민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9)

이러한 통계적 수치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7) Shell-Studie: Jugend '92, Opladen 1992, Bd, 1, p. 265.

8) Dresdener neues Nachrichten: Jugendsoziologen zeichnen Bild der letzten Sozialismusgeneration, 1992. 5.29.

9) Institut für empirische Psychologie(Hrsg.): Die selbstbewußte Jugend-IBM-Studie '92, Köln 1992, p. 155.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은 통일전 부터의 서구 문화의 접촉으로 인하여 당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아직도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경직되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이들은 과거의 체제에 의해 주어진 사고와 서구 자본주의적 사고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심리학적으로, 심리적 적응이나 사회적 적응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은 새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2등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의 심층에는 앞서 언급한 심리적 부적응 상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구조적 측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나. 제도교육 변화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문제

과거 사회주의 정권시절 동독에는 공업 학교(Polytechnischen Oberschule)형태의 통일된 교육제도가 존재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서독의 교육제도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 내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업형태는 세미나식을 위주로 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독식의 수업형태와는 구분되는 형태로서 보통 엄한 규율이 수반되어졌다. 이러한 수업 형태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을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형태로서 창의적인 사고나 토론의 열성적 참가는 요구되지 않는 매우 수동적 수업형태였다. 이러한 수업형태와 학교제도는 통일후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를 대체한 것은 서독식의 교육제도였다. 우선 학교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전 동독지역에 일관되게 존재했던 공업 학교의 형태는 사라지고, 그 대신 2중구조(공업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와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 학교)의 학교제도로 대체되었고, 수업방식 역시, 과거의 사회주의정권을 스스로 비판하고, 수업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¹⁰⁾ 이러한 변화는 얼핏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에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을 적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측과는 다른 현상들이 눈에 띈다.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학교 폭력의 증가이다. 이러한 학교에 있어서의 폭력사건의 증가는 학교급우들간의 사회적 연결고리의 와해, 변화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요구,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존재했던 학교에 의한 이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지도 등이 사라졌

10) Schneider, op. cit., p. 397.

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비쳐지는 교사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으며, 신뢰를 할 수 없는 인물로 낙인 되는 상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폭력적 성향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¹¹⁾

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 사회주의 정권시절의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당(黨)에 의한 일 자리의 배정에 익숙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당에 의한 직업의 배정은 때로는 본인의 의사나 희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때도 많았지만, 자신이 학교 졸업후 취업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통일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즉, 일자리나 직업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직업, 또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는데, 한 가지 예로 1993년 현재 동독지역의 청소년중 3분의 1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상황은 서독지역의 각주(各州)들이 동독지역 청소년들에게 직

11) *ibid.*

12) Konrad, weiß, *Verlorene Hoffnung der Einheit*, in: *Der Spiegel* 46-1993, p. 44.

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교육과정의 이수 후에 이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 중 무려 75%가 서독지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에서도 동독지역이 청소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거의 제공해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무작정 서독지역으로 몰려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동독지역 청소년 전체 숫자가 1/5가량, 즉, 약 5만명가량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¹³⁾

이러한 상황은 동독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공해주기에 충분한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자포자기의 상태로 발전하기 쉬우며,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모르는 데에 있다.

라. 청소년층의 여가시간에 관한 문제

실제에 있어 통일후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경제적 변혁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다. 다음에 인용될 동독 라이프찌히

13) *ibid.*, p. 46.

(Leipzig)지역의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는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과거보다 현격히 줄었다. 많은 디스코장과 청소년클럽(Jugendclub)이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쇄되거나 문을 닫았다. 자주 나는 친구들과 무엇을 해야할지, 어디에 가서 시간을 보낼지를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할일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매일 디스코장이나 영화관에 갈 수도 없다. 전(통일 전: 필자 주)에는 이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입장료가 너무 비싸 도저히 그런 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는 통일 전에 오토바이 클럽을 조직하고 여가시간에 이 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통일된 이후에는 오토바이 부품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이 클럽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17세된 직업 연수생)¹⁴⁾

“나는 원래부터 책이나 잡지를 읽기를 즐겨한다. 통일 전에는 새로운 잡지를 우리 지역(동독 라이프찌히 지역: 필자주)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이후 나는 그러한 잡지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잡지나 책의 가격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

14) Lindner, Bernd, Medien- und Freizeitverhalten Jugendlicher im Umbruch, in: Deutsches Jugendinstitut, Dialog über die Situation Jugendlicher in den neuen Bundesländer, Leipzig 1992, pp. 93-106, 여기는 p. 94.

고 도서관에서조차 그러한 책들을 대여하기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 역시 도서관이 운영비의 과도한 상승을 견디지 못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책들을 구입하는 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통일, 그것은 나에게 스트레스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15세된 고등학생)¹⁵⁾

“지금 많은 동호인회, 취미 씨클들이 문을 닫았거나 닫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사이버 종교에 미치거나 극우 또는 극좌 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짓조차 하지 않는다면 너무 지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극장이나 디스코장의 입장권은 너무 비싸다.”(13세된 중학생)¹⁶⁾

“통일 전에는 운동씨클이나 다른 동호인회의 가입비가 5-15마르크면 족했다. 하지만 이 가입비가 요사이는 무려 350마르크나 한다. 나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12세된 중학생)¹⁷⁾

앞서 언급한 동독 지역 청소년 계층이 겪은 통일 후의 변화는 그것이 대부분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

15) *ibid.*

16) *ibid.*

17) *ibid.*

화는 그들 「또래 그룹」의 구조적, 행태적 변화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나의 여가시간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졌다. 디스코텍에서 네오 나찌(Neo-Nazi)와 조우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많은 나의 친구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변했다. 거의 매일 나는 크고 작은 폭력을 동반한 싸움을 경험한다.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라는 의식, 다시 말해서 상호 신뢰는 다 깨어지고 있다. 나의 여가시간은 「싸움의 시간」이 되어 버렸다.” (14세된 고등학생)¹⁸⁾

위에서 인용한 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증언들을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발생한 급격한 물가 상승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에 관련한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을 길거리에서 방황하게끔 했으며, 또한 그들을 폭력 지향적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이러한 심리적,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자신의 불만을 극우 또는 극좌 운동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 집단은 「의식화되지 않은 단순 폭력적 정치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거리의 폭력 정치 집단」

18) *ibid.*, p. 95.

으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통일후 일어난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는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약칭: SED)이 관장하는 「자유 독일 청소년단(Freie Deutsche Jugend, 이하부터 FDJ)」가 존재하였는데, 이 조직은 주로 학교 생활 이외의 청소년 활동을 주관, 관리해 왔다. FDJ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동호인회나 청소년 클럽을 조직, 이들에게 여가시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동독의 청소년들은 FDJ의 이념 노선에는 반감을 가진 경우도 있었으나, 이들 조직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관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FDJ가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의 이념적 사고와 행동양식에 준 영향 역시, 무척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적과 동지의 구별이 뚜렷하고, 이념적 성향 역시 좌 아니면 우라는 인식이 강한 흑백 논리에 젖어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의 불만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정치적으로 전이(轉移)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여가시간을 관장해주던 FDJ가 통일이후 해체되고 그에 대신 할만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이들은 그들이 여가시간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와 같이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경제적 이유에서와 사회구조적 이유에서 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다른 구조적 요인과 함께 청소년들 문제의 정치·사회문제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2. 일반 주민(성인)들의 경제·문화적 위기감

가. 현존하는 체제에 대한 불신

1995년도 자료에 의하면 경제와 문화적 위기감에서 기인하는 동·서독 주민들의 심리적 격차는 아직도 극복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사실은 동독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겪고있는 통일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서독주민들과 그들 내부에 대한 불신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브렐러(Brähler)는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 장벽의 붕괴후에 나타나는 인적, 심리적 장벽 (Mauer der Köpfe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²⁰⁾

앞으로 언급할 통계적 수치는 위에서 언급한 동독주민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19) 여기에 대하여서는 Brähler, Edhk Geyer, M, Bibliographie Folgen der Wende und Ost-West-Vergleich im Bereich der psychosozialen Medien, in: H.J. Wirth, Osis und Wesis: Psychoprogramm deutscher Befindlichkeiten, in: Psychosozial 59, 18 (1995), p. 71-76 참조.

20) Brähler, E, Deutsche Befindlichkeiten im Ost-West-Vergleich. Ergebnisse einer empirischen Untersuch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0-41/95, 29. Sep. 1995, p. 13-28, 여기에서는 p. 13.

우선 동독주민들은 스스로를 판단하건데, 자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생활면에서도 서독주민들 보다 건전하고, 스스로가 모든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표 1> 동독주민 스스로가 규정하는 자신들의 특성²¹⁾

동독주민들이 스스로를 평가한 결과
우리의 생활은 서독인들 보다 건전하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돈에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와 다음에서 언급할 통계수치를 함께 분석하면 이들의 사회적, 심리적 위기감과 열등감이 어디서 부터 기인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자결권이 외부적 상황에 종속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자신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외부적 영향력에 종속, 외부의 판단에 의해 규정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불만과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주민들의 이러한 피해의식은 현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

21) *ibid.*, p. 15.

어지는데, 이들의 체제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여론 조사에 의해 알수 있다.

문: “통일이 되었을때, 우리는 경제적 측면, 인간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체제를 원했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새로운체제를 추구하는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서독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겠는가?

<표 2>²²⁾

	서 독		동 독	
	1990. 11	1992. 10	1990. 11	1992. 10
새로운 체제를 추구했어야 했다.	13 %	11%	39%	47%
기존의 서독체제의 고수가 올바른 선택이었다.	74%	72%	41%	33%
결정할 수 없다.	13%	17%	20%	29%

22) Allesbach Archives, Ifd-Surveys 5044, 9009, 5070.

문: 독일에 있어서의 당신(동독 주민)의 현재 생활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현재의 독일 사회보장체제를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표 3>²³⁾

	1990. 12	1991. 7	1991. 8	1993. 2
유지할 가치가 있다.	49 %	44%	51%	37%
과연 그러한지 의심스럽다	33%	39%	32%	50%
결정할 수 없다.	18%	17%	17%	13%

위의 여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면, 동독 주민들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현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반수에 달하는 동독주민들이 독일의 현체제를 고수할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실은 이들이 통일후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용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23) *ibid.*, 5053, 5054, 9010, 5076.

나. 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이들이 체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투명성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 실업자인 경우 자신들이 언제 이러한 실업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무력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어질 통계는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4>²⁴⁾

	서 독	동 독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앞으로 실업자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 함	9%	28%
자신의 가족중 누군가가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실업상태로 전락할 것임.	10%	34%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경우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해당됨	16%	46%

<기준: 1993년 상반기>

24) Allensbach Archives, Ifd Surveys 5075, 5076, 5078.

이러한 통계수치에 의거하자면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거의 전부가 실업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불안감,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체제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독지역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Ⅲ장 문화적 갈등의 정치문제화

1. 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극우(Neo-Nazism)화 경향

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극우화경향이 통일후에 갑자기 발생된 현상은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극우화 경향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이른바 스킨헤드(Skinhead)로 부터 비롯된다고 말할수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동독정부의 주장처럼 일부 “정신나간” 청소년들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극우화 경향을 보인 청소년들은 아주 평범한 이들로 당시 동독 정부의 지배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극우화는 당시 사회주의 정권의 신경을 건드리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동독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극우화 현상을 공식적으로 금기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처음으로 동독내의 극우 세력의 통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2%의 동독 청소년들이 소위 스킨헤드(Skinhead)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고 4%가 이들에게 동조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약 30%가량의 청소년들이 이들 극우집단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²⁵⁾

통일 이후, 즉 1990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방법에 의한 통계를 살펴 보면, 민족주의적인 극우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다. 이러한 극우 성향의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독일 민족주의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독일 극우주의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정의할때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군(概念群)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생물학적 인종을 바탕으로한 민족의 개념과 언어, 전통 등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민족의 개념이 그것이다. 독일에 있어서의 민족의 개념이란 제3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인종적, 즉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민족을 의미하므로 독일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인종적 개념을 바탕으로한 이데올로기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인종적 개념의 민족주의가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타인종(他人種)에 대한 배타성이다. 우리는 이러한 배타성의 극단적인 형태를 히

25) Zentralinstitut für Jugendforschung Leipzig에 의해 1988년 3,000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시행된 통계자료에 의함.

틀러 정권이 유태인과 집시를 대량학살한 사실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타인종에 대한 배타성이 오늘날 극우주의자(Neo-Nazis)에서도 쉽게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에 대한 증오(Ausländerfeindlichkeit)이다. 따라서 독일의 극우성향의 심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중의 하나는 바로 외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 라이프찌히(Leipzig) 청소년 연구소(Zentralinstitut für Jugendforschung)의 조사에 의하면 동독지역의 외국인들이 전체 동독주민들중 차지하는 비율이 1%임에도 불구하고, 약 50%에 해당하는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외국인이 동독지역에 너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수치를 곧 외국인에 대한 증오감을 갖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는 외국인에 테러를 감행할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폭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1992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동독지역 청소년중 약 60%가 너무나 많은 외국인이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동독지역 청소년중 50%가 이들 외국인들이 독일인들의 일자리와 주택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

26) Schubarth, Wilfried, Rechtsextremistische und ausländerfeindliche Tendenzen unter ostdeutschen Jugendlichen und ihre Erforschung an der DJI-Außenstelle Leipzig, in: DJI, Dialog über die Situation Jugendlich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Tagungsdokument, 1992, pp. 115-116.

들의 고국으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동독지역의 청소년계층 내부에서 극우화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2. 외국인에 대한 증오(Ausländerfeindlichkeit)의 구체적 사례

이러한 동독지역 청소년 사이에 점차 퍼지고 있는 극우화의 구체적 행위 양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들 수 있다.

먼저 1992년 11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3건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감행되었는데, 그중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州)의 뮐른(Möln)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뮐른(Möln)이라는 도시의 터키가족이 사는 건물에 일단의 극우파 청소년들이 화염병으로 방화 2명의 터키 여성과 10살짜리 소녀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고, 역시 같은 달에 동독의 로스톡(Rostock)이라는 지역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 거주 건물에 일단의 극우파 청소년들이 습격, 무려 3시간에 걸친 테러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 제지선만을 설치하고 방관한 사건이 발생했다.²⁸⁾ 로스톡(Rosrock)의 사건에서 볼수 있는 가

27) Institut für empirische Psychologie (Hrsg.): Die selbstbewußte Jugend-IBM-Studie '92, Köln 1992, p. 136.

28) Thierse, Wolfgang, Von den Ursachen rechtsextremer Jugendgewalt in

장 중요한 점은 공권력이 극우파의 테러행위를 방조했다는 점과 이들 극우파들이 베트남 노동자들의 숙소건물에 방화 테러를 감행할 때, 수백명의 인근 주민들이 이들의 행동을 박수와 환호로 격려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사건을 직접 생생히 체험할수 있었던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측면이 이들 독일인들의 극우 성향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여겨진다. 그 이후에도 호이에스베르다(Hoyerswerda)등지에서 외국인 거주 건물에 대한 테러, 방화가 계속 발생되었고, 심지어 1994년에는 베를린(Berlin) 지하철에 타고 있던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청년이 지하철안에서 일단의 극우파에게 폭행당한후 달리는 지하철로부터 밖으로 던져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파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들 극우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행위가 단지 일과성적인 차원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행위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신문의 주요기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고있다는 점이다.

이들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행위로 그들의 극우 성향을 표출하고 있다면, 성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의식을 선거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stdeutschland, in: Heil, Hubertus, u.a.(Hrsg.), Jugend und Gewalt. Über den Umgang mit gewaltbereiten Jugendlichen, 1993, Berlin, pp. 31-38, 여기에서는 pp. 31-32.

3. 이념적 양극화 현상: 선거에 나타난 사회문제의 정치화

선거란 원론적으로 어떤 특정 이념을 표방하는 인격체를 선출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한 의사를 표명,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반행위를 의미한다.²⁹⁾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 참여자는 자신 나름의 정치적 지향을 밝히게 되고,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정치적 구도를 표현한다. 독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독일은 집권 기독교 민주당(Christliche demokratische Union, 약칭 CDU), 제1야당인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약칭:SPD), 자유민주당(Freiheitliche demokratische Partei, 약칭: F.D.P.), 녹색당(Die Grüne), 좌파 정당인 독일 사회당(Partei für deutschen Sozialismus, 약칭: PDS), 그리고 극우정당인 공화주의자(Republikaner, 약칭 Rep.), 독일 인민연합(Deutsche Volkunion, 약칭 DVU), 독일 민족당(Nationalistische Partei Deutschlands, 약칭 NPD) 등의 정당이 존재한다. 2차 대전이후로 독일은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 3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이루어 왔으나, 이러한 구도는 1989년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 3당의 지위를 꾸준히 누려왔던 독일 자유민주당

29) Nohlen, Dieter, Wahlen und Wahlsysteme, in: Mickel, W. (Hrsg.), Handlexikon zur Politikwissenschaft, pp. 553-559, 여기에서는 p. 553

(F.D.P.)의 퇴보와 녹색당(Die Grüne), 독일 사회당(PDS), 그리고 극우 정당인 공화주의자(Rep.)의 약진에서 비롯되었다.

그중 가장 약진이 두드러진 경우는 공화주의자(Rep.)로 대표되는 극우 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극우 정당들의 약진은 동독지역 뿐만아니라, 서독지역에서도 두드러지게 관찰되어질 수 있는바, 이들의 대두를 동독지역 고유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독일 극우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공화주의자(Rep.)는 1986년 바이에른주(州) 지방의회 선거에서 3.0%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 극우 3당, 즉 공화주의자(Rep.), 독일 인민연합(DVU), 그리고 독일 민족당(NPD)가 1990년까지 각종 선거에서 득표한 득표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통일 이전부터 선거가 치러진 서독지역을 중심으로 극우정당의 득표율을 분석한 앞의 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독일 통일 이후 극우 정당의 지지기반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는 동독이든 서독이든 통일이라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성인들의 정치의식에 어떠한 형태로든 면화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변화가 독일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이들이 극우정당을 선택하게되는가, 즉 이들 극우정당에 투표한 이들은 어떠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³⁰⁾

	NPD	DVU	Rep.
1986년 바이에른주 주의회 선거	0.5%	-	3.0%
1987년 독일 총선	0.6%	-	-
1987년 브레멘 주의회 선거	-	3.4%	1.2%
1988년 바덴-뷔르템베르그주 선거	2.1%	-	1.0%
1989년 유럽의회 선거	-	1.6%	7.1%
1990년 독일 총선	0.3%	-	2.1%

통일전, 즉 1989년 전반이전까지 공화주의자(Rep.)를 선택한 이들의 사회적 신분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그중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이외에 고위 공무원, 기업 중견간부 등이 주요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지기반은 통일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1989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들 극우 정당의 지지기반은 대부분 전문, 혹은 단순 노동자계층으로 변하게 되었다.³¹⁾ 이러한 변화는 통일이 야기시킨 경제적 불

30) Ristau, Malte, Die Wähler der extremen Rechten, in: Heil, Hubertus, u.a. (Hrsg.), Jugend und Gewalt. Über den Umgang mit gewaltbereiten Jugendlichen, 1993 Berlin, pp. 53-69, 여기에서는 p. 55.

안정과 심리적 불안감이 극우 정당의 대두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통일이전의 극우성향의 유권자는 대부분 이념적 성향에 의해 선택을 했던 반면, 통일이후는 노동자 계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따라서 이념이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주된 극우정당의 주된 지지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이념이외의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극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 즉 통일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사회적 불안 요인이 극우정당의 지지기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은 이들 극우정당들이 통일의 후유증을 상대적으로 덜받은 서독지역보다 통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동독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되어질 수 있다.

먼저 1994년 11월 11일 동독지역 삭센(Sachsen)에서 실시된 주의회(州議會)선거 결과와 1990년 역시 같은 지역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 결과를 비교해보면 극우정당인 공화주의자(Republikaner)가 1.3%의 득표율이 신장했음을 알수 있고, 역시 동독지역인 튀링엔(Thüringen)에서 1994년 10월 16일 실시된 주의회 선거결과와 1990년 주의회 선거결과를 비교하여도 극우정당이 득표율 0.5%가 신장했음을 알수 있다. 이밖에도 1994년 10월 16일 실시된 동독 매켄부르크 포폼멘(Meckenburg-Vorpommern)의 주의회 선거결과를 역시 같은주에서

31) *ibid.*, p. 60.

1990년에 실시된 주의회 선거결과를 비교하여도 극우정당의 성장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독지역의 바이에른(Bayern)주에서 1994년 10월 16일에 실시된 주의회 선거결과를 1990년 실시된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결과와 비교해보면, 극우 정당 득표율이 약 1%정도 감소했으며, 역시 서독지역인 사란트(Saarland)에서의 주 의회 선거 결과도 1994년 10월의 선거 결과와 1990년의 선거 결과를 비교해보면 극우 정당 득표율이 2%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³²⁾

이러한 선거결과와 극우 정당의 지지기반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나름의 해석을 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은 독일국민, 그중 특히 동독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즉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는 구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체제에 살았던 동독주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불안감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동독주민들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독지역 주민들역시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동·서독은 공히 어려움에 직면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했던 통일 직후 나타난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이나, 그들의 지지기반이 지식인 계층에서 노동자계층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파악되어질 수 있다. 즉, 노동자 계층은 그들의 신분상 경제적 동요에 가장 민감할 수

32) Mayers Jahresreport 1994, Manheimm u.a., 1994, pp. 161-164.

밖에 없는 계층이고, 따라서 심리적 불안감 역시 가장 심도있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극우정당의 지지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989년 이후의 선거 결과를 주목하면, 동·서독간에 차이가 점차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서독지역에서는 통일 직후 한때 10%선에 육박하던 극우정당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그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독지역은 통일의 여파를 어느정도 극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상대적 안정을 되찾은 반면, 동독지역은 통일이후 아직도 새로운 체제에로의 적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극우 정당의 대두 이외에 동독 선거의 또하나의 특징은 가장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독일 사회당(PDS)의 대두이다.

독일 사회당(PDS)은 그 전신(前身)이 구(舊) 사회주의 동독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사회주의 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약칭: SED)이다. 독일 통일 이후 일반적 예상으로는 동독주민들이 구사회주의 정권에 식상하고 있었으므로 구 사회주의 정권 집권여당의 후신이며, 가장 좌파적 성격을 띤 독일 사회당(PDS)의 호응도는 매우 저조하리라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독일 사회당(PDS)는 이러한 예측을 뒤엎고 1990년 실시된 동독지역 주의회(州議會) 선거들에서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1994년 9월 11일 동독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 사회당(PDS)은

13.4%의 득표율을 기록, 제 3당으로 주의회 진입에 성공했으며, 같은 해 삭센(Sachsen)주, 메켄부르크-포폼멘(Meckenburg-Vorpommen)주, 튀링엔(Thüringen)주에서 실시된 선거등에서 10%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동독지역에 한해서는 제 3당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이러한 독일 사회당(PDS)은 그이후 급성장을 기록, 1994년 동독지역에서 실시된 주의회선거들의 결과, 평균적으로 20%정도의 지지를 획득,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표 6> 1994년도에 실시된 동독지역 각 주의회선거 결과³³⁾

	SPD	CDU	PDS
튀링엔(Thüringen)	29.6%	42.6%	16.6%
삭센(Sachsen)	16.6%	58.1%	16.5%
메켄부르크-포폼멘 (Meckenburg-Vorpommen)	29.5%	37.7%	22.7%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54.1%	18.7%	18.7%

33) Mayers Jahresreport, 1994, pp. 161-163.

앞의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 사회당(PDS)은, 기민당(CDU), 사민당(SPD)과 그 세력을 견줄 수 있는 당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독일 사회당(PDS)의 지지기반은 대체 누구인가? 우선 독일 사회당(PDS)의 인적 구성면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사회당(PDS)의 가장 대표적 인물은 기시(Gissy)라는 변호사로, 구(舊) 동독정권시절 반정부운동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부역시 구동독시절 반정부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인데, 이들의 면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면서도, 당시 동독에 존재했던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권”에는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다. 독일 사회당(PDS)의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이러한 이념적 신념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여길수 있으나, 물론 이들 지지자들중에는 과거 구(舊) 사회주의 정권시절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주요 간부나 정부 기구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통일후 동독지역에서는 이념적 양극화현상이 서독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동독지역의 지식인 계층은 자신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좌파정당에 호소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단순 노동자들과 같은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은 극우 정당에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비록 대부분의 동독지역에서 극우 정당은 제4당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극좌 경향

을 띄고 있는 독일 사회당(PDS)은 제3당의 수준에 처해있지만, 독일의 그 동안의 안정적이고 변화없는 정치 행태를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동독지역에서의 이념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본고에서 논증한 사회·경제·문화적 갈등이라고 말할수 있다.

제IV장 독일정부의 대응책과 문제점

1. 독일의 정치문화와 구(舊)사회주의정권하의 동독

일반적으로 정치문화는 한 사회내에서의 가치정향, 사고,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34) 이러한 정치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상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고유의 정치, 또는 사회체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막스 베버(Max Weber)는 20세기 초반에 이미, 규범적 가치정향성이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통해서 특수한 사회체제를 형성

34) Berg-Schlosser, Dirk, Politische Kultur, in: Mickel, Wolfgang W. (Hrag.), Handlexikon zur Politikwissenschaft, München 1986, pp. 385-388, 여기에서는 p. 385.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³⁵⁾

독일의 경우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요소는 바로 국가주의적 성향이다. 독일의 국가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독일의 정치학자 쿠르트 손트하이머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상당히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진 민족이다. 나찌(nationalsozialistische Führerstaat)정권은 이러한 정치문화적 전통의 단절이 아닌, 이러한 성향의 극단적 양태일 뿐이었다. 강한 지도자, 그리고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은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에도 이어졌고,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역시 이러한 전통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³⁶⁾

국가주의적 성향이 갖는 대표적인 요소는 앞의 인용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강한국가와 강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다. 여기서 강한 국가, 또는 '강한 지도자는 가부장적 역할을 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나찌정권이라고 불리워지는 제3제국 역시 국가주의적 정치문화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주의적 성향,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부장적 국가가 또는 강력

35) Berg-Schlosser, Dirk, Politische Kultur. Eine neue Dimension politikwissenschaftlicher Analyse, München 1972, p. 17.

36) Sontheimer, Kurt, Grundzüge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3. Aufl., München 1984, p. 211.

한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기대는 사회국가(Sozialstaat)라는 독일 고유의 복지국가모형을 탄생시켰는데, 나찌정권은 국내적으로 전형적인 사회국가(Sozialstaat)³⁷⁾의 한 형태였기 때문이다.³⁸⁾

나찌정권이 전형적인 독일식 사회복지국가의 한 형태로 독일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했다면, 2차대전 이후에 동독지역에 나타난 사회주의 정권역시 이러한 국가주의적 정치문화의 연장선상에 존재했다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본고의 앞절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여가시간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관장해주었고, 따라서 이들은 순종적인 자식들처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동독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통일 이전까지 전체주의적이기는 하나, 가부장적인 “강한 국가”에서 계속 살아왔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이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독일 연방정부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냐는 곧 통일후 문

37) 사회국가(Sozialstaat)는 영국식 사회보장국가모델인 복지(Welfarestate)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즉, 영국식 복지국가체계는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사회적 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독일식 사회보장 국가체계인 사회국가(Sozialstaat)는 국가가 사회보장 전반을 주도하는 국가 주도형 복지국가체계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Ritter, Gerhard A., 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und England. Entstehung und Grundzüge im Vergleich, Mündhen 1983 참조.

38) 이 부분에 대하여는 Ritter, Gerhard A., Der Sozialstaat. Entstehung und Entwickl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München 1989 참조.

화적, 사회적 갈등의 해소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방주의 원칙의 준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그 문제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동독주민들은 계속 가부장적 국가에 살아왔다. 그것이 그들의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였건, 그들 동독주민들이 그러한 환경하에서 살아야했던 것은 분명한 하나의 역사이자 현실이었던 것이다.

통일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이른바 “새로운 주(州)들” (neue Bundesländer)에게 전반적인 행정혁명을 단행했다. 이러한 행정 혁명은 단순히 서독의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동독지역에 이식한다는 의미이외에 서독의 연방제적 행정조직과 법을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했다. 즉, 사회주의 통일당(SED)라는 국가차원의 당(黨)이 소유했던 독점적, 배타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대신 권위의 분점이라는 연방제적 개념을 도입, 연방, 주(州), 시(市) 등의 단위정부에게 각기 권위를 분할 양도시켰다.³⁹⁾

이러한 연방제의 동독에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분석할수 있다.

39) Inter Nationes Bonn, Press, Sonderthema, 1993, pp. 24-25.

우선 국가주의적 신민문화(Untertanenkultur)하에서만 살아왔던 동독주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연방제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역시 국가주의적 정치문화를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패전을 맞았던 2차대전 직후의 서독 국민들과의 입장과 지금의 동독주민들의 문제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2차대전 직후의 서독은 국민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고, 내부적으로 문화적 열등감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독지역 주민들은 한 국가가 되어버린 상태하에서 사회, 문화적 갈등을 느껴야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2차대전 직후의 서독은 국민적 차원에서의 단결이 가능했고, 또 아데나워는 과도기적으로나마 독일인들이 바라는 가부장적인 역할을 수행,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국가에서 서구 민주국가로의 이행을 원활히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방정부의 조치들은 동독주민들에게 가치관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지적할수 있는 점은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독의 연방제 모델을 그대로 동독지역에 적용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상당수의 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서독 주정부와 같은 수준의 대민(對民) 서비스를 요구받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와 주정부 수준에서 모든 복지국가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매우 의미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주정부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복지정책이 동독주민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모든 측면에서 서독의 체제를 너무 급작스럽게 동독지역에 강요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학교체제의 변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가질수 있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과소평가한 상태에서 제도적 측면의 이식(移植)만을 중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독주민들은 “기대와 현실”의 격차사이에서 방황해야하고 그러한 방황이 사회문제를 야기, 끝내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V장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바 대로 독일은 통일이후 여러 차원의 난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른, 먼 국가의 일로 치부할수도 있으나, 여기서 밝혀야 할점은 독일과 한국 사

이에는 중요한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의 공통점으로 독일은 불과 6년전 까지만해도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독일의 정치문화적 특징인 국가주의적 성향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유교는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데올로기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공통점에서 출발한다면 독일이 통일 이후에 겪고있는 사회, 문화적 문제들이 결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듯하다. 즉, 독일이 통일 이후에 안고있는 난제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양상도 유사하게 전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가?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정치문화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독일과 같이 지나치게 민주화,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라는 기쁨 대신, 자신들이 등안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고, 이것은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가부장적 권위에 길들여진 주민들이라면, 더욱이 그러한 느낌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호칭면에서도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수령” 운운하는 가부장적 권위를 국가주의적 전통의 기반위에 아주 적절히 사용하는 집단이기에 더욱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두번째로 고려해야할 점은 독일의 경우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도 하

나의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제도란 홉스(Hobbes)의 말처럼 이성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독일은 통일이후의 제 현상을 지나치게 이성적 차원에서만 접근했다고 여겨진다. 이성의 산물인 제도는 인간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통합은 이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일은 감정과 이성을 모두 갖춘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 그 근본이기 때문이다. 즉, 감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제도만을 고집하면, 사회통합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통일이 진정한 인적 통일까지를 의미한다면 앞서 언급한 독일 학자의 의견과 같이 독일은 아직도 분단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통일은 이루어냈지만, 그러한 통일이 인적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주장은 허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 문화의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된다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 문화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전제로한 민족 공동체의 구성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의 도정 :
공산정권의 협상전략 연구
- 베트남 평화협상의 사례

조재현*

제 I 장 서 언
제 II 장 협상의 전제
제 III 장 협상의 내용
제 IV 장 결 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 정치학 박사

빈 면

제 I 장 서 언

동구 공산제국과 소련의 붕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체제 간 대결과 이념적 논쟁에 중지부를 찍었다.

이제 세계의 역사는 자유 자본주의의 기본 바탕위에 민족을 주축으로한 통합과 국가 발전, 그리고 경제적 지역주의를 통한 국가 이익의 극대화과 세계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단한 자기 개혁과 대외 개방의 일대 “변화”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공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비록 정·경 분리적 차원의 개혁과 개방이지만 각각 70년대 말과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래 획기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적 허구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시점 또한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대세에 역류하려는 세력은 유일하게도 북한의 통치 지배층 밖에 없다. 그들은 과거 공산맹방들이 국가적 자기 모순과 정책적 오류를 과감한 체제와 이념적 변혁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호도하고 경제적 파탄과 계속되는 천재지변 등으로 야기된 민심의 동요와 누적된 내부 모순의 미봉책으로서 대남 강공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무장 잠수함 공비 침투 행위는 그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북한은 국제적 평화 무드를 한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민족적 염원인 남북통일의 전기로 선용하는 대신 미·일 정부

내의 일부 대북한 유화주의에 편승하여 특히 한국 정부와 미국을 분리시키려는 소위 “통미봉남”의 시대 착오적 전술을 획책하고 있다.

작금의 제네바 핵문제 협상이나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를 둘러싼 남북 현안을 놓고 협상의 직접 상대자인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협상하려는 행태는 바로 과거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연출했던 반민족적 협상 전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이와 같은 기본 전략을 남북통일 협상에서 활용하려 하는 것이다. 차제에 남북 당사자간 신뢰의 구축과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거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뼈아픈 교훈을 각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전쟁 종식을 위한 파리 평화 협상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 협상의 종결은 공산 북베트남에 의한 대남 무력 적화 통일로 귀결되고 협상의 주역이었던 미국은 역사상 유일한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턴은 “베트남 이후 미국 국민들은 종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문제에 자신을 잃은 듯하다. 미국이 항상 그랬듯이 외국의 분쟁을 좌지우지하고 대국이 소국을 지배하며 돈과 기계가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소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위협을 무릅쓰기보다는 극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금세기 양차세계대전도 미국 사회에 이만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대가와 부담, 그리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모든 친구를 지원하고 모든 적에 대항

할 것”이라고 천명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와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응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몫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이 다른 모든 나라의 분쟁을 떠맡고 모든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선언한 1973년 닉슨의 제2기 취임 연설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실감나게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을 환멸과 좌절의 수렁속에 빠뜨린 베트남 전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과 세계를 보는 눈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며 이전보다 더 성숙한 국가로 될 것”이라는 애수에 찬 자위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닉슨 대통령이 1973년 1월 23일 “전쟁을 종결시키고 베트남 및 동남아에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협정을 매듭지었다.”고 선언한 직후에 내린 것이다.

아랍돈 23개조로 된 역사적인 베트남 휴전협정은 1973년 1월 27일 파리 국제회의 센터에서 미국 대표 윌리엄 로저스 미국무장관, 베트남 공화국(월남)대표 쩌·반·람 외무, 베트남 인민공화국(월맹)대표 응웬·주이·쩐 외상, 베트남 임시 혁명정부(베트콩)대표 응웬·티·빈 외상 등 4자간에 조인되었다. 조인과 동시에 휴전이 발효되고, 휴전 발효일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미군 및 미군편에 있는 다른 외국군의 철수와 이 기간 내에 포로 석방이 실시된다고 발표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가장 길고 어려웠던 베트남전이 12년만에 종식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2년 남짓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공화국(월남) 대통령 즈엉·반·민은 일본간의 찝막한 연설을 통해 공산 베트

남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함으로써 공산 적화의 비운속에 30여년간 피로 물들었던 베트남 전쟁은 불행한 막을 내리고 만다. 이같은 사태는 세계를 충격 시켰으며 심지어 공산 베트남까지도 상상치 못했던 의외의 결과였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군한지 2년만에 이같은 비운으로 귀결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대내외적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파리 휴전협정의 맹점은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심지어 이 협정의 초점이 명예로운 평화에 있었다기 보다 “미국의 명예로운 베트남의 포기”에 두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글은 베트남전의 내용이나 공산 적화 원인의 규명보다 협상을 구실로 공산 베트남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구사한 전술과 미국 및 남베트남의 이에 대한 대응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공산 베트남이 1968년 5월 10일 파리의 예비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후 1973년 1월 27일 휴전협정 체결까지 성명전으로 일관한 미국과 공산측의 상호 제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공산측과의 협상에서 유의해야될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제II장 협상의 전제

미국과 공산 베트남 또는 제3자에 의한 베트남 평화협상의 시도

는 1964년부터 1968년 봄 파리의 예비회담이 열리기까지 2,000회 이상 달하며 미국이 직접 개입한 것만도 36건에 이른다.

미국과 공산 베트남간의 협상 모색은 1962년 7월 라오스 중립 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을 때 미국의 해리만과 설리반 대사가 공산 베트남 대표와 비밀 접촉을 시도한데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라오스 중립화안과 유사한 방안이 베트남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 측은 베트공의 “4개조 선언”이 협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 자체를 거부하였다. 동 “4개조 선언”은 1962년 7월 20일 제네바 협정 조인 기념일에 발표한 것으로서 “1) 미국은 남베트남에 관한 무력 침략을 종식하고 모든 군대와 무기 및 군장비를 철거할 것, 2) 남베트남의 모든 관계 당국자는 전쟁을 중지하고 남베트남 인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조건을 남베트남 전역에 수립할 것 3) 모든 정당, 정파, 집단, 사회계층 및 종교 대표를 포함하는 거국적 연립 정부를 수립할 것, 4) 남베트남은 평화와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여하한 군사블력에도 가담치 말며, 여하한 국가도 남베트남 영토 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시만 해도 공산 베트남은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굳게 믿고 있었고 미국도 군사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만다.

그후 1963년 11월 1일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고·딘·디엠) 대통령이 암살된지 1주일만에 베트공의 정치기구인 “민족해방

전선(NLF)”은 남부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를 토의하기 위해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후 보다 진지한 평화 협상 탐색은 1964년 5월, 당시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ICC)국제 휴전 감시 위원단의 캐나다측 대표 블레어 시보언이 미국의 요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주월미군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철수와 민족 해방 전선이 남부에서 새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등 종래 하노이가 내세운 협상의 전제조건만을 가지고 돌아오는 데 그쳤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의 발발로 미국과 하노이 당국간의 입장이 경화되고, 1965년 2월 베트남의 미군 숙소 습격에 이은 미국의 보복 및 미군 전투부대의 상륙, 북부 공산군의 남침 등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하노이 당국은 미국이 지체없이 자기의 과오를 시인하고 베트남에서 즉각 철수할 때에만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워싱턴 당국도 하노이측이 침략을 중지하지 않는 한 베트남의 평화는 올 수 없다는 러스크 국무장관의 성명으로 응수했다. 이 때문에 양측의 협상 문호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나 세계 거물급 지도자들의 협상 주선을 위한 협력은 다양하게 전개되는 바 특히 우 탄트 UN 사무총장은 프랑스 및 소련당국과 접촉하면서 1954년 제네바 협정과 1962년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 기초(起草)에 참여한 14개 회의국 회담 개최를 종용했다. 북베트남 및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은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사이공의 응웬·칸 정권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북진을 주장하였다. 1965년 3월 유고의 티토 대통령은 벨그라드에서 개최된 17개 비동맹국 회담

에서 상호 전제조건 없는 협상을 교전 쌍방에 호소하였다. 미국은 이 제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지지를 표명했으나 하노이 당국은 이를 일축해 버렸다.

동년 4월 7일 존슨 대통령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무조건 협상과 10억불을 투자하는 동남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산 베트남이 침략을 중지한다면 이 계획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협상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공산 베트남 수상 팜 반 동은 공산 베트남 인민회의가 채택했다는 “4개항 평화안”을 발표함으로써 찬물을 끼얹었다.

이 4개 항목은 “첫째, 일체의 미군과 군대를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에 있는 일체의 군사기지를 해체하여 남베트남과의 군사 동맹을 취소할 것과, 미국은 월맹에 대한 전쟁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월맹의 영토 및 주권의 침해를 중지할 것, 둘째, 평화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양측은 외국과의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각자의 영토에는 외국 기지 병력 및 군사 요원이 없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의 국내 문제는 외국의 간섭 없이 국민 해방 전선의 강령에 따라 월남 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베트남의 평화적 재통일의 문제는 외국의 개입 없이 양측 베트남 국민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항의 민족 해방 전선이 “남베트남인민의 유일하고 진정한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이 4개항만이 유일하고 적절한 기초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민족해방전선의 강령이란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결성시 발표한 10

개조의 행동 강령으로서 “1) 남베트남에서 미제국주의의 위장 식민 정권인 응오딘.지엠 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적 민주 연합 정부를 수립한다. 2) 광범한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한다. 3) 독립된 자주 경제를 건설하고 국민 생활 조건을 향상시킨다. 4) 소작료를 인하하고 농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여 경작자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5)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문화와 교육제도를 발전시킨다. 6) 조국과 인민을 방위할 민족군대를 창설한다. 7) 소수 민족간의 평등을 보장하며 외국인 거류민과 재외 동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8)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9) 남부와 북부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10)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 대통령의 “무조건 협상”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애당초 군사 고문단의 이름으로 파월 했던 미국 내 12,000명은 1965년 5월 말에 50,000여명으로 증강되었으며 1964년까지만 해도 남베트남 정부군의 주도하에 수행되는 전쟁을 미군이 협조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미군 주도의 전쟁으로 들변했다.

한편 협상의 테이블로 양측을 불러모으려는 세계의 중재 노력도 계속되어 윌슨 영국 수상, 우·탄트 총장, 전 영국 수상 패트릭 고든·워커 및 영연방 5인 평화사절단 등이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1965년 7월28일 존슨 대통령은 “주월미군 75,000증강”을 발표하면서 베트남문제가 전쟁에서 회의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UN과 114개 UN회원국 어느 나라도 평화 실현을 위해 협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세계의 비난을 꺼려 U.N이란 기구를 협상의 한 채널로 이용하는 것을 회피해 오던 미국 태도의 변화를 의미했다. 존슨 대통령은 협상을 위한 공산 베트남측 안도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베트남전이 적어도 군사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최초의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나셀, 드골, 티토, 바오로 교황, 아노스.페테르 헝가리 외상, 판파니이태리 외상, 스투어트 영국수상 등의 노력도 있었으나 공산측의 거부로 실패로 돌아갔다.

공산 베트남의 강경 자세에도 불구하고 존슨 대통령은 1966년 1월5일 U.N으로 하여금 평화 협상의 주선을 요청하면서 우탄트 총장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6개항의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즉, “1) 미국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1954년 및 1962년 제네바 협정에 입각하여 협상할 용의가 있다. 2) 적대 행위의 쌍무적인 완화와 협상에 앞선 휴전을 기대한다. 3) 미국은 외부 간섭없이 스스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자마자 남베트남에서 파병할 용의가 있다. 4) 미국은 베트남에 병력이나 기지를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다. 5)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는 베트남인들 자신이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해야 한다. 6) 남북 베트남 통일은 두 지역 주민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러스크 국무장관은 1966년초 베트남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 14개항을 천명했는데, 그 내용은 “1) 1954년과 1962년의 제네바 협정은 동남아의 평화를 위해 적절한 기초가 된다. 2) 미국은 동남아에 관한 회의나 동남아의 어떠한 일부 국가들에 관

한 회의도 환영한다. 3)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협상을 환영한다. 4) 미국은 존슨 대통령이 밝힌바 있는 무조건 대화를 환영한다. 5) 적대 행위의 중지는 회담의 첫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비 회담의 의제도 될 수 있다. 6) 다른 제안들과 함께 하노이가 제안한 4개 항목의 토의를 환영한다. 7)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군사기지를 원치 않는다. 8) 미국은 베트남에 평화가 수립된 후에 미군을 잔류시킬 의사가 없다. 9) 미국은 베트남인들 스스로 선택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10) 베트남의 통일 문제는 베트남인들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1)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비동맹이나 중립을 선택할 자유를 지지한다. 12) 미국은 전쟁보다도 동남아시아의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의 자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만약 베트남에 평화가 수립된다면 월맹은 이 지역의 경제 부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을 기증할 용의가 있다. 13) 베트콩은 월맹이 침략 행위를 중지하는 즉시 협상에 스스로의 의견을 참여시킬 수 있다. 14) 미국은 평화의 첫 단계로 폭격을 중지할 용의가 있음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월맹은 미국이 폭격을 중지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없다“로 되어 있다.

1966년 1월28일 팜반동 수상은 4개조 항의 조건이 수락되면 1954년 제네바의 회담과 유사한 회담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호지명도 평화 회담에서 베트콩의 유일 대표권 인정과 “4개 조건”의 수락을 행동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하였다. 동시에 그 입증은 북쪽의 무조건 중지와 전투행위의 중지라고 선언하여

종래 선미군철수, 후협상의 주장을 약간 후퇴한 인상을 주었다. 말하자면 미국이 “4개 조건”을 먼저 수락하고 남베트남에서 베트콩이 결정권을 쥔 연립 정부를 수립한 다음 1954년 제네바회담과 같은 회의를 열겠다는 의도를 표명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동년 2월 러스크 국무장관은 하노이정권이 평화 협상에 응하면 베트콩을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상원 외교위의 증언에서 밝혔다.

1967년 9월 29일 존슨 대통령은 산안토니오 연설에서 “즉각적이고 건설적인 협상의 길이 된다면 북폭을 중지할 용의가 있고 공산 베트남 역시 이에 상응하는 축전조치(縮戰措置)를 취한다는 보장 하에 전면 단폭(斷爆)을 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동년 10월 21일 북베트남 외상 응웬주이전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북폭중지가 아니면 협상이나 접촉은 있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아무튼 북베트남이 근본적으로 대남 군사적 승리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협상에 응할 이유는 없었다. 그들은 협상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여 미국의 북폭을 일시 중단시킨 다음에는 군대와 보급 물자를 남파시켰다. 때문에 폭격 중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장은 회피하면서 애매한 어휘의 장난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는 술법을 폈다.

1968년 1월 30일 공산측의 구정 공세가 실패로 돌아갔다. 동년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은 평화협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공산측의 상응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북폭중지를 명령하고 협상 대표로 에버럴 해리만 순회대사와 주소미대사 레웰린툼슨을 지명하였다. 동시에 대통령 재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여 베트남 전

해결과 국내선거전을 분리함으로써 하노이측에 대해 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 넣게 된다.

곧이어 영국 외상 마이클 스투어트와 런던주재 소련 대사 미하일스미르노브스키간에 협상 중재가 활발히 전개되고 드디어 동년 4월2일 하노이측은 일시와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영국 대표와 만나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 및 다른 모든 전쟁 행위의 무조건 중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대표를 임명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인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968년 4월 3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미·월맹 외교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예비 회담 장소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1) 베트남 참전국들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 2) 안전한 통신 시설을 갖춘 곳, 3) 협상 대표들에게 심리적 압력을 주지 않는 중립적 분위기가 보장되는 곳, 4) 서방측 기자들이 자유로 취재할 수 있는 곳”등 장소 문제에 관한 4개 조건을 내세워 제네바, 뉴델리, 비엔티안 등등의 15개국의 17군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산 측은 중립적 분위기를 보장하기 힘든 바르샤바를 내세워 장소 문제를 가지고 한달 이상 지연 전술을 폈다.

결국, 5월 3일 장소를 빠리로 합의하고 5월 10일에 예비 회담을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루한 탁상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베트남은 사이공을 비롯한 전 119개 도시와 군사시설에 대한 일대 공격을 감행하여 일면협상 일면 전투의 양면 작전을 구사하였다. 이는 미·월군에 대한 괴멸적인 타격을 주

어 군사적인 우위를 협상 테이블에 이용하려는 책동이였다.

제Ⅲ장 협상의 내용

1968년 5월 10일, 베트남 평화 예비 회담에서 미국측 차석 대표 사이러스밴스와 북베트남 차석 대표 하반라우 대령은 절차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는데, “1) 영어와 베트남어를 기본 용어로 하되 필요한 경우와 주요 문서 성명에는 불어도 쓸 수 있다. 2) 본 회의는 쌍방의 정책 성명으로 시작한다. 3) 대표단의 규모는 통역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4) 회의는 매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대표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회의의 시간을 정한다. 5) 북베트남 대표단은 북베트남만을, 미국 대표단은 미국만을 대표한다”로 결정함으로써 예비 회담은 순전히 미국과 공산 베트남간의 회담이 되도록 하였다. 정작 주요 당사자인 남베트남 당국은 예비회담부터 배제당한 것이다.

5월13일 예비 회담 제1차 공식 회담은 미국 측 수석 대표 헤리만과 공산측 수석 대표 수안·투이가 각자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개막되었다.

5월 22일의 제 4차 공식 회담에서 미국 측은 북폭중지에 상응하는 축전조치(縮戰措置)를 공산 베트남측에 요구하면서 DMZ 북쪽에서의 대남 폭격, DMZ를 통한 지상군 공격, 병력 및 군장비의 남파, 사이공을 비롯한 남베트남 각 도시에 대한 공격 등등의 중

지와 이미 제안한 바 있었던 1) DMZ의 복원, 2) 1962년 제네바 협정의 준수, 3) 남베트남인의 자결권 등의 3개안 수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공산 베트남측은 미국의 북폭 전면 중지와 종래의 4개항 평화 안의 수락 요구로 맞섰다. 특히 양측은 남베트남 정부대표와 베트콩 대표의 참가 문제로 심각한 의견의 대립을 보이게 된다. 즉, 확대 본 회담 참가국 문제를 놓고 남베트남 정부를 미국 대표의 일부로서가 아닌 독립된 대표로 참석케 하는 반면, 베트콩은 독립된 대표가 아닌 북베트남 대표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남베트남의 끈질긴 주장과, 남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폭두각시에 불과하므로 민족 해방 전선만이 유일한 남베트남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공산측 주장이 초점이 되어 예비회담은 교착상태로 내달았다. 그러나 교착상황을 오래 인내하지 못한 측은 역시 미국이었다.

1968년 11월1일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다급해진 존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북위 17도 이상의 북베트남 전역에 대한 모든 폭격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를 연합국측에, 베트콩을 월맹측에 협상대표의 일원으로 참석시키는 데 동의함으로써 항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미국은 국내외의 압력에 못이겨 결국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에서 양보하리라고 믿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지구전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는 티우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침략의 대상이었던 폭력 집단인 베트콩을 자유롭게 선출되어 수립된 남베트남 공화국과 동렬로 취급하여 협상하지는 것이었기 때문이

다. 비록 미국이 이것으로 인해 베트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우 정부가 미국정부의 일방적 배신으로 받은 충격은 적지않았다. 미국의 행위는 원칙을 포기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티우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11월 3일 민족해방전선(NLF)은 5개 항의 조건을 발표하고 다음날 응웬·티·빈 여인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의기양양하게 파리로 향했다.

동 5개 조건은 “1) NLF는 베트남의 독립, 민주주의, 평화, 중립, 번영 및 궁극적인 평화재통일을 목표로 한다. 2) 미국은 주월미군과 연합군을 완전 철수시키고 남베트남에 있는 군사기지를 폐쇄할 것. 3) 광범한 전국적인 민주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남베트남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할 것. 4)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 베트남간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재통일을 기한다. 5) 평화 및 중립 외교정책을 구현하고 모든 형태의 군사동맹을 배격하며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선린관계를 갖도록 한다.”로 되어 있다.

남베트남은 확대 회담의 불참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막전 막후 설득이 계속되었다. 또한 협상 테이블의 형태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 2개월 반을 허비한 끝에 예비회담은 28회까지 소집되었다. 무수한 우여곡절 끝에 1969년 1월25일 확대 본회담이 개막되었다. 상호 호칭은 미국도 베트남도 아닌 아측(our side), 타측(your side)의 묘한 호칭을 사용키로 했으며, 직경 7m의 원형 테이블에 각 대표단 15명 씩 60명이 둘러앉아 국기가 놓이지 않은 상태로 미국측 수석대표 로지, 남베트남측 수석대표 팜당람, 공산 베트남

측 수석대표 수안투이, NLF측 수석대표 쩌부키엠이 참석하였다.

미국측은 1954년 제네바 협정의 비무장지대 규정 준수, 비무장 지대의 복원, 외국군의 상호철군, 베트남 평화를 위한 1962년 라오스협정의 이행, 양측의 포로석방 등 선군사문제 해결을 요구한 반면, 공산측은 미군철수, 사이공 정부해체, 연립정부 구성 등 선정치문제 토의를 들고 나왔다.

남베트남측 대표 Lam(람)은 “1) 남베트남은 남베트남 국민에 의해 수립된 합법정부이며, 2) 회의참석 목적은 하노이 당국의 침략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함이며, 3) 본 파리회담은 침략자와 그 희생자간의 양자간의 회담이라”고 규정하고 “남베트남의 회담 참석이 곧 NLF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하였다. 반면에 베트콩측 대표 키엠은 파리회담에 참석할 새로운 “평화내각”을 사이공에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말하자면 끝없는 논쟁만 야기시킬 정치문제 토의를 먼저 들고 나옴으로써 협상에서 시간을 벌고 흥정의 대가를 비싸게 받아내려고 획책한 것이다.

그들은 비무장지대의 복원은 베트남 분열의 영구화라고 트집하면서, 정치·군사문제의 분리를 주장하는 미국측의 주장을 거부하고 계속 사이공의 “평화내각”을 목표로 지연전술을 폈다. 여기에 미국은 새로운 닉슨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월 기본정책 방향을 전쟁의 비미국화 또는 월남화, 전쟁 희생자의 최소화, 전비부담의 경감에 두고, 특히 국내 평화주의자들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일방적인 양보만을 거듭했다. 예컨대 이미 1968년 10월 30일 존슨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인 북폭 중지선언이나 베트콩의 회담참석용인, 군사 정치문제의 동시 토의를 묵인하는 것 등이 그러했으며,

레이드 국방장관은 상호철군, 축전, 남베트남군 강화등 3개 조건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일방적으로 미군이 철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베트남의 입장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때문에 회답이 교착인 듯 하면서도 공산측에 유리하게 진전되어 갔던 것이다.

1969년 5월 8일 제16차 본회담에서 베트남은 10개항의 “베트남 평화일괄안”을 내놓는데, “1) 남베트남내의 모든 정치세력과 해외 교포를 망라한 과도연정의 수립, 2) 국제감시하에 미군과 외국군의 철수, 3) 연정 책임하에 총선의 실시와 정부 수립, 4) 과도기간 동안 쌍방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체제 강요금지, 5) 정치적 보복의 금지 및 정치범 석방, 6) 연정은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와 정당과 단체결성의 자유 보장, 7) 과도정부는 미국과 기타 모든 국가와 평화공존 원칙에 입각한 외교, 경제, 문화관계를 맺는다. 8) 남베트남내의 모든 베트남인 군대에 관한 문제는 베트남인 자신들 사이에서 해결한다. 9) 잠정적인 비무장지대를 복원한다. 10) 과도연정과 함께 총선을 통해 수립된 정부는 북베트남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구하면서 점진적으로 베트남 재통일을 모색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종래 공산측 주장인 5개 항목과 4개 조항을 절충한 형식으로서 특기할 사항은 종래 무조건 미군의 철수가 아닌 국제감시하의 철수와 총선을 관리할 과도연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닉슨 대통령은 취임 4개월만인 1969년 5월 14일 일방적인 미군철수를 배격하고 미국이 무작정 베트남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대량학살”의 길을 트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언명하면서

“베트남 평화 8개항”을 공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1) 정식 합의나 믿을 만한 양해가 이루어지는대로 남베트남군과 베트콩의 토착병력을 제외한 모든 외군의 주력부대는 합의된 단계에 따라 12개월에 걸쳐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한다. 2) 이 12개월 후, 나머지 모든 외군은 지정된 기지들로 집결, 작전을 하지 않는다. 3) 이 나머지 미군과 연합군은 나머지 북베트남군의 북베트남으로의 철수에 따라 완전 철수한다. 4) 양측에서 받아들일 만한 국제감시단을 조직, 철수의 확인과 작전의 주선 및 감시를 맡긴다. 5) 국제감시단이 기능을 발휘하는 대로 남베트남에서 선거를 실시,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포기하기로 다짐하는 남베트남인 누구나 총선참여를 허용받고 선거는 합의된 범위와 국제기구의 감시아래 실시한다. 6) 양측은 포로의 조속한 석방을 주선한다. 7) 모든 당사자들은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관한 1954년의 제네바 협정과 1962년의 라오스에 관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8) 북베트남군은 합의된 일정표에 따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도 철수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제1항의 철군조항은 1966년 10월25일 마닐라에서 발표된 베트남 참전국 정상회담 성명중 제4항에 속한 “북베트남군의 철수 후, 반년간에 모든 동맹제국 군대는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군한다”는 내용을 공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5항은 베트콩의 참정을 인정한 것으로써 특히 이제까지의 선거관리는 사이공 현정부가 관여해야 된다는 주장에서 국제감시기구에 일임하자는 안으로 양보한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닉슨 행정부는 키신저의 등장과 함께 베트남 평

화협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키신저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공산측의 전쟁수행은 “상대방이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승리”라는 인식하에 전개되기 때문에 공산측에 대한 군사적 승리는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50만명에 이르는 미군을 일부 철수시킨다해도 군사적으로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산측에 대해서는 실천을 통해 협상에서 설득이 가능하며, 동시에 베트남전 해결에 소련과 중공을 통한 외교적 연계이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같은 이론은 미국내 진보세력으로부터 긴장완화를 역행시킬 뿐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닉슨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다.

결국, 1969년 6월 8일 닉슨과 티우는 태평양상의 미드웨이섬에서 회담을 갖고 540,000주월미군중 25,000명을 제1차로 8월말까지 철군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닉슨의 “월남전의 비미국화”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양국간에 최대의 난제인 연립정부 대립문제에 관하여, “자유선거가 아닌 연정을 인정치 않는다.”고 합의하여 베트콩의 10개항안을 거부하였다.

한편, 6월10일 베트콩은 정치공세의 하나로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정부(PRG)”를 세웠다고 발표하여 그들의 연정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때문에 미군의 철수 개시 및 이에 따른 자유 월남군의 시급한 보장문제와 더불어 이제는 월남정부의 새로운 형태가 주요문제로 대두된 듯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티우 대통령은 69년 7월11일, 공산주의자도 참여하는 국제감시하의 총선

거 실시를 제의한 “6개항”을 발표하였다.

즉, “1) 베트콩을 포함한 모든 정당 및 정치단체 폭력행위 포기
와 선거결과 수락을 전제조건으로 총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
공명선거실시를 위해 베트콩을 포함한 모든 정당 및 정치단체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를 설치한다. 3) 총선거 실시와 공명선거를
보장할 국제기구를 설립한다. 4) 총선실시일자 및 절차차의를 위
해 공산측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 5) 총선거 후 일체의 정치적 보
복과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6) 월남정부는 총선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공산측은 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로 되어 있다. 특히
제2항에서 베트콩과의 공명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한 것은 당
시 월남 정정의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때문에 베트남전
의 당초의 명분이나 목표와 비교하면 너무도 현격한 변화를 가져
왔으며 당초의 전쟁목표를 외면한 채 중도에서 기형적인 종전처
리로 내달렸다.

그러나 티우의 제안도 공산측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파리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성과에
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 철수는 사정없이 진행되었다.

닉슨 행정부는 동맹국의 이익보다 비등하는 반전여론에 편승한
의회의 압력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이제 더 이상 세계, 지역문제
에 개입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로 대체 되었다. 전쟁
의 성패를 일방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해온 남베트남은 그들의 자
생력의 한계를 점차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협상의 테이블에
곧바로 반영되었다. 이제 4자가 참여하는 파리의 확대 본회담보다
비밀회담이 주축을 이루었다. 특히 1970년 1월 공산 베트남 노동

당 정치국원 레득토가 파리로 온 뒤부터 키신저와의 비밀회담은 휴전협상의 주요한 국면이 되었다. 남베트남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회담은 형식에 치우치고 말았다.

동년 9월 17일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4측 수석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제 84차 파리 본회담에서 베트콩측 응웬티빈은 8개항 일괄타결안을 발표하여 1) 미국은 월남군에 관한 공격을 삼가고 당사자들은 즉시 철수에 따른 안전보장 문제와 포로 석방 문제에 관한 협의에 들어간다. 2) 남베트남내의 무장부대 (정부군 및 베트콩의 문제는 베트남내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한다. 3) 베트남 평화는 티우, 키, 키엠을 제외한 행정부를 사이공에 세움으로서만이 가능하다. 베트남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월남 임시 혁명 정부는 티우, 키, 키엠을 제외한 사이공 행정부 소속 인사들을 포함해서 국내외의 각계정치적, 종교적 집단이나 거기에 속한 인사들과 당장 접촉을 벌일 용의가 있다. 4) 남베트남 국민은 자유로운 총선거에 의해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민의 총의와 평화, 독립, 중립 및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할 정부를 구성한다. 5) 임시 연립 정부는 월남 임시 혁명 정부의 구성 인원과 평화, 독립, 중립 및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열망하는 사이공 행정부의 인사, 기타 이같은 원칙을 주장하는 국내외 정치적, 종교적 세세력에 속하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6) 베트남 재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양지역간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룩한다. 7) 당사자들은 여기에 적합한 조치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그것을 조정할 방법을 함께 결정한다. 8) 당사자들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휴전 실시를 위해 결정된 조치를 실천에 옮긴다.“고 성명했다.

동 8개항은 전년도 5월에 제시한 10개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다만 제1항에서 미군과 연합군의 철수 시기를 못박아 요구한 점과 제3항에서 사이공 행정부의 특정 인물을 대화상대자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합법적으로 수립된 남베트남 정부의 전복과 동시에 사이공 정부와 남베트남내의 반전평화세력간의 이간을 기도한 것이 특색이다.

이에 대해 닉슨 대통령은 10월 8일 5개항의 “인도차이나반도 평화를 위한 일괄안”을 제창하였다. 즉, “1)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3개국에 걸쳐 현위치에서 국제감시하의 휴전 및 양측 군사력의 현수준 동결, 2) 현 파리회담을 확대하여 인지반도 전역 문제를 해결키 위한 제네바 회담 형식의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 3) 1971년 봄까지 미군 260,000여명의 철수와 미군 전면철수를 위한 협상 용의, 4) 베트남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정치협상, 5) 양측에 억류중인 전쟁 포로의 무조건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이는 베트남의 정치적 문제에 관한 베트콩측 8개항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로의 무조건 석방을 처음으로 제의한 평화안이었다.

1970년 12월 11일 제94차 본회담에서 공산측은 “3개항 휴전안”을 새로 제안하는데 베트콩과 외국군과의 휴전, 베트콩과 사이공 정부군과의 휴전으로 나누어 미군과 연합군이 1971년 6월 30일까지 철수할 것을 선언하면 베트콩과 이들 외국군과 즉시 휴전이 준수될 것이며 티우, 키, 키엠을 제외한 사이공 정부가 “선거관리 내각”구성에 동의하는 즉시 베트콩과 자유 베트남과의 휴전이 준수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미군과 연합

군만이라도 빨리 철수시키려는 전술의 일환이었다.

한편 키신저와 레득토간의 비밀회담은 1971년 5월부터 미국의 새로운 비밀 제의와 함께 활기를 찾는다. 이 비밀 제의는 미국과 월맹간 협정 체결 6개월 안에 미군의 완전 철수와 총선거 실시 1개월 전에 티우정권의 사임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로 부터 양측의 입장은 접근하기 시작했고 1971년 7월 1일 제119차 본회담에서 베트콩측은 새로운 “7개항 평화안”을 제안하였다. 즉, “1) 미국철수시한이 설정되면 양측이 억류중인 모든 포로는 석방될 수 있다. 2) 국민총화의 3과(좌, 우, 중립)연립정부 수립, 3) 베트남의 베트남군 문제는 베트남인 스스로 해결한다. 4) 남북 베트남의 단계적 통일, 5) 베트남은 평화 및 중립주의 외교정책 추구, 6) 남북 베트남에서 발생한 손실 및 책임을 미국이 전적으로 진다. 7)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의 국제적 보장책을 마련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 9월의 8개 항목과 비교할 때 미군철수와 포로석방의 동시 실시 조항을 제외하면 새로운 것이 없다.

이 제안은 미군의 철수가 기정 코오스로 드러나고 포로문제만 해결되면 전면철군의 명분을 찾으려고 고심하는 미국의 약점을 이용하여 미군이 거침없이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책동이었다. 공산측은 협정을 통해 미군의 완전 철수를 달성하고 남북 베트남에 우선 연립정권을 세운 다음 서서히 공산 적화통일을 꾀하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동 7개항 평화안에 대한 미국측 반응은 동년 7월 29일 제123차 본회담에서 미측 대표 부르스에 의해 확인되었다.

즉, “5개항 휴전안”으로 발표된 미측 답변은 “1) 국제감시위원회단

및 쌍방 대표에 의한 효율적인 감시, 2) 휴전을 병력 증강에 이용하는 것의 금지, 3) 모든 전투와 폭력행위 중지, 4)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지 전역에 걸친 휴전 실시, 5) 쌍방의 종전을 위한 전반적 조치의 일환으로서의 휴전” 등 5원칙에 입각한 휴전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공산측에 의해 다시 거부당했다. 어디까지나 공산 베트남 측은 진행중인 미군철수를 더욱 재촉하면서 오로지 티우의 실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나왔던 것이다.

1972년 3월 말에 들자 공산군은 새로운 대남 대공세를 감행하고 남베트남군은 사방에서 패주를 거듭하고 있었다. 군사적 입장이 유리해질수록 공산측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공산 베트남측의 공세는 강화되었다.

곤경에 빠진 닉슨 대통령은 5월 8일을 기해 베트남전 수행의 마지막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닉슨은 북베트남 전체 항구의 기뢰 부설, 북베트남에서 남부로 수송되는 모든 육상 보급물자와 보급로의 분쇄를 명령하였다. 동시에 북베트남이 미군 포로의 전면 석방과 국제감사하의 휴전을 성립시키면 북부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휴전 성립후 4개월 이내에 전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 제의는 5월 22일-30일까지 닉슨이 북베트남에 대한 최대 원조국인 소련 방문을 앞두고 취한 조치였다. 소련과 중공 등의 반응은 예상외로 유연하게 나타났다. 소련은 미국의 조치를 “여타 제3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기”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행위는 베트남전 종식 열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다소 호소조로 나왔다.

중공도 미국의 행위가 “중공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될 경우에 한하여 항의할 것이다”라는 묘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닉슨의 연설문 전문을 인민일보에 게재하기까지 하였다. 키신저는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 중·소의 반응은 “월맹정치국의 고집센 미치광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양대 동맹국에 의한 냉정한 대접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게 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이 조치는 미국의 대소, 대중공 관계를 단절시키며 미국의 대외정책 구상을 송두리째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이 조치를 통해 미국이 대소, 대중공 데탕트전략에 대한 자신을 얻은 것으로 슬회했다.

사실 당시 소련이 대미 보복 조치라든지 닉슨의 방소를 유산시키려 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동년 2월 닉슨의 중공방문으로 미·중공 관계 개선의 기초가 마련된 마당에 소련은 대미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미·중·소 3극 관계에서 고립될 것을 우려했으며 SALT-1 협상, 베르린 통행문제, 유럽안보회의 개최 문제, 미·소 무역확대, 우주 공동개발 등 산적한 쌍무간 문제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위 “당근과 채찍”의 양면작전을 이용하여 자신을 얻은 미국은 대중·소 공존체제 속에서 이들에게 압력을 넣어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려는 키신저의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중·소를 통한 압력 작전은 주효하여 1972년 7월부터 하노이에서는 주요 정치국회의가 소집되고 키신저와 레득토간의 비밀 회담이 속개되었으며 협상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협상조건을 놓고 사이공 정부와의 파탄 만큼은 회피하려 했기

때문에 티우정부가 강경하게 반대할 때는 일단 후퇴, 11월의 미대통령 선거 이후를 협정의 타결 시점으로 잡고 있었다. 한편 공산베트남측은 미국의 선거 등 대내문제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키신저는 그의 회고록에서 “선거가 협상을 가속화 하는 데 이용되었을뿐, 협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베트콩은 1972년 9월 11일 종전의 태도를 완화한 “거국연정안”의 2개항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측 주장에 한층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동 “2개항 평화안”의 골자는 “(1) 미국은 베트남 인민의 진정한 독립과 효과적인 자결권을 인정하고 베트남에서의 침략행위, 월맹 폭격 및 해안 봉쇄를 즉각 중지할 것, 미국은 월남화 정책과 남베트남에서의 군사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주월 미군, 군사 고문단, 기술 요원 및 군사기지의 철거와 티우정권에 대한 원조를 중지할 것, 베트남 문제의 대내적 해결은 현재 남베트남에 2개의 행정부와 2개의 군대 및 제3의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현실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거족적인 단결을 위해 이 모든 세력간 평등, 상호존중, 상호비제거(相互非除去)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과 인민들에 대한 민주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이같은 목적을 위해 과도기간의 업무 수행과 진정한 자유, 민주 총선거 실시를 위해 이 3개 정치세력의 임시연정이 수립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 제안은 근본적으로는 종래의 주장과 다를 바 없으나 사이공정권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인정한 “3파연정”을 역설한 것이 특색이다. 이제까지 공산측은 티우정권은 미국의 괴뢰정권으로서 방대

한 억압기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존속하는 한 선거는 무의미 하기 때문에 티우의 해임과 그의 재입후보마저 봉쇄하는 항구적인 제거를 주장해 왔다.

결국 동 제안도 티우정권에 대한 지원의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자연인(自然人) 티우의 존재만이 베트남 문제 해결의 최대 장애물로 간주하고 가능한 대통령 선거전에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심분 이용하여 티우의 제거를 꾀한 것이다.

1972년 10월 들어 미·월맹간 비밀협상은 큰 진전이 이루어져 키신저와 레득토간의 접촉은 더욱 잦아졌으며, 양측이 협상진전을 가로 막아온 티우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초점으로 대두되었다.

10월 13일, 프랑스 스와르지는 양측의 비밀협상이 주요원칙에 사실상의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적인 몇몇 난제만 남아 휴전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팜반동 월맹수상도 르몽드의 장 라끄뛰르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했다.

그는 “사이공 정부와 공산주의자 및 중립적인 제3세력으로 구성된 거국일치연정으로 하여금 남베트남 정부를 대체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외에 다른 길은 오직 전쟁뿐이다”라고 말했다.

키신저와 그의 보좌관 알렉산더 헤이그 장군은 닉슨의 친서를 들고 사이공을 방문, 마치 기정사실과 같은 협상초안을 제시하면서 티우에 대해 베트남에서의 현상 휴전과 공산주의자들과의 3파 연정수립 안을 수락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티우 대통령은 10월 23일 3파 연정안을 반대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임으로써 그간의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치 않았다.

드디어 1972년 10월 26일 북베트남은 미·월맹 비밀협상 결과 합의한 9개항을 고의로 폭로하고 미국이 서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제 협상은 미국측이 [티우]정부를 설득시키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닉슨의 재선이 확정된 후 11월 9일의 제116차 본회의에서 공산측은 이미 하노이 당국이 폭로한 휴전협정안을 지체없이 조인하자고 서둘렀다.

다음날 티우는 헤이그에게 평화협정 수락조건으로, “(1) 자유 월남에 남파된 월맹군의 전면철수, (2) 3파연정은 국제감시하의 자유선거 실시를 위한 총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만 할 것, (3)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설정된 북위 17도 휴전선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11월 20일부터 키신저와 레득토는 5일 동안에 걸쳐 6차의 비밀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티우 정부의 요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12월 13일 파리 협상도 일단 결렬되었다. 왜냐하면 3파 연립 정부안과 남베트남에 남파된 월맹군의 상응 철수보장이 쟁점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티우 정부는 휴전조건으로 (1) 월맹군의 철수, (2) DMZ의 존중 및 존속, (3) 민족화합위원회에서의 중립과 제거를 주장해 왔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12월 18일부터 12월 30일 까지 베트남 전사상 최대의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공산측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타협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강경책이었다. 결국 북베트남은 선단폭(先斷爆), 후협상을 내세우면서 키신저와의 비밀회담 재개를 요구하여 양측은 73년 1월

8일 접촉을 재개하였다. 키신저는 평화협상의 99%가 합의되고 1%가 남았다고 선언했다.

1월 16일, 헤이그는 다시 티우의 설득에 나섰으며, 미·월맹간 비밀회담에서 마련한 새로운 협정안을 제시하여 원칙적인 수락을 받아내고 말았다.

닉슨은 그의 친서에서 휴전 후, 월맹의 공격시, 미국은 즉시 강력히 대항할 것을 공약했으며 키신저는 레득토가 비밀회담에서 자기에게 약속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랍외상을 설득했다. 키신저는 월맹측의 무기반입의 우려를 나타낸 랍외상에게 그 문제도 중공과 소련이 더 이상의 공격용 무기를 월맹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게 했다고 설득했다.

드디어, 1973년 1월23일 닉슨 대통령과 하노이 당국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휴전 협정이 1월 27일 파리회담의 당사자들간에 공식으로 조인되고 동시에 발효된다”고 발표함으로써 4년 8개월동안의 설전은 막을 내렸다.

8장 23조로 된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휴전협정)”이 조인되자마자 자유 월남에서는 조심스러운 우려 속에 부정적인 환영을 보인 반면, 북부 공산 베트남측은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냈다고 보도되었다. 이와 같이 동 휴전협정은 공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먼저 협정의 제3조와 18조에 언급된 휴전방식과 휴전감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현위치휴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은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며 현위치 휴전이 실시될 경우 전선없는 마치 표범 반점 같은 얼룩진 휴전선이 무수

히 나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휴전이 불가능하며, 마치 미군이 빠져나가는 동안만 잠시 휴전해 달라는 내용과 다름없다. 그리고 휴전감시 문제도 비무장지대 외에 무수한 표범무늬 휴전선을 보탠 격이 됨으로써 협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는커녕 다 조사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다.

두번째로, 제6조에 규정된 철군조항을 보면 2개월이란 매우 짧은 기일에 미군과 외국군이 완전 철수를 하도록 한 반면, 월맹에 대한 상응한 철군보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14만 5천명에 달하는 남파된 월맹군은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다. 이는 동 협정의 가장 큰 맹점이며 자유월남이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대목이다. 과거 불란서군이 협약에 따라 인도지나를 빠져나갈 때 22개월의 기간이 걸린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셋째로, 제12조에 규정된 남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문제를 보아도 비록 명칭이 “민족화해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나 종래 공산측이 주장해온 3파연정안이나 크게 다름이 없는 바, 정치적으로 자유 월남정부를 공산측에 넘겨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Ⅳ장 결 론

첫째로, 베트남 평화협상은 시종일관 “평화를 위해서”라기 보다 “미군철수의 보장”에 역점을 둔 인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자유월남은 아주 패배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출발을 협상의 기저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협상의 모색 단계에서부터 파리 에 비회담에 이르기까지 자유월남을 제외시키고 월맹과 직접대좌하는데 이는 월맹과 사이공 정부가 마땅히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역이 되어야만 하는 기본원칙을 파괴한 것이며 자유월남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협상과정 전체가 “미국 대 공산베트남”, “자유월남 대 베트남”식의 대화스타일이 정착되어 공산측의 술수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호국가의 호칭도 없이 아측, 타측으로 부르자고 한 자체는 이를 더욱 실감나게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스스로 자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국 민족의 생존을 전적으로 외세(미국)에 의존하다시피한 자유월남이 협상의 테이블에서도 합법적인 지위가 격하당하는 현실을 볼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 하겠다.

시종일관 이 협상은 공산측에 의해 미국이 끌려다니고 다시 자유월남은 미국에 의해 끌려 다니는 형국이 연출되었다.

둘째로, 공산측은 협상자체를 총칼을 들지 않은 또다른 전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협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루하고 까다로우며 터무니 없는 트집으로 논쟁만 거듭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전의를 저상시키고 자체의 군사력 보강에 이용했다. 때문에

그들이 협상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다른 술수가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전황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 자체를 교착으로 몰고 가거나 결렬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평화협상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셋째로, 적어도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자체 전열 정비를 단단히 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론의 분열은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된다. 베트남 평화협상의 전과정을 통해 공산측이 일면전쟁, 일면협상의 전략을 채택하고 협상의 시기로 잡는데 있어서 1968년 미대통령 선거 시기를 택하고 미국내 반전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때를 잡았던 것이나, 티우정부 와해를 목적으로, 한 때 티우, 키, 키엠 등 티우행정부의 특정 반공세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공산측이 1971년 10월의 자유월남 총선거를 앞두고 티우, 키, 민 등 3파전으로 압축되어 가자 티우와 키를 분열시키기 위해 종래 협상 거부인물 명단에서 키와 키엠을 제외시킨 것 등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내부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들의 기본 전술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빈틈 없이 해 둔 국제협정이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간단히 위반하는 것이 정상일 진대, 적어도 문서상으로나마 빈틈없이 철저하게 해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리 평화협정은 너무 큰 허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4만 5천명에 이르는 남파된 월맹군의 상응철수의 보장없이 미군만 완전 철수하게 한 점이라든지, 사실상 휴전선을 그을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전선이 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게릴라 전장에서 “현위치휴전”

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공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며 미국의 최대 과오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키신저의 회고에서 “공산 베트남은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강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바와 같이 실전이던 협상이던 간에 공산주의자에게 유일하게 통하는 처방은 오로지 자주적인 “힘”일 따름이다. 대내적으로 민주적 자율과 도덕성에 바탕을 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역량의 축적과, 자주적이고 유연한 외교력, 기강이 확고한 국방역량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노정에서 불가피한 대화와 협상은 결코 경솔히 임해서는 안된다. 베트남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목표가 포기되기까지이다.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日本の 核政策
- 93-27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統一과北韓 社會文化(下)

統一文化시리즈 96-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센터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4725, FAX: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